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2000-000052-0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검증 보고서

2017. 12. 2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본 검증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책임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정우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지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주지예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박지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박성국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이혜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안서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김태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김혜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과정

목 차

I. 검증 목적과 내용 1

1. 검증 배경과 목적 1
2.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검증의 내용 4
3. 검증의 원칙 9
4.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12
5. 검증보고서의 구성 17

II.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9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 19
 -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19
 - 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20
2. 공론조사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22

Ⅲ. 법·제도 영역 검증 29

1. 법·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29
2. 법·제도 영역 검증의 내용과 범위	33
3. 법·제도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35
가. 검증 방법 및 절차	35
나. 평가 기준	36
4. 법·제도 영역검증 결과	38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38
1) 공론화위원회 성격과 설립 근거	38
가) 설립요건	38
나)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vs. 행정위원회	40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역할 관계	44
2)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거버넌스	45
가) 공론화위원회 선임	45
나) 자문위원단 구성과 활용	57
다) 공론화지원단 구성과 조직	59
라) 이해관계자 소통 협의회	62
마) 검증위원회	63
나. 공론화위원회 운영	64
1)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	64
가) 투명성	64
나) 중립성	65

2) 운영의 효율성	65
다. 공론조사 제도 관련	66
1) 공론조사 절차와 운영기간	66
2) 공론조사 제도 설계	69
5. 소결	70

IV. 조사 영역 검증 73

1. 조사 부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73
2. 조사 영역 검증의 내용과 범위	75
3. 조사 영역 검증 방법 및 결과	78
4. 소결 및 시사점	92

V. 숙의 영역 검증 95

1. 숙의 영역 검증의 범위	95
2. 숙의 영역 검증	97
가. 사전자료집 작성 및 배포 및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97

1) 사전자료집 전달 지연	97
2)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양측 전문가 의견 불일치	98
3) 전문가 자격 요건의 불균형과 감정적 호소에 근거한 발표	99
나. 분임토의	102
1) 의견형성 왜곡현상	102
2) 의견 교환의 균질성	105
3) 분임토의 주제의 적절성	116
4) 기타 고려 사항	118
다. 숙의효과	119
1) 공론조사 참여 이후 의견변화	119
2) 의견 변화의 숙의효과 영향 여부	122
3) 숙의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났는지 여부	126
3. 소결	131

VI. 소통 영역 검증 135

1. 소통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135
2. 소통 영역 검증의 내용 및 범위	138
3. 소통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140
4. 소통 영역 검증 결과	143
가. 언론: 보도자료와 보도	143

나. 직접적인 대(對)국민 소통: 홈페이지와 제언방	147
다. 시민참여단과의 소통	153
라. 소통협의회: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의 소통	159
5. 소결	166

VII. 결론 169

참고문헌	176
------------	-----

부록 1	177
------------	-----

부록 2	311
------------	-----

표 목차

〈표 1-1〉 검증위원회의 구성	5
〈표 1-2〉 검증의 내용	7
〈표 1-3〉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13
〈표 1-4〉 검증위원회 검증자료	14
〈표 2-1〉 공론화위원회 명단	20
〈표 2-2〉 공론조사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절차 구성	23
〈표 3-1〉 국무총리훈령 제690호(2017.7.17.)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구성	30
〈표 3-2〉 공론화위원회 주요활동 일정	32
〈표 3-3〉 법·제도 영역 검증내용	33
〈표 3-4〉 법·제도 분야 체크리스트	36
〈표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39
〈표 3-6〉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차이점	40
〈표 3-7〉 국무총리훈령 제690호(2017.7.17.)	43
〈표 3-8〉 인문사회분야 추천위원	47
〈표 3-9〉 과학기술분야 추천위원	48
〈표 3-10〉 갈등관리분야 추천위원	50
〈표 3-11〉 조사통계분야 추천위원	52
〈표 3-12〉 공론화 위원 전문분야와 경력 정보	55
〈표 3-13〉 자문위원 위촉 현황	57
〈표 3-14〉 공론화지원단 구성	61

〈표 3-15〉 소통협의회 구성 현황	62
〈표 3-16〉 독일, 일본과 한국(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방식 차이점	68
〈표 4-1〉 모집단 및 표본의 지역 분포	82
〈표 4-2〉 모집단 및 표본의 성별 분포	83
〈표 4-3〉 모집단 및 표본의 연령 분포	83
〈표 4-4〉 표본의 직업 분포	84
〈표 4-5〉 표본의 정당지지도 분포	85
〈표 4-6〉 2차표본의 소득 분포	86
〈표 4-7〉 2차표의 종교 분포	86
〈표 4-8〉 1차조사와 3차조사의 직업 비교	86
〈표 4-9〉 1차조사 vs 4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87
〈표 4-10〉 1차조사 vs 3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87
〈표 4-11〉 3차조사 vs 4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87
〈표 4-12〉 1차조사 vs 4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89
〈표 4-13〉 1차조사 vs 3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89
〈표 4-14〉 3차조사 vs 4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90
〈표 5-1〉 양측 입장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자 현황	101
〈표 5-2〉 분임토의 의견 왜곡 정도 검증(단위: 개 조)	104
〈표 5-3〉 발언자 관계도(edge list) 예시	106
〈표 5-4〉 조별 토론 사회자의 중앙성과 토론 참여자의 중앙성 평균	108
〈표 5-5〉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 발언 분량(43개 조)	109
〈표 5-6〉 조별 사회자 발언 분량(43개 조)	110
〈표 5-7〉 토론 참여자 간 발언 분량 차이(43개 분임조)	113
〈표 5-8〉 43개 조에 대한 모든 텍스트 분석 결과	114

〈표 5-9〉 사안별 의견 분포와 변화 유의미성 검증	121
〈표 5-10〉 사안별 의견 변화 비율	122
〈표 5-11〉 2차-4차 지식설문 전체 평균 정답 개수	123
〈표 5-12〉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 변화에 미친 지식수준 변화 영향	125
〈표 5-13〉 원전 정책 대한 의견 변화에 미친 지식수준 변화 영향	125
〈표 5-14〉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의견 평균	127
〈표 5-15〉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원전 정책 의견 평균	128
〈표 5-16〉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지식 평균	130
〈표 6-1〉 소통분과 회의와 논의 사항(출처: 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	136
〈표 6-2〉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144
〈표 6-3〉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구성 사항	149
〈표 6-4〉 e-러닝 동영상 Q&A 게시판 질의와 응답	156
〈표 6-5〉 참여단의 질문과 위원회 답변 (덧글 26번)	157
〈표 6-6〉 소통협의회 개최	159
〈표 6-7〉 회차별 참석 사항	160
〈표 6-8〉 회차별 소통협의회 주요 내용	163

그림 목차

〈그림 5-1〉 34조 발언자 네트워크	107
〈그림 5-2〉 41조 발언자 네트워크	113
〈그림 5-3〉 2세션과 3세션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주요 단어들	117
〈그림 6-1〉 소통의 주체들과 소통의 흐름	138
〈그림 6-2〉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시기 및 언론보도건수 비교	146
〈그림 6-3〉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148
〈그림 6-4〉 제언방 게시물의 날짜별 추이	150

부록 1

〈표 1〉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증줄이하)	177
〈표 2〉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177
〈표 3〉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178
〈표 4〉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178
〈표 5〉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178
〈표 6〉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179
〈표 7〉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179
〈표 8〉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179
〈표 9〉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180
〈표 10〉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180
〈표 11〉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180
〈표 12〉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181
〈표 13〉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181
〈표 14〉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181
〈표 15〉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182
〈표 16〉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182
〈표 17〉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182
〈표 18〉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183
〈표 19〉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183
〈표 20〉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183

〈표 21〉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184
〈표 22〉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184
〈표 23〉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184
〈표 24〉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185
〈표 25〉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185
〈표 26〉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185
〈표 27〉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186
〈표 28〉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186
〈표 29〉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186
〈표 30〉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187
〈표 31〉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187
〈표 32〉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187
〈표 33〉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188
〈표 34〉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188
〈표 3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188
〈표 3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189
〈표 3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189
〈표 3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189
〈표 3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190
〈표 4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190
〈표 4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190
〈표 4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191
〈표 4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191
〈표 4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191

〈표 4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192
〈표 4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192
〈표 4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192
〈표 4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193
〈표 4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193
〈표 5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193
〈표 5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194
〈표 5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194
〈표 5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194
〈표 5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195
〈표 5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195
〈표 5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195
〈표 5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196
〈표 5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196
〈표 59〉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196
〈표 60〉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197
〈표 61〉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197
〈표 62〉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197
〈표 63〉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198
〈표 64〉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198
〈표 65〉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198
〈표 66〉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199
〈표 67〉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199
〈표 68〉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199

〈표 69〉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200
〈표 70〉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00
〈표 71〉 1차조사 vs 3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200
〈표 72〉 1차조사 vs 3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201
〈표 73〉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201
〈표 74〉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201
〈표 75〉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202
〈표 76〉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202
〈표 77〉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202
〈표 78〉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203
〈표 79〉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203
〈표 80〉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203
〈표 81〉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04
〈표 82〉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204
〈표 83〉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204
〈표 84〉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205
〈표 85〉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205
〈표 86〉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205
〈표 87〉 1차조사 vs 3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206
〈표 88〉 1차조사 vs 3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206
〈표 89〉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206
〈표 90〉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207
〈표 91〉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207
〈표 92〉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207

〈표 93〉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208
〈표 94〉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08
〈표 95〉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208
〈표 96〉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209
〈표 97〉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209
〈표 98〉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209
〈표 99〉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210
〈표 100〉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10
〈표 10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210
〈표 10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211
〈표 10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211
〈표 10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211
〈표 105〉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212
〈표 106〉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212
〈표 107〉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212
〈표 108〉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213
〈표 109〉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213
〈표 110〉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213
〈표 11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214
〈표 11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214
〈표 11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214
〈표 11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215
〈표 115〉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215
〈표 116〉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215

〈표 117〉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216
〈표 118〉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216
〈표 119〉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216
〈표 120〉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217
〈표 12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217
〈표 12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217
〈표 12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218
〈표 12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18
〈표 125〉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218
〈표 126〉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219
〈표 127〉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219
〈표 128〉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219
〈표 129〉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220
〈표 130〉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220
〈표 131〉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220
〈표 132〉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221
〈표 133〉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221
〈표 134〉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221
〈표 135〉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222
〈표 136〉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22
〈표 137〉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222
〈표 138〉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223
〈표 139〉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223
〈표 140〉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223

〈표 141〉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224
〈표 142〉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224
〈표 143〉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224
〈표 144〉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225
〈표 145〉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225
〈표 146〉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225
〈표 147〉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26
〈표 148〉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226
〈표 149〉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226
〈표 150〉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227
〈표 151〉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227
〈표 152〉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227
〈표 153〉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228
〈표 154〉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228
〈표 155〉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228
〈표 156〉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229
〈표 157〉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229
〈표 158〉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229
〈표 159〉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230
〈표 160〉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30
〈표 161〉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230
〈표 162〉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231
〈표 163〉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231
〈표 164〉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231

〈표 165〉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232
〈표 166〉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32
〈표 16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232
〈표 16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233
〈표 16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233
〈표 17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233
〈표 17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234
〈표 17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234
〈표 17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234
〈표 17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235
〈표 17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235
〈표 17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235
〈표 17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236
〈표 17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236
〈표 17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236
〈표 18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237
〈표 18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237
〈표 18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237
〈표 18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238
〈표 18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238
〈표 18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238
〈표 18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239
〈표 18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239
〈표 18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239

〈표 18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240
〈표 19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240
〈표 191〉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240
〈표 192〉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241
〈표 193〉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241
〈표 194〉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동직)	241
〈표 195〉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242
〈표 196〉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242
〈표 197〉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242
〈표 198〉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243
〈표 199〉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243
〈표 200〉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고졸)	244
〈표 201〉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244
〈표 202〉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45
〈표 203〉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남성)	245
〈표 204〉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여성)	246
〈표 205〉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246
〈표 206〉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247
〈표 207〉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247
〈표 208〉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248
〈표 209〉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248
〈표 210〉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249
〈표 211〉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249
〈표 212〉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250

〈표 213〉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50
〈표 214〉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대)	251
〈표 215〉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대)	251
〈표 216〉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대)	252
〈표 217〉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대)	252
〈표 218〉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253
〈표 219〉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유선)	253
〈표 220〉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선)	254
〈표 221〉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254
〈표 222〉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진보)	255
〈표 223〉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255
〈표 224〉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보수)	256
〈표 225〉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256
〈표 226〉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57
〈표 227〉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257
〈표 228〉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불교)	258
〈표 229〉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258
〈표 230〉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	259
〈표 231〉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교)	259
〈표 232〉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60
〈표 23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서울)	260
〈표 23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부산)	261
〈표 23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구)	261
〈표 23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인천)	262

〈표 23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광주)	262
〈표 23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전)	263
〈표 23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울산)	263
〈표 24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기)	264
〈표 24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강원)	264
〈표 24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북)	265
〈표 24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265
〈표 24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북)	266
〈표 24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남)	266
〈표 24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북)	267
〈표 24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남)	267
〈표 24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제주)	268
〈표 24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268
〈표 25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269
〈표 25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269
〈표 25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270
〈표 25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270
〈표 25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271
〈표 25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271
〈표 25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72
〈표 257〉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272
〈표 258〉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273
〈표 259〉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273
〈표 260〉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변화(생산기능노무직)	274

〈표 261〉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변화(사무관리전문직)	274
〈표 262〉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주부)	275
〈표 263〉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학생)	275
〈표 264〉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276
〈표 265〉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276
〈표 266〉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고졸)	277
〈표 267〉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277
〈표 268〉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78
〈표 269〉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남성)	278
〈표 270〉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여성)	279
〈표 271〉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279
〈표 272〉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280
〈표 273〉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280
〈표 274〉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281
〈표 275〉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281
〈표 276〉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282
〈표 277〉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282
〈표 278〉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283
〈표 279〉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83
〈표 280〉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대)	284
〈표 281〉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대)	284
〈표 282〉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대)	285
〈표 283〉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대)	285
〈표 284〉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286

〈표 285〉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유선)	286
〈표 286〉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선)	287
〈표 287〉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287
〈표 288〉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진보)	288
〈표 289〉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288
〈표 290〉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보수)	289
〈표 291〉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289
〈표 292〉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90
〈표 293〉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290
〈표 294〉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불교)	291
〈표 295〉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291
〈표 296〉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	292
〈표 297〉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교)	292
〈표 298〉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293
〈표 29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서울)	293
〈표 30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부산)	294
〈표 30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구)	294
〈표 30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인천)	295
〈표 30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광주)	295
〈표 30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전)	296
〈표 30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울산)	296
〈표 30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기)	297
〈표 30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강원)	297
〈표 30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북)	298

〈표 30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298
〈표 31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북)	299
〈표 31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남)	299
〈표 31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북)	300
〈표 31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남)	300
〈표 31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제주)	301
〈표 31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302
〈표 31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302
〈표 31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303
〈표 31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303
〈표 31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304
〈표 32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304
〈표 32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305
〈표 32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305
〈표 323〉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306
〈표 324〉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306
〈표 325〉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307
〈표 326〉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307
〈표 327〉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308
〈표 328〉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주부)	308
〈표 329〉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학생)	309
〈표 330〉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 (무직퇴직은퇴)	309

부록 2

〈그림 1〉 1조 발언 네트워크	311
〈그림 2〉 2조 발언 네트워크	311
〈그림 3〉 3조 발언 네트워크	311
〈그림 4〉 4조 발언 네트워크	311
〈그림 5〉 5조 발언 네트워크	312
〈그림 6〉 6조 발언 네트워크	312
〈그림 7〉 7조 발언 네트워크	312
〈그림 8〉 8조 발언 네트워크	312
〈그림 9〉 9조 발언 네트워크	313
〈그림 10〉 10조 발언 네트워크	313
〈그림 11〉 11조 발언 네트워크	313
〈그림 12〉 12조 발언 네트워크	313
〈그림 13〉 13조 발언 네트워크	314
〈그림 14〉 14조 발언 네트워크	314
〈그림 15〉 15조 발언 네트워크	314
〈그림 16〉 16조 발언 네트워크	314
〈그림 17〉 17조 발언 네트워크	315
〈그림 18〉 18조 발언 네트워크	315
〈그림 19〉 19조 발언 네트워크	315
〈그림 20〉 20조 발언 네트워크	315
〈그림 21〉 21조 발언 네트워크	316
〈그림 22〉 22조 발언 네트워크	316

〈그림 23〉 23조 발언 네트워크	316
〈그림 24〉 24조 발언 네트워크	316
〈그림 25〉 25조 발언 네트워크	317
〈그림 26〉 26조 발언 네트워크	317
〈그림 27〉 27조 발언 네트워크	317
〈그림 28〉 28조 발언 네트워크	317
〈그림 29〉 29조 발언 네트워크	318
〈그림 30〉 30조 발언 네트워크	318
〈그림 31〉 31조 발언 네트워크	318
〈그림 32〉 32조 발언 네트워크	318
〈그림 33〉 33조 발언 네트워크	319
〈그림 34〉 34조 발언 네트워크	319
〈그림 35〉 36조 발언 네트워크	319
〈그림 36〉 38조 발언 네트워크	319
〈그림 37〉 39조 발언 네트워크	320
〈그림 38〉 40조 발언 네트워크	320
〈그림 39〉 41조 발언 네트워크	320
〈그림 40〉 44조 발언 네트워크	320
〈그림 41〉 45조 발언 네트워크	321
〈그림 42〉 46조 발언 네트워크	321
〈그림 43〉 47조 발언 네트워크	321

I. 검증 목적과 내용

1. 검증 배경과 목적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에 정책권고안을 담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7월 24일부터 시작한 약 3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제시한 정책권고는 세 가지였다. 첫째,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둘째,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시민대표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 등이다.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재개를 결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정책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공표하였다. 대통령의 권고 수용 및 정책 방향 결정은 단순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대통령의 권고 수용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달성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2016년 광장에서의 촛불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가 풀지 못하고 있던 이해와 가치를 달리는 집단 간 갈등을 집합적 수준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한국식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높이 평가할만한 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재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던 양측이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와 대통령의 결정을 따르기로 천명했다는 것과 언론과 국민들도 이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최근 몇 년 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주지 못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공론화위원회가 단 3개월 만에 구현하고 이를 국민이 수용하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즉 공론화위원회와 대통령의 수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수용도로 보았을 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기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성공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내용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향해 보내는 높은 지지는 공론조사의 결과가 공사 재개와 중단을 주장한 양측 모두가 수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 갈등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현재 국민의 높은 수용성은 공론조사 자체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적절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재 국민이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낮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킨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 참여와 열띤 토론을 거친 숙의민주주의의 과정 자체가 높이 평가받은 것일 수도 있다.

사실 학계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정당성과 중립성, 그리고 공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엄연히 존재한다. 최종 결정을 내린 471명의 대표성에 의심을 거두지 않는 시각도 여전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사 중단과 재개의 입장을 조율해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도록 돕기에는 속의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논란과 비판, 그리고 의심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제도적 정당성, 조사과정의 적절성과 조사결과의 대표성, 속의의 중립성과 효과성, 공론조사 이해당사자들 간 소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않는 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 대통령의 권고 수용, 공사 재개 결정, 국민의 대통령 결정 지지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의 높은 수용성도 정치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잦아들 수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대통령의 결정이 역사 앞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길이다. 따라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검증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만큼 중요한 공론조사를 통한 속의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 현재의 정치적 성공에 매몰되거나 도취하지 않고 냉철한 눈으로 전(全)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은 공론조사의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기도 하다.

2.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검증의 내용

공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집중적인 공론화과정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보를 얻게 유도한 후 유권자들의 의견을 측정한다. 공론조사는 입장과 이해를 달리 하는 사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informed citizens)’의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여론(quality opinion)을 측정함으로써 위정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공론조사는 체계적인 숙의 과정 설계와 실행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 추이를 관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대표성 문제 등 정보가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과학적 여론조사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민 의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형조사는 대규모 표본으로부터 시민참여단을 과학적으로 추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로 교육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선택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장점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단 대표성 유지와 숙의과정의 공정한 관리가 시민참여형조사의 핵심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형조사”를 바탕으로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시민참여형조사”의 법적·제도적 정당성, 조사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및 내실성, 소통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4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프로그램과 보강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숙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행하였으며, 이해당사자인 건설 중단과 재개 측과 일반 국민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전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TV토론회 및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공론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조사”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노력에 이르기까지 공론화 전과정을 검증하였다. 검증위원회의 대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법·제도 분과 책임자는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교수, 조사 분과 책임자는 고려대학교 박민규 교수, 숙의 분과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소통 분과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박원호 교수가 각각 맡았으며, 공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5인의 검증위원들은 2~3명의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 1-1〉 검증위원회의 구성

분야	위원	소속
총괄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
법·제도	박형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평가연구소
조사	박민규 교수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숙의	한규섭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소통	박원호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직체계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검증위원회 내에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등 네 개의 분과를 두어 공론화위원회의 네 개 분과를 각각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설계하였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와 중단을 두고 수행된 공론조사 과정과 결과는 일반 국민이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두 가지 전문성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첫 번째 전문성은 원자력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전문성은 대표성 있는 조사에 대한 것이다. 두 가지 전문성 모두 단기간의 학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주장을 제한적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전문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다를 것이다. 원자력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식은 전문성의 벽이 더 높은 반면, 조사에 대한 지식은 일반 국민들도 평소에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게 느낄 것이며, 실제로 이에 대해 원자력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를 결정하는 숙의 과정은 원자력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양측 전문가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지속가능 발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단이 분임토의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없기는 검증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이며, 검증위원회도 양측이 제시하는 설명의 진위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검증위원들의 검증하는 것은 <표 1-2>에 제시된 것처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사의 과학성, 숙의의 공정성, 소통의 효과성 등이라 할 수 있다.

〈표 1-2〉 검증의 내용

분과	검증 계획
법·제도	▪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제도 도입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과 민주성 검증 •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 •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운영과정 ▪ 공론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조사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검증 • 공론조사의 기능과 한계 검증 •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역할이 효과적인지 여부
조사	▪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 • 조사 과정에서 사업단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모니터링 - 사업단회의 참석 모니터링 • 조사 의제 도출과 선정 검토, 조사 문항 검토 및 의제 선정 과정 • 조사 절차와 운영규칙의 객관성과 공정성 • 조사 백서/보고서의 객관성 검증과 의견 제시 ▪ 조사 과정, 기본규칙과 절차 관리, 결과해석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검증
숙의	▪ 시민참여단의 기초정보와 배경지식으로 사용되는 사전자료집 숙지에 대한 검증 • 찬·반 의견과 정보에 있어 균형 있는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시민참여단이 과학기술 및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집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여에서, 전문가 토론, 소그룹 토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검증
소통	▪ 대국민 소통 행사일정, 홈페이지 운영, 홍보 활동의 효율성과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 ▪ 소통의 주체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시민사회단체 및 학회, 언론, 일반 국민 사이의 소통의 효과성과 공정성 검증 • 사전자료집의 내용이 각 주체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공개토론회 및 TV 토론회 과정 평가 • 시민참여단 Q&A 운영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 •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검토 • ‘이해관계인’과의 소통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요약하면,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형조사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시민참여형조사의 법적·제도적 정당성과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해가 다른 집단들과의 소통 및 대국민 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형조사의 성패는 법적 제도적, 정당성, 조사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및 내실성, 소통과정의 투명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공론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조사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3. 검증의 원칙

공론화위원회가 수행한 시민참여형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에 대한 결정을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도출하려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며, 미래 한국형 참여민주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획기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 간 갈등 상황의 지속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에 장애가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와 비용의 발생이 한국사회 진보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서 국가적 대사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혹은 재개를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려는 시도는 향후 한국 사회통합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려는 정치사회적 실험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시민참여형조사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시민참여형조사에만 초점을 두면 조사과정과 숙의과정만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와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제도적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 간 소통과 대국민 설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과 제도, 그리고 소통 과정과 성과에 대한 파악 없이 조사와 숙의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등 네 개의 분과를 두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법·제도 분과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제도 도입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적법성)과 민주성을 검토하고, 시민참여형조사 검증을 통한 향후 공론조사 제도 설계를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공적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공론조사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조사의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공론조사

의 질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하다. 목적에 맞는 방법론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여론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준웅, 2017).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춘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통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관한 여론을 추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목적이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조사에 응답한 개인 중 일부를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 주제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숙의과정으로, 타당한 숙의과정의 수행과 더불어 숙의 과정에 참여할 개인을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숙의 과정에 참여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여론조사의 설계와 수행은 조사 결과의 활용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설문 조사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각 조사 단계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조사과정, 기본 규칙과 절차 관리 및 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한다.

조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참여자의 숙의는 크게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사전자료집 숙지 단계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여가 핵심이다. 사전자료집은 시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이전에 참여자의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며, 시민참여단 토론회는 심도 있는 집단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도록 하는 공론조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숙의에 대한 검증은 크게 이 두 단계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였다. 이와 더불어 숙의과정을 직접 관여하는 토론진행자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의 기초정보와 배경지식으로 사용되는 사전자료집 숙

지에 대한 검증과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여, 전문가 토론, 분임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 분야의 경우, 공식-비공식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이므로 직접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검증위원회에 주어진 활동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은 직접적인 관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회의록 등의 문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소통분과는 업무 범위를 “대국민소통행사 기획 운영”,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로 적시하고 있으나 검증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소통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숙의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을 소통의 범위로 설정하고, 소통의 주체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시민, 사회단체 및 학회, 언론, 국민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 사이의 소통의 효율성, 효과성, 공정성을 검증하였다.

4.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노력에 이르기까지 공론화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측이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2017년 7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형조사를 참관하였다. 2017년 9월 20일 공개된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착수보고서 검토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6일 진행된 종합토론회 오리엔테이션 참관하여 숙의과정 전, 공론화 또는 공론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참여단에게 시민참여형조사의 의미와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2017년 10월 6일,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회 검증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증위원회의 분과별 구성 배경과 역할, 활동 범위, 구성을 제시하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2017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15일, 2박 3일간 열린 종합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고, 최종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참여단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과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는지, 숙의 과정에 있어 시민참여단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검증하였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론화지원단이 검증위원회에 파일로 제공한 자료, 열람 자료,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3〉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활동내용	일자
•시민참여형조사 착수보고서 검토	2017년 9월 16일 ~ 2017년12월 10일
•종합토론회 오리엔테이션 참관	2017년 9월 16일
•모더레이터 교육 오리엔테이션 참관	2017년 9월 24일
•지역 순회토론회 참관(경기도)	2017년 9월 28일
•검증위원회 검증계획서 제출	2017년 10월 6일
•2박 3일 종합토론회 참관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0월 15일
•검증자료 분석	- 제공된 자료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2월 10일
	- 열람자료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7일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 제출	2017년 12월 14일

열람 자료 분석은 공론화지원단에서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검증위원회 원자료 열람 방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공론화지원단은 원자료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원자료를 특정한 장소에서 공론화지원단 참관 하에 열람하고, 검증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만 분석하였다. 즉 원자료 열람 장소를 광화문에 위치한 공론화위원회 사무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회의실로 제한하여, 공론화지원단 조사팀의 관리 하에 한국리서치 노트북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공론화지원단에서 확인 후, 파일로 제공 받았다.

〈표 1-4〉 검증위원회 검증자료

영역	검증자료	자료 제공
법·제도	•공론화위원회 논의 관련 의사 속기록	비공개
	•공론화위원회 논의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
	•공론화위원회, 의원 선입과정에 관한 자료	○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조직·인사	○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모든 결재서류	자료 없음
	•공론조사 내규 및 회의록	○
	•공론조사 순회토론회 개최관련 자료	공론화위 홈페이지
	•자문위원회, 소통분과위원회 구성, 정보, 설립근거, 회의록	○
	•공론조사 관련 설문지 작성자 정보	○
	•공론조사 설계를 위한 외국제도 벤치마킹 정책자료	○
조사	•20,000명의 추출 및 숙의대상 추출 및 측정 과정 기술보고서	열람자료
	•20,000명 조사를 위해 사용한 전화번호 리스트 및 분포	열람자료
	•20,000명 조사 결과 데이터	○
	•최종 500명 조사 결과 자료	열람자료
숙의	•오리엔테이션 당일 전문가 발표 자료 및 녹취록	○
	•e-learning 동영상 강의 자료 일체	공론화위 홈페이지
	•e-learning 사이트 참여자 활용 데이터	열람자료
	•공론조사 당일 전문가 토론 자료 일체	○
	•공론조사 당일 전문가 토론 녹취록	○
	•모더레이터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일체	○
	•모더레이터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자료없음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통계자료	열람자료
	•각 분임토의 구성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통계자료	열람자료

영역	검증자료	자료 제공
소통	•전체 분임토의 녹음파일/녹취록	○
	•분임토의에서 제기된 모든 질문의 목록	○
	•종합토론회 전문가 질의·응답 세션 녹음파일/녹취록	○
	•공론화위원회 명의를 보도자료	○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 발간된 제반 자료집 전체	○
	•시민단체들이나 각 주체들과 공론화위원회 사이의 교환문서	○
	•공사 재개 측과 중단 측 관계자들의 회의록	○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Q&A 방에 대한 접근권	공론화위 홈페이지
	•시민참여단 Q&A 방에 대한 접근권	○
	•시민참여단 숙소배정 정보	열람자료
공통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작성한 분과별 주간 상세 일정 및 계획	○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리서치 사업계획서	○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자문위원회, 검증위원회, 공사 중단과 공사 재개 측을 포함한 전체 조직도	○
	•공론조사 설문지(1차 ~ 4차)	○

검증자료는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총 네 개의 분과의 검증위원의 활동 내용과 역할, 그리고 주요 검증 내용을 고려하여, 10월 6일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검증위원회 검증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법·제도 영역 검증의 핵심은 첫째,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제도 도입 절차와 과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검증하는 것, 둘째,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조사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운영과정, 공론조사과정의 절차적 적

법성을 검증하고, 공론조사의 기능과 한계를 검증함으로써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역할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사영역의 검증은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사업단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니터링 하고, 조사의제가 도출, 선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숙의의 경우, 전문가 토론, 소그룹토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세 단계에 걸친 숙의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숙의과정의 내용, 그리고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한 자료들을 검증하여, 바람직하고 공정한 숙의과정을 통해 숙의효과를 도출했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경우, 대국민 소통 행사일정, 홈페이지 운영, 홍보 활동의 효율성과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소통의 주체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시민사회단체 및 학회, 언론 일반 국민 사이의 소통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자료집의 내용이 각 주체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공개토론회 및 TV 토론회 과정 평가, 시민참여단 Q&A 운영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해당 자료를 수령하여 검증하였다.

5. 검증보고서의 구성

상술한 것처럼, 2017년 7월 24일자로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이외에 각 분야(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그리고 갈등관리)의 전문가 2인씩,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증과정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검증의 목적과 과정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조사, 숙의 그리고 소통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 별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기존의 일반적인 공론조사와 비교한다. 3장에는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각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가 포함된다. 각 분야의 검증 결과는 검증 기준, 검증 내용, 검증 결과 분석, 검증 기준에 따른 평가, 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검증위원회 활동 경험을 통해 얻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그리고 검증보고서가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게 될 의미에 대하여 논한다.

II.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공사와 매물비용,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7년 7월 17일 제정된 총리훈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공론화위원회 설치가 결정되었다. (총리훈령 제1조)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과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두 명의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분과 위원회는 조사, 소통, 숙의, 법률 총 네 가지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 추천 의뢰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3인씩 후보를 추천 받고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의 입장을 갖는 기관, 단체에 제척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해 최종적으로 8인의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표 2-1〉 공론화위원회 명단¹⁾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위원	인문사회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부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위원	조사통계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조직된 공론화지원단은 기획운영팀, 대외협력팀, 공론화관리, 공론화조사팀, 숙의팀, 소통팀으로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으며, 공론화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 출범했고 9월에는 시민참여단이 확정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진행하였으며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시민참여단의 최종 토론회가 개최하였다. 10월 15일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조사가 이루어지고 10

1) 출처: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 24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공론화에 관련된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였다. 공론화 기간 중 총 15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정기회의 직후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가 모두 공개되었다. 또한 공론화의 핵심 축이 되는 네 가지 영역(법률, 조사, 숙의, 소통)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주요 의제를 설정해 검토하여 시행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 검증위원회,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는 필요 사안에 따라 개최되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5차 정기회의(2017. 8. 17.)에서 소통협의회 운영이 결정되었다. 소통협의회에 건설 중단 측에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건설 재개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등이 대표로 참여하여 수시로 의견을 조율 및 합의하였다.

2. 공론조사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형조사는 대규모 표본으로부터 시민참여단을 과학적으로 추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로 교육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중을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과, 숙의조건(the deliberation condition), 즉 식견 있는 의견 형성을 낳는 숙의 과정의 구현이 공론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준웅, 2017: 2).”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함으로써 숙의과정을 거친 최종 조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포괄적인 참여와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숙의과정 결과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론조사는 전통적인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과 숙의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겠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 (조성겸·조은희·윤정로, 2006). 따라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의 추출과 적절한 숙의과정과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숙의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2-2〉 공론조사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절차 구성

기존 공론조사		시민참여형조사	
1차 조사	• 확률추출	1차 조사	지역, 성, 연령별 기준 160개 층화 후, 무작위 추출
숙의과정 참여자 선정	• 숙의 참여 희망자 (참여 유도 과정)	시민참여단 선정	층화이중추출법에 의한 선정 1단계: 지역, 성, 연령, 기준 160개 층 & 무작위 추출 2단계: 1차 조사 의견, 성, 연령, 기준 30개 층 & 무작위 추출
자료제공	•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자료집 제공	숙의 프로그램 시민참여단 OT · 2차 조사	- 자료집 제공 - e-learning - Q&A - 텔레비전 토론회 시청, 동영상 시청 - 권역별 토론회 동영상 시청 - 종합토론회 진행관련 안내 2차 조사: 숙의 전·후 비교
숙의과정	• 소그룹 토론 • 패널과의 질의·응답 (본회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3차 조사	- 전문가 발표 - 전문가 발표자료집 - 분임토의 - 질의응답 - 참석자 간 상호대화 - 자료집 - e-learning 학습 효과 확인 - 종합토론회 첫날 진행
2차 조사	- 최종 의견 측정 - 공론화 과정 평가	4차 조사	- 최종 결과 - 공론화 과정 평가 -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 진행
결과보도	• 결과분석과 보도		

이번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는 피시킨(James S. Fishkin) 교수의 공론조사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형 공론조사 방식을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공론조사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며 변형을 통해, 해당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이준웅, 2017). 여기에서는 기존 공론조사의 절차와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공론조사는 첫째, 공론조사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추출(probability sampling)을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사안에 대한 의견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갖는 토론 참여자의 표본을 추출한다. 1차 조사의 표본을 공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특별한 표본 추출 과정 없이 공론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숙의과정이 이루어지기 전, 공론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찬반 양측의 균형 잡힌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송부한다. 이 자료는 숙의과정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문단이 자료의 균형과 정확성을 검토하고 조사한다(김원용, 2003). 또한, 자료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참관단에게도 제공되며, 때로는 웹에 게시되기도 한다. 공론조사 당일,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소그룹에 배치되고, 숙의과정 전에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토의의 결과로 나온 질문들을 정리하여, 본회의(plenary sessions)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공론조사 동안 소그룹토의와 본회의를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데, 이는 소그룹토의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과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이 맞물려 참여자들의 의사를 균형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론조

사는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참여자들을 모아, 일요일 오후 2차 조사를 끝으로 집에 돌아가는 방식을 취한다. 마지막 절차에서, 결과분석과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방송사에서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혹은 공론조사가 끝난 후, 편집 없이 방송하기도 한다. 숙의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를 변경하는 등의 숙의효과가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단순히 공론조사 참여자에게만 나타나고, 일반 국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의미가 있는냐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본회의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조사의 경우,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확률추출을 실시하여, 지역, 성, 연령별 기준, 160개를 층화한 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숙의 참여자는 층화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기준, 160개로 층화 후, 무작위 추출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 조사 의견(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성별, 연령, 기준 30개 층을 구성하여, 각 층에 비례 배분한 후 최종적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하였다. 이번 시민참여형조사에서, 숙의프로그램은 네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첫째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시민들이 토론쟁점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 둘째는 공론화 의제에 대해 쟁점별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소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 셋째 토론의제, 설문구성 등 이해관계자의 최대 관심사를 숙의 과정에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론조사를 통해 전 국민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숙의기간은 시민참여단이 확정된 2017년 9월 13

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33일이었고,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일반 국민에게도 숙의 기회가 제공되는 보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기본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1일), 숙의 자료집, 2박3일 종합토론회,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Q&A 등으로 구성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500명 중 478명(95.6%)이 참석하였으며, 시민참여단 대상 2차 조사가 시행되었다. 2차 조사는 숙의 전 시민참여단 인식수준 확인, 숙의 전·후 비교 등을 목적으로 쟁점 가치 판단, 정보 관심도 및 정보원의 신뢰도를 묻는 3개 문항과 신고리 및 원전 관련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숙의자료집은 위원회가 '1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개요', '2장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작성하고, 3장 및 4장은 건설 중단/재개 측에서 직접 작성하였다. 중단/재개 양측의 주장에 대한 자료집 초안을 작성 후 양측이 상호 교차 검토를 했으며, 인용된 데이터와 자료출처에 국한해 전문가들이 자료를 검증한 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자료집을 검수하였다. 이러닝 시스템(e-Learning)은 2017년 9월 21일부터 데스크탑 PC, 태블릿, 모바일폰 등에서 오픈되었고 시민참여단만이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탑재될 동영상 자료의 강의내용은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동영상 자료검증은 재개/중단 측의 합의에 따라 양측의 교차검증 없이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용된 자료의 데이터와 출처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동영상 내용은 총 6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강은 「공론화에 대한 이해」, 제2강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원전은 안전한가?」, 제3강은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4강은 「국가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5강은 「우리나라

의 에너지정책 전망은 어떤가요?」, 제6강은 「종합의견」으로 총 11개의 강의 동영상에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게시되었다. e-러닝 동영상 강의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e-러닝 시스템에 Q&A방이 운영되었으며 건설 재개/중단 측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시민참여단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게시하였다. 이외에도 e-러닝 수강이 어려웠던 일부 시민참여단에게는 종합토론회 기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종합토론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열렸으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 중 종합토론회에 471명(98.5%)이 참석하였고, 모더레이터 53명 등 진행요원 등 총 650명이 참석하였다. 종합토론회는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쟁점토의1(안전성/환경성), 쟁점토의2(전력수급 등 경제성), 종합토의(최종 선택과 사회적수용성) 등 4개의 세션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시민참여단의 질문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세션1,2보충/질의응답〉시간이 추가되었다. 1~3세션은 주로 양측의 발표, 분임토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4세션은 최종발표와 분임토의로 이루어졌고 분임토의에서는 최종 결과가 도출된 경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졌다. 9~10명의 시민참여단이 한 분임으로 편성되었고 분임별 모더레이터²⁾를 참여시켜 분임토의가 운영되었다. 각 토의 세션은 각 측의 발표, 분임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는데 발표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중단 및 재개 각기 총론(25분), 쟁점1·2(15분), 종합(10분)이 배정되었다. 분임별로 중단 및 재개관련 1개씩 2개의 질문을 정하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든 분임에

2) 토의 진행자인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여겨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갈등 관리 전문가 53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임별 모더레이터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시민참여단의 토의를 지원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특별 교육을 받았다.

서 시민참여단이 1분 내로 질의할 수 있었고, 전체 질의·응답은 세션별로 재개 및 중단 관련 각각 10개씩 20개 질의응답(1질문당 2분 답변)을 갖고, 재개 및 중단 측 주장관련 상호검증을 위해 발표자 및 응답자간의 반론(2분) 및 재반론(1분)이 실시되었다.

종합토론회의 첫날인 13일 3차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최종 조사가 실시되었다. 3차 조사는 자료집, e-learning 등에 대한 학습 효과 확인, 시민참여단 개개인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재개/중단 의견, 원자력 발전 정책,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 등을 묻는 문항, 신고리 및 원전 관련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문항, 학력, 직업 등 기본 통계 활용을 위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4차 조사는 최종 결과,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 재개/중단 의견, 건설 재개/중단 후속조치 우선순위, 최종 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존중 정도, 신고리 및 원전 관련 지식수준 파악을 위한 문항, 정치적 태도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이 아닌 국민들을 위해 보강 프로그램 역시 시행되었다.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 지역에서 총 7번의 지역순회 공개토론회가 열렸고, 총 5번의 TV 토론회가 열렸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고등학생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발표 후 10명~11명씩 10개조의 분임이 구성되어 70분간 분임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III. 법·제도 영역 검증

1. 법·제도 부문 공론화위원회 활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 의해 2017년 7월 24일 공식 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공론조사제도 도입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하였고, 7월 17일 공론조사 수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국무총리 훈령 제690호」, 이하 ‘훈령’). ‘훈령’에 의해 7월 17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지원을 도와줄 공론화지원단이 발족하였다. 공론화지원단은 공론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론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표 3-1〉 국무총리훈령 제690호(2017.7.17.)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구성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中 구성에 관한 조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7월 7일 공론화위원 선정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³⁾. 이 지침에 의해 2017년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위원장: 김지형)과 총 29명의 위원후보 중 8명의 위원이 선정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훈령’에 의거, 2017년 7월 24일 1차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였다. 이후, 제3차 회의(2017.8.3.)에서 숙의과정 참여단의 명칭을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변경하였다.⁴⁾

2017년 8월 23일 ~ 25일 사이에 ‘공론화위원회’는 조사업체(한국리서치)를 선정하였다. 선정 즉시 업체는 20,000명을 대상으로 제1차 여론조사를 실시(2017.8.25. ~ 9.10.)하였고 2017년 9월 13일 최종적으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확정하였다. 2017년 9월 16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천안 계성원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2017년 9월 24일에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의 과정 전반을 진행할 모더레이터에 대한 교육이 1회 진행되었고, 2017년 10월 13일 공론조사를 위해 시민참여단이 천안 계성원에 입소하였다. 15일까지 합숙 후 최종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훈령’ 부칙에 의해 해산하였다.

이상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4) 최종 결정을 정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시민배심원단이란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있었음.

〈표 3-2〉 공론화위원회 주요활동 일정

6월	6. 27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결정
7월	7. 7	국무조정실 공론화 위원 선정 관련 지침 발표
	7. 17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 공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발족(단장 : 남형기)
	7. 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 : 김지형) 운영계획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 확정
8월	8. 3	시민참여단 명칭 확정
	8. 8 - 8. 2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입찰
	8. 1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 개설
	8. 10 - 8. 11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8. 23 - 8. 25	조사기관 선정
	8. 25 - 9. 10	1차 조사 실시
9월	9. 13	시민참여단 확정
	9. 16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9. 24	모더레이터 교육
	9. 13 - 10. 15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진행
10월	10. 13 - 10. 15	시민참여단 최종 토론회
	10. 15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
	10. 20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정부 제출

2. 법·제도 영역 검증의 내용 및 범위

법·제도 영역에서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중단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월 20일까지의 관련 법·제도를 검증한다.

〈표 3-3〉 법·제도 영역 검증내용

검증 대상	검증내용
근거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0호) (7.17 제정) - 14조 부칙2조로 구성 -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사항 규정
운영 세칙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세칙」(17조로 구성)
조직	▪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4개: 법률, 조사, 숙의, 소통분과) ▪ 자문위원회(29명): 4개 분과별 법률(11명), 조사(2명), 숙의(12명), 소통(4명) ▪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8.17), 검증위원회(9.08), ▪ 공론화지원단 (국무조정실 산하, 단장포함 9개 기관 23명 파견공무원) ▪ 조사수행기관: 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0호)」에 의거한 공론화위원회 설립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법적권한과 기능에 따라 검증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행세칙이 잘 구성되었는지, 위원회 조직 구성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구성되었는지, 공론조사 시행절차에 관련 제도는 숙의와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 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검증위원회를 검증 대상 조직으로 할 것이며 공론조사 수행기관의 선정과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중 일부는 소통과 숙의분과의 검증부분과 중첩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제도분야로 검증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3. 법·제도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가. 검증 방법 및 절차

법·제도 영역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관련법과 규정, 제도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과 유사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검증 기준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위원회 운영 공개와 투명성은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위원회 운영의 운영과정이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RC)와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의 경우 홈페이지에 모든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공청회를 실시간 Webcast를 통해 중계하고, 관련 동영상과 녹취록, 관련 자료 아카이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체크 리스트에는 이런 절차를 위원회운영에 실제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나. 평가 기준

평가기준과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절차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 선임 등이 이루어졌는지, 관련 정부 조직법, 공공기관 갈등과 예방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와 충돌은 없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이 공론조사의 2대 요건인 대표성과 숙의성을 담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를 검증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조직설계의 관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조직 설계가 분업화(과업의 분할), 통합화(분할된 과업의 통합과 조정, 이를 위한 공식화와 표준화), 분권화(통제와 결정권의 위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요약하면, 법·제도 분야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공론화위원회 구성법과 제도에 관한 검증, 둘째 공론화위원회 운영 절차와 과정, 셋째 공론조사제도 관련 사항 등이다.

〈표 3-4〉 법·제도 분야 체크리스트

1 공론화위원회 구성 법과 제도
1.1 ‘공론화위원회’ 설립은 법적근거(요건)를 갖추고 있는가? 행정위원회 vs 자문위원회
1.2 공론화지원단 구성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1.3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임의 절차: 위원선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는가?
1.4 선임된 공론화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1.5 자문위원단 구성은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되었는가?

1.6	자문위원단 구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2 공론화위원회 운영 절차와 과정	
	공론화위원회 운영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2.1	- 모든 회의는 실시간 공개되었는가? - 모든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일단 대중에 공개되었는가? (홈페이지 등- 요약 or 녹취록 전문)
2.2	회의 과정과 의사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 특성 반영하였는가?)
2.3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가?
2.4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충분히 하였는가?
2.5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은 전문성에 근거하여 충분한 자문을 위원회에 제공하였는가?
2.6	공론화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에 불복시 실효성 있는 순응 확보 수단이 존재하는가?
2.7	-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의 조직은 조직설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능별로 적절하게 과업이 분화되었는가? -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의 조직은 조직설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식화외 표준화된 조직운영의 규칙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는가?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 조직, 공론조사 업체는 기능과 권한의 배분과 위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8	- 공론조사 업체 선정의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 공론조사 업체는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지니고 있는가?
3 공론조사 제도 관련	
3.1	-공론조사 준비기간이 숙의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하였는가? (실제 숙의분야 검증)
3.2	-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분야 검증)
3.3	- 공론조사 과정에 일반 국민과 미래세대 등이 참여하고 의견개진과 숙의할 제도와 절차가 존재했는지?
3.4	- 관련 공론조사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시나리오별 매뉴얼은 존재하였는가? 갈등관리 프로세스 측면:
3.5	공론조사 설계과정에서 갈등영향 평가 등이 이루어졌는가? 관련 프로세스를 단계적 이행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지?
3.6	- 공론조사의 객관성을 위한 객관적 자료검증 절차가 존재하였는가?

4. 법·제도 영역 검증 결과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1) 공론화위원회 성격과 설립근거

가) 설립요건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성격은 국무총리 산하 자문위원회로 위원회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상설 자문위원회(2017.7.17 ~ 10.20)이다. 그 근거법령으로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에 의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제1조)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대한 주요사항과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와 의견 수렴 및 필요한 해당 활동들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제2조). 또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돕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제8조), 자문위원 선정(제9조) 등의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결정권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조직과 다르게 결정권한이 모든 위원에게 분산되어 있는 합의제 방식의 조직유형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 소관의 사무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심의, 의결 또는 협의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 조직의 경우 독임제기관에 비해서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과 전문가를 행정에 참

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추구하고 각종 행정·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본 갈등사안의 경우 위원회 기관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원회 설립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의 경우는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설립에는 문제가 없었다. 자문위원회는 1,2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설립 절차에 있어서 하자 없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VS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행정기관 위원회의 두 가지 유형별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두 위원회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3-6〉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차이점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성격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기능과 함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 -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 (예) 최저임금위원회 -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 (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	
	법적 근거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정부조직법 5조)	대통령령으로 설치(정부조직법 제4조)를 원칙으로 함. 총리령, 부령설치도 가능한 함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인력	직제에 의해 사무국 운영 행정조직·정원 존재	대부분 기존 행정인력 활용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불가
결정의 법적 구속력	있음	없음
상설 여부	가급적 상설 위원회 형태 유지	제한 없음 (상설·비상설위원회 모두 가능)

참고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7월 17일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90호)」이 제정되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질 경우 정부조직법 4조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본 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1) 최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시민배심원단의 용어 사용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대외적 구속력(법적구속력)이 있다는 주장과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원칙상 별도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없는데 공론화지원단의 존재는 공론화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1)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화 과정을 설계·관리하는 것이지 공론화 결과를 직접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화 결과도 일종의 의견수렴 결과로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없

고 최종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회 결정의 대외적 구속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지원단의 존재 자체도 새로운 직제를 통해서 기구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각 부처에서 파견에 의해 운영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표 3-7〉 국무총리훈령 제690호(2017.7.1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⁵⁾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원조직의 역할을 사무국이 담당하였고, 공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결정자체도 정부가 형식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지만 결국 100% 수용했기 때문에 향후 공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경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공론조사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법을 공공갈등 해결과 예방법을 또는 행정절차법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성격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면 그 위원은 자문위원인데 9조에 위원 외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실제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많은 자문위원을 위촉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한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위원회 성격과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조정자인가? 공론조사 전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 중 하나인가? 아니면 공론조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가 수행하는 공론조사를 감독하는 관리자인가?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성격이 무엇이나에 따라 최적화된 위원회의 구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역할 관계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원전관련 허가, 승인,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존재한다(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안전법). 그 원전의 건설 허가와 취소관련의 업무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결정의

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 법령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2016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도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소속은 부처 중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소관부처가 분명한 경우 대통령 및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했음에도 ‘갈등조정’이 강조되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이는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소속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로 가는 것이 더 적합했다고 사료된다.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이 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었지만,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 관련기관의 규제기관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독립규제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중립적 기관임을 감안하면, 공론화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관계 정립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지점이다.

2)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거버넌스

가) 공론화위원회 선임 (선정절차의 공정성,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선출됐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2017년 7월7일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구성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원 선정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정부는 먼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총 4개 분야에서 전문기관·단체 2곳을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3명씩 총 2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여기에 다른 후보 5명을 추가해 1차 후보군으로 29명을 선정했다. 우선 분야별로 총 4개 분야, 8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경제·인문

사회연구회(4명)⁶⁾, 한국행정학회(4명)에서 인문사회분야 위원을 각각 추천하였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4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4명)가 과학기술분야 위원을 추천하였으며, 한국사회학회(3명), 한국갈등해결센터(3명)가 갈등관리분야 위원을 추천하였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3명)와 한국조사연구학회(4명)⁷⁾에서 조사통계 분야 위원을 추천하였다. 총 8개 조직에서 1차적으로 추천한 3~4명의 예비후보 중 단체별로 1명씩 최종적으로 총 8명의 위원들이 선정되었다.

6) 추천인수. 이하 숫자만 기입.

7) 확인 필요.(추천인 명부 받지 못함)

〈표 3-8〉 인문사회분야 추천위원

분야	추천기관	인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인문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류방란 (여,1960)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교육역사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책연구를 통하여 교육정책에 기여하였고 주요 보직을 맡으며 내부 조직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음. 갈등을 종재하고 소통을 촉진하여 참된 공론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하여 추천.
		박형수 (남,19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각종 정부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이해가 높음. 또한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 등 다수의 학회활동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활발한 정책제언을 하였고 통계청장을 역임한 바 있음. 상기인을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로 판단하여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적극 추천.
		양창호 (남,19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해운항만 물류 연구에 종사해 왔으며 연구원의 내부 연구 및 행정 업무를 총괄 조정을 통하여 내부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음. 또한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문칼럼과 SNS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을 종재하고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하여 적극 추천.
		황지은 (여,19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법학(행정법)을 전공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과 기능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국공법학회 등 학회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공론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하여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
한국행정학회		김정인 (여,1978)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행정조직 등의 전공자로 해당분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학자임.
		강제상 (남,1960)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기회장으로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사료됨.
		나태준 (남,1966)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갈등관리의 전문가로서 공정한 공론화과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현 (남,1974)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행정법 등을 전공을 하시며 공정한 법의 집행을 하실 것으로 판단됨.

〈표 3-9〉 과학기술분야 추천위원

분야	추천기관	인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과학기술 분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성재 (남, 1979)	고등과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자. 특히,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창립회원, 젊은 과학자상(대통령상),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학술기구 회원자격을 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수상과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 이러한 활동으로 미루어 동 위원회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있는 견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남좌민 (남, 1973)	서울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자. 특히, 젊은 과학자로서 세계 젊은 과학자한림원(Global Young Academy) 정회원,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창립회원, 젊은 과학자상(대통령상), 미국화학회 Victor K. LaMer Award, 중국한림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국제저명학자 펠로우십 등 매우 두드러진 국내외 수상 및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미루어 동 위원회에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균형 있는 견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윤정환 (여, 1950)	한림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現 농수산학부장).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여성과학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이며, 해당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또한 한국영양학회 및 한국과학재단을 비롯한 여러 학술단체 및 기관의 임원과 국제학술잡지의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가진 분으로 판단되어 추천.
		정선양 (남, 1960)	건국대학교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정책학부장). 과학기술경영 분야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경력으로 인해 피추천인은 동 위원회 주요 쟁점인 과학기술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정한 해결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천.

〈표 3-9〉 과학기술분야 추천위원

분야	추천기관	인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과학기술분야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태경 (남,1979)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 상기 추천인은 공학계열의 젊은 연구자로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 저널인 science에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위원회의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상기 추천인을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함.
		기유경 (여,1967)	(주)진전기엔지니어링(CM본부장/부사장). 국내 최초의 여성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서 본 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음. 현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 및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위원회 활동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이 탁월함.
		은재호 (남,1964)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위원.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본 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음. 시민배심원제 등 참여적 의사결정기법과 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실적이 많아 이론적 이해가 깊음.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국장으로서 재직 시 공공토론을 개최 운영하며 속의적 합의형성을 위한 퍼실리테이션과 공론조사 등을 실시, 실무적 이해가 깊음.
		조영상 (남,1977)	연세대학교(산업공학과 부교수). 피추천인은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외부성, 소비자 수용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들을 수행함

〈표 3-10〉 갈등관리분야 추천위원

추천기관	이름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김원동 (남,1959)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이해충돌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지녀온 분이다. 지역발전, 노동문제, 선거방송토론 등 이견과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현안들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참가해왔고 사회대학장 및 행정대학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도 겸비한 분이어서 갈등조정역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한국 사회학회	김성국 (남,1947)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시민사회론 연구와 관련 학회장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의 자율적 조정에 이론적, 실천적 경험이 많은 학자이고, 부산지역 경실련 공동대표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함.
	김주현 (여,1970)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현상에 대한 경험적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일본과 한국에서 환경과 노인문제 등 시민 생활의 일상영역을 깊이 연구해온 학자로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균형감각을 잘 갖춘 분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이희진 (여,1969)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사무총장. 공인노무사로서 노동현장에서 협상 및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으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핵심구성원으로 여성노동에 기여해왔음. 2008년 캐나다에서 갈등해결 및 조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사회에서 선구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사시설, 기상레이더 등 기피시설관련 공공갈등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해결 전문가로 활동해 왔음. 갈등분야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한국 갈등해결 센터	강영진 (남,1961)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해결 전문가). 한국인으로선 제1호이자 유일한 갈등해결학 박사이며, 이론과 실무 모두 밝은 국내 최고의 갈등해결 전문가로서 이 분야를 개척하고 선구적 활동해왔음. 시민참여와 공론화, 사회적 합의형성에 대한 선진사례를 활발히 연구 소개해왔으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최종보고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전력 에너지 관련 갈등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와 한전 한수원,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중간에서 대화 및 갈등

추천기관	이름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한국 갈등해결 센터	김주일 (남, 1962)	해결의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물론 향후 더 큰 관제의 원만한 논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2000년 노사관계분야 교수에서 시작하여 전 공분야인 노사 간의 갈등해결에 기여해 오는 한편, 2011년부터 (사)한국갈등해결센터의 대표 직무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각종 갈등, 고창송전탑, 기상청레이더, 학교 내 갈등 등 크고 작은 공공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갈등해결에 대한 이론과 다양한 갈등현장의 현장성을 결합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함.

〈표 3-11〉 조사통계분야 추천위원

추천기관	이름 (성별, 출생연도)	추천사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이윤석 (남, 1969)	<u>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교수)</u> . 사회조사자료의 기획, 표집, 사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파악에 큰 도움(한국종합사회조사 PI) <u>여성가족부, 통계청, 광역자치단체 서울 등 다양한 단위의 공공기관과의 협업 경험 풍부.</u>
	변미리 (여, 1964)	<u>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글로벌미래센터장)</u> . 조사통계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회학자로서 서울시 씽크탱크인 정책기관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이론과 정책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배영 (남, 1968)	<u>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u> . 상기인은 지난 20여년간 다수의 사회조사를 기획, 설계 및 분석해 온 연구자로 여론의 지형이나 흐름 변화에 대한 파악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담보하고 있음. 아울러 빅데이터에 대한 다년간의 분석에 기반하여 거시·미시적 여론 수렴 작업을 수행해 옴. 현재 한국일보에 2주간으로 '빅데이터로 세상읽기' 연재중. 또한 원전관련 이해관계가 전무하여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성 유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한국 조사연구 학회	김영원 (남, 1959)	<u>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u>
	이상경 (여, 1955)	<u>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u> . 이상경 대표는 조사연구학계 및 조사업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셨고, 다양한 사회적 봉사를 해 오셨으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적당하신 분이라 사료되어 이에 추천.

위원 선정의 공정성 : 정부가 위원추천을 요청한 단체들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주요 비판 지점이다. 물론 추천단체가 각 분야의 저명학회와 연구회이므로 대표성이 있을 수 있으나 각 학회에서 추천과정이 공개되고, 심사숙고하여 공론조사 설계와 운영에 최적의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8개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핵발전소 문제의 찬성·반대를 대표하는 측에 제척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12명이 탈락하였고, 정부는 남은 후보 17명 중 전공·성별·세대 등을 종합하여 최종 8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위원장 인선은 위원 선정과는 다르게 별도로 진행됐다. 위원회 위원 선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엄격한 공정성을 담보했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오히려 관련 연구 수행을 이유로 제척사유가 되는 등 전문성의 저하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여서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공사 재개와 중단 측의 수용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척 기회 부여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조사가 큰 불응 없이 이루어진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위원 선정의 대표성: 인문사회, 과학분야에서 20~30대 위원을 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였는데 총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연령비율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 제도설계의 일환으로 보인다(위원 연령구성: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성별을 살펴보면 위원장 포함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2:1의 비율이다. 처음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단체에 3명 중 1명은 여성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비율에 따라 2:1

의 비율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위원 선정의 연령과 성별 대표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원선정의 전문성: 본 공론화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보면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핵심적인 전문 분야로 공론조사 제도 설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분야가 해당되는데 숙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갈등관리와 숙의민주주의 절차와 조직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사설계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실제 원자력과 전력수요,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이슈들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위한 에너지와 경제학 등의 전문성 등이다.

〈표 3-12〉 공론화 위원 전문분야와 경력 정보

분과	이름 (성별, 연도)	주요 정보 (전공 및 소속)	추천 기관
조사 분과	김영원 (남, 1959)	- 전공분야: 조사통계 - 소속: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주요경력&논문: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2013~2014)	한국조사연구학회
	이윤석 (남, 1969)	- 전공분야: 조사통계 - 소속: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주요경력&논문: 한국종합사회조사 PI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통 분과	김원동 (남, 1959)	- 전공분야: 사회학, 지역사회 - 소속: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경력&논문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2003) “정보사회, 감시, 사회운동” (2004) “정보화마을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005) “춘천시민의 정치의식” (2006)	한국 사회학회
	류방란 (여, 1959)	- 전공분야: 교육학 - 소속: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주요경력&논문 :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외 17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숙의 분과	이희진 (여, 1969)	- 전공분야: 갈등관리 - 소속: 한국갈등해결 센터 이사/사무총장 주요경력&논문 : “C.Mediator(갈등중재 자격증)” “공인노무사”	한국갈등해 결센터
	유태경 (남, 1979)	- 전공분야: 과학기술 - 소속: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 주요경력&논문 : “T. Yu, T. Koh, B. Lim, “Synthesis of Copper Nanoparticles with Controlled Sizes by Reverse Micelle Method”, J. nanosci. Nanotech. 2013, 13, 3250–3253.” 외 21편(201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이성재	전공분야: 과학기술	한국

분과	이름 (성별, 연도)	주요 정보 (전공 및 소속)	추천 기관
법률 분과	(남, 1979)	- 소속: 고등과학원 교수 - 주요경력&논문 :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창립회원”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 등 국내외 다양한 수상	과학기술 한림원
	김지형 (남, 1958)	- 전공분야: 법학 - 소속: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주요경력&논문 : “대법관(2005~2011) “구의역스크린도어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직접 위촉
	김정인 (여, 1978)	- 전공분야: 행정조직 - 소속: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조교수 - 주요경력&논문 : “Kim, Jungin(2010), "Strategic Human Resource Practices: Introducing Alternatives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mprovement in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등 국내외 논문 다수	한국 행정학회

〈표 3-13〉은 각 공론화 위원들의 주요 전공과 경력, 그리고 주요 연구업적이다. 공론조사 설계의 핵심 2대 축인 조사설계와 갈등관리와 제도설계 관련해, 조사분과의 경우 조사통계 전문가로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등 샘플링과정에서 전문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통과 숙의분과, 법률분과에서 실제 공론조사 절차 관련 숙의과정의 운영과 규칙 등 제도설계 등의 전문성은 약해 보인다. 소통분과의 경우 한 위원의 전공은 교육학이고, 숙의분과 경우도 현장에서 갈등중재에 참여해본 경험만 있을 뿐 실제 제도를 설계한 경험은 없다. 숙의 분과의 이공계 위원도 에너지, 원전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법률분과의 위원도 인적자원 관리와 조직성과 전공자로서 관련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다. 자문기구도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위원회는 단기간 내에 공론조사 제도를 설계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전문성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 보인다. 향후 공론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자문위원단 구성과 활용

공론화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전문성 보강을 위해 전문위원을 분과별로 위촉하여 활용하였다. 법률분야는 11명의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였고, 조사분야는 2명 조사통계 전문가, 숙의분야는 12명의 과학기술분야와 갈등분야 전문가, 소통분야는 4명의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표 3-13〉 자문위원 위촉 현황

◆ 법률

연번	이 름	소 속
1	김 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김용진	사단법인 두루
3	김 진	법무법인 지향
4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5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여연심	법무법인 지평
7	유지원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임선아	해별 법률사무소
9	장종오	해별 법률사무소
10	장홍록	법무법인 해마루
11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 조사

연번	이 름	소 속
1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	김지범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숙의

연번	이 름	소 속
1	김규태	동국대 교수
2	김성중	한양대 교수
3	석상일	울산과기대 교수
4	성창모	UN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
5	엄우용	포항공대 교수
6	이진한	고려대 교수
7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8	정 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
9	조성한	동국대 교수
10	조영탁	한밭대 교수
11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12	김학린	단국대 교수

◆ 소통

연번	이 름	소 속
1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	김구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3	이철한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4	장다미	문체부 국민소통실 분석팀장

법률분과는 법률전문가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론조사 제도과정을 설계하는데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소수이다. 조사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다르게 소수의 두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조사분야와 공론조사분야에 최고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속의와 소통분과에서는 실제 공론조사 조사설계관련 갈등분야의 강영진 대표 외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없다고 평가된다. 이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용역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갈등학회 전문가 두 명이 실제적으로 설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론화지원단 구성과 조직

공론화지원단은 「국무총리훈령」 제690호 8조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다. 근거규정에 의해 단장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9개 기관에서 파견·차출되었다. 구성원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및 2급 상당 공무원인 총리실 남형기 안전환경정책관이 공론화지원단 단장으로 차출되었다. **기획운영팀**은 팀장 3급 1명, 5급 2명, 실무원 1명 등 총 4명, **대외협력팀**은 팀장 4급 1명, 5급 2명, 실무원 1명 등 총 4명, **공론화관리팀**은 팀장 4급 1명, 5급 2명, 전문위원 1명 등 총 4명, **공론화조사팀**은 팀장 4급 1명, 5급 2명 등 총 3명, **속의팀**은 팀장 4급 1명, 5급 2명 등 총 3명, **소통팀**은 팀장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실무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원과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공론화지원단은 2~6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론화위원회 인력구성의 특이점은 대부분이 3~5급으로 구성되었고, 6급 이하 실무진 인력이 1명이라는 것이다. 임시 위원회 조직의 특성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부처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바 유관부서의 협력을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단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자문위원단은 갈등관리 미디어 소통, 조사업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의 기능의 배분과 분권화 등 조직설계는 위원회 분과와 지원단이 일치하지만 않지만 실제로 공론조사 과정의 단계에 요구되는 기능별로 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14〉 공론화지원단 구성

구분	성명	담당 업무	비고
공론화지원단장	남형기 (고공)	■ 공론화지원단 총괄	
기획운영팀	이상로 (팀장, 3)	■ 기획운영팀 업무 총괄	
	김지현 (5)	■ 지원단 총괄	
	조해린 (5)	■ 위원회 총괄	
	정하은 (실무원)	■ 비서, 사무지원	
대외협력팀	김성규 (팀장, 4)	■ 대외협력팀 업무 총괄	
	강환일 (5)	■ 국회, 관계부처	산업부
	박미경 (5)	■ 예산	기재부
	전준연 (실무원)	■ 사무지원	
공론화관리팀	임진상 (팀장, 4)	■ 공론화관리팀 업무 총괄	기재부
	김명준 (5)	■ 이해관계자 간담회 총괄	행자부
	박재근 (5)	■ TV토론회 총괄	환경부
	박우영 (전문위원)	■ 지역순회 토론회 총괄	에경연
공론화조사팀	주호성 (팀장, 4)	■ 공론화조사팀 업무 총괄	원안위
	최재혁 (5)	■ 시민참여형 조사 기획·관리	통계청
	최임영 (5)	■ 조사분과위원회 관리	과기 정통부

구분	성명	담당 업무	비고
숙의팀	박지운 (팀장, 4)	■ 숙의팀 업무 총괄	산업부
	안정훈 (5)	■ 토론자료집 및 e-러닝 동영상 제작	원안위
	심충구 (5)	■ 오리엔테이션 및 종합토론회 운영	환경부
소통팀	한영기 (팀장, 4)	■ 소통팀 업무 총괄	문체부
	이명희 (5)	■ 온라인 홍보, 매체 광고, 민원 등	문체부
	권태우 (6)	■ 홈페이지 운영, 매체 광고, 민원 등	행자부
	김원걸 (실무원)	■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원	

라) 이해관계자 소통 협의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특징은 공론조사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양측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 진행 과정에서의 순응도 확보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표 3-15〉 소통협의회 구성 현황

	재개측	중단측
참여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소통협의회는 8월 17일 구성 후 2달간 7차례 정기회동을 통해서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는 공론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공간이 적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소통협의회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적인 갈등을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양측의 순응을 위한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조직 설계와 운영이었다. 향후 공론조사에서도 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과 관련해 논의하는 협의회의 구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마)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는 조사과정에 객관성 검증을 통해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운영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검증위원회가 공론조사과정과 제도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실제 원자력과 에너지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또 다른 팩트 체크 (Fact Check) 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되었으면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숙의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번 공론조사 진행과정에서 팩트 체크는 이해관계자 양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실 주장과 반박이지 객관적인 팩트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지 않아서 결국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검증위원회의 출범 시기가 9월 7일로 너무 늦다는 비판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조사와 숙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공론조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

에 검증위원회도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출범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 역시 향후 공론조사 설계 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나. 공론화위원회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은 14조와 2조의 부칙, 운영세칙은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세칙은 목적과 윤리의무, 직무윤리 서약서, 간사와 대변인 임명, 회의진행, 의안제출과 회의록작성, 전문가그룹 운영과 협의 창구, 비밀누설금지, 대외공개, 권고안제출, 위임, 수당 등의 지급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

가) **투명성:** 운영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운영세칙 9조 5항에서는 회의록은 지체 없이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고 전체 녹취록이 제시되어 있어서 자료의 공개와 투명성은 보장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분과회의록의 경우 요약본만 공개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전체회의록과 같이 분과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 투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이 실시간 회의중계 등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더불어 14조에 모든 회의록 및 의견수렴 결과를 자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선별적 자료 공개가 되는 것이므로 자동적 공개 제도도 향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중립성**: 공론화위원회는 합의제기관의 기관의 특성상 의사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운영을 통해 양자와 소통하고 중재하며 중립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2) 운영의 효율성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 조항과 운영세칙에 맞게 운영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의 법적인 제재수단이 미흡하기에 원전건설 중단 측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을(ex: 최종보고서 기한 초과제출, 원전 건설 재개 측 보고서를 보고 최종 보고서 내용 수정) 제지할 수 없었다.

또한 공론조사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기간의 촉박함(8.23~8.25 이틀간 입찰 진행)에 따른 입찰업체의 지원(2개 컨소시엄)의 제한과 공론조사 진행 및 운영의 상당 부분을 법적 근거 없이 업체에 실질적으로 위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체 선정과 각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론조사 선정 업체는 3개 컨소시엄으로 한국리서치의 경우 공론조사분야 관련 조사업체중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업체로서 관련 조사분야에 전문업체로서 전문성과 조사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공론조사와 한국의 공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실행위원회’에서 직접 공론조사 여론 수집을 진행했음에 비해 한국은 ‘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 등 사설조사업체에서 공론조사과정을 진행했음에 그 차이가 있다. 또한 모더레이터 교육도 일본의 경우 공론조사기법을 창시한 피시킨 교수가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정을 감

수했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 한국리서치에서 모더레이터 교육을 진행하였다. 피시킨 교수가 모든 공론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숙의과정에서 모더레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론조사 모더레이터 역할을 처음 수행한 대상자도 있기에 2회의 교육은 부족해 보인다.

다. 공론조사 제도 관련

1) 공론조사 절차와 운영기간

이번 89일의 일정이 국민적 숙의를 충분히 모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물론 이번과정에서 국민적 숙의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거나 기간이 짧아서 공론조사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은 아니다. 다만 공사 중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손실비용 증가에 따른 시급성으로 촉박한 기간 내에 공론조사를 결정, 수행하였지만, 향후 공론조사 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실제로는 30년 넘게 논의하였다는 해외사례도 실제 논의시작에서 집행까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제시하고 있다.⁸⁾(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 67p)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숙의준비과정이다. 독일의 경우 1977년 서독 외곽 고어레벤 지역에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완결된 이후 2013년 까지 해당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핵폐기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의회는 ‘부지 선정법’을 제정하여 2014년 4월 즈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8) 위원회 1차 회의일(일본은 공론조사 착수일)부터 결과 제출 시까지 기간

△ 독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 ‘11. 4. 4.~ 5. 30. (약 2개월)

△ 일본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 ‘12. 6. 29.~ 8. 22. (약 2개월)

2015년 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1개 부지 선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3개월 후(2011년 6월 7일) 기존 에너지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환경회의’⁹⁾를 설치하였다. ‘에너지·환경회의’ 방침으로 경제산업성 내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기본문제위원회가 2011년 10월 설립되었고 10개월 간 총 30번 회의를 걸쳐 ‘에너지 믹스 선택지 원안’을 채택하였다.

한국의 공론조사 기간과 독일·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선 독일은 36년 간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1년 7개월에 걸쳐 여론 수렴과 토론헬동을 거쳐 최종적인 부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에너지·환경회의’ ‘기본문제위원회’ ‘실행위원회’ 등 필요한 사안에 맞춰 위원회를 설립하고 1년에 걸친 시간 동안 공론조사를 준비하였다. 한국은 2017년 6월 27일 공론조사가 처음 언급된 이후 국무조정실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포함 총 3~4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졌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해보면 공론조사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준비기간이 길었던 독일의 경우 ‘시민소통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이 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9) 의장 : 국가전략담당 대신 / 부의장 : 경제산업성 장관, 환경성 장관

〈표 3-16〉 독일, 일본과 한국(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방식 차이점

	독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정책)	한국(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론화 준비 및 시행 기간	· 총 36년(위원회 활동 약 1년 7개월) · 1977년 헬무트 슈미트 정부에서 서독 외곽 고어레벤 지역 핵폐기장 부지선정 완료 · 2013년 지역주민 반발 · ‘부지선정법’ 재정 · 2014년 4월 ‘고준위핵 폐기물 처분위원회’ 발족 · 2014년 5월 22일부터 2015년 연말까지 활동	· 준비기간 약 1년 · 2011년 6월 7일 ‘핵 신적 에너지 · 환경 회의’ 설치 · 2012년 7월 공론조사 실시. · 최종적으로 9월 14일 혁신적 에너지 · 환경 전략 채택	· 준비기간 1개월, 총 4개월. ·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언급 · 2017년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설립 · 10월 13일~15일 공론조사 진행 · 2017년 10월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방식	· 위원회의 여론수렴 방식	· 공론조사	· 공론조사(토론형 여론조사)
위원회 구성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위원회’ 총 47명(학계 대표 8명, 시민사회 대표 8명), 국회의원 지역구 대표 8명 전문위원 8명 등)	· ‘에너지 · 환경 회의’ 2011년 6월 7일 설치 (국가전략담당 대신 의장) · ‘기본문제위원회’ 2011년 10월 설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9명) ·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외국의 사례에 비해 한국의 공론조사에선 시민참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숙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최소한 1년간은 공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과 국민소통부터 공론조사 세부 주제선정과 더불어 찬반이 아닌 시나리오별 대안준비까지, 그리고 그 기간 국민과의 숙의 등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금번 지역순회 토론회와 미

래세대 토론회는 이런 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많은 참여와 숙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민참여단 471명에 대한 공론조사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성 함양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 수준 향상이, 즉 숙의효과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준비해야 이러한 숙의효과가 국민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최종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진다.

2) 공론조사 제도 설계

법·제도 영역의 검증은 숙의와 소통 영역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기간 확보의 제도화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에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이 존재한다. 15조에 근거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13조 5의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조문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공론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갈등영향분석이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금번 위원회는 공론조사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에 관련 매뉴얼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을 오히려 공론조사를 설계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향후에는 정부 입장에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진행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사후적 정책 불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기존의 갈등관리로는 가치갈등의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채용한 새로운 갈등해결 방식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론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숙의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의 권한범위와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또는 행정절차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관련 규정이 아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의제기구인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 대의제와 공론화 제도의 상생방안을 찾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슈와 관련 담당 부처 안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법률도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조정자, 주체, 평가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처럼 상설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넷째,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의 고려도 필요하다.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와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 전문가 집단의 추천도 고려해

야 하고,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 DB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와 소통협의회, 검증위원회, 조사단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다. 이의 명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화와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IV. 조사영역 검증

1. 조사 부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본 장에서는 조사 영역에 대한 검증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영역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영역 분과에서의 활동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는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대규모 여론조사 실시이며, 다음으로는 대규모 여론조사에 응답한 개인 중에서 속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의 선발이었다. 물론 속의 과정 중에 수행된 2차례의 조사 역시 조사 영역에서 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으로 간주되나 절차 상 그리고 최종 결과의 산출 측면에서 1차 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선택이 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판단된다.

1차 조사는 휴대전화 90%(최종87.1%), 집전화 10%(최종 12.9%)를 활용한 병합조사로 이루어졌다. 표본 구성을 위해서는 2017년 7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의 지역, 성 그리고 연령대를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여 총 20,000명(최종 20,006명)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었다. 휴대전화의 경우 3개의 통신사(KT, SKT, LGU+)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활용하여 층화 및 조사를 수행했으며 집 전화의 경우에는 RDD 기법으로 추출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였다.

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재전화(recall) 횟수, 접촉 성공률 및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실제 전화번호를 추출하였고 이와 더불어 조사를 수행하는 위탁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서는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5,881명 중 전화번호 오류, 의향 반복, 연락 거부 등을 제외한 실제 참가의향자 5,047명을 표집틀로 사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 수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30개 층을 구성하여 각 층에 비례배분한 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체계적 추출(systematic sampling)법을 통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층 구성을 위해 사용된 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민참여단의 분포는 모집단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2차~4차 조사가 공론화위원회의 감독아래 위탁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의 내용(설문지)은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며 숙의 과정을 통해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분석이 기초 분석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2. 조사 영역 검증의 내용 및 범위

공론화 위원회 조사 영역의 활동은 크게 두 부분이며, 검증의 내용 및 범위 역시 이 부분 내용에 제한하여 이루어졌다. 공론조사는 그 성격상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통계적 측면의 사항은 1차 조사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사용된 표본설계의 타당성 및 그 결과로 구성된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내용이다.

통계적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서베이 통계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이상추출법(two phase sampling)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이상추출법은 표본설계 혹은 추정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집단의 정보가 없을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1상(first phase)에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규모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로부터 측정이 쉬운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이용한 층화와 같은 표본설계 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분석을 위한 소규모의 2상(second phase)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를 위해 사용된 표본추출법에 이를 적용하면 1차 조사를 위한 유·무선 병합 전화조사 표본을 1상 표본으로, 그리고 이로부터 획득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층화를 위한 보조정보로, 마지막 시민참여단의 추출을 2상에서의 표본 추출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확률추출법인 이상추출법과의 중요한 차이는 1차 조사에서 각 응답자에게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여부를 문의한 후 이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대상을 2상 추출을 위한 추출틀(sampling frame)로 고려함으로써 확률추출법의 무작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과 추론의 대상이 되는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학적 측면에서 공론조사는 의사 결정을 위한 일종의 모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추정량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선거 예측조사에서와는 달리 조사를 통해 추정된 수치가 그 크기의 상대적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절대적 수치로써 의미를 갖기 보다는 전체 여론이 속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 사용한 공론조사의 틀은 조사를 통해 산출된 혹은 추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론조사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과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베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의 가능한 오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베이 통계학 분야에서의 오류 혹은 오차는 크게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로 구분되며 이 두 오차의 합을 흔히 총 조사 오차라고 한다. 이 중 표본 오차는 모집단 전체를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이며, 비표본 오차는 이를 제외한 모든 오차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비표본 오차는 무응답 오차, 프레임 오차 그리고 측정 오차이다. 표본 오차는 표본 설계를 통해 정의되는 확률 구조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비표본 오차는 그 정도를 수치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편향(bias)의 측면에서 그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 고려하는 검증의 내용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본설계(sampling design)의 과학적 타당성
- 비표본 오차 관리 방안의 타당성
- 추정 방안 및 오차 추정량의 통계적 타당성

3. 조사 영역 검증 방법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와 세 번에 걸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이론적 타당성의 검증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 이론과 더불어 서베이 통계학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조사 자료 검증은 조사 결과로 산출된 다양한 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검증 방법과 더불어 그 결과를 서술한다.

1차 조사를 위해서 사용된 유·무선 병행조사는 그 방식을 통해 볼 때 지역과 성 그리고 연령을 이용한 층화 그리고 비례배분이 적용된 층화 랜덤 추출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정들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상번호가 랜덤하게 추출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 층 내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간에 1차 조사에서 고려된 여러 변수 측면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다. 언급된 두 가지 가정은 매우 중요한 가정이나 이를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기존 전화조사에 비하여 그 절차 및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점은 언급한 가정의 위배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추론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접촉성공률, 응답률 그리고 재접촉 횟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어 1차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대상을 추출틀로 정하고 이로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개인을 추출하는 과정 역시 성별, 연령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건설재개, 건설중단, 판단유보) 변수를 이용한 층화 계통 추출로 간주할 수 있으나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

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 가정은 시민참여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즉, 최종 500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1차 조사에서의 가정 및 2차 조사를 위한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는 일종의 무응답 오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Missing At Random(MAR) 조건으로 무응답 조정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가정이기도 하다. 물론 기존 연구들에서 이를 가정한 결과들의 이론적 타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가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사용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인 사실은 최종 결과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의 차이가 언급한 가정들의 만족 여부를 감안하더라도 유의하게 나타나 의사결정 자체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조사에 응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가정과 시민참여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일 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표본 500명의 대표성을 강변하기는 어렵다.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가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작성하는데 근거로 활용되는 조건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 표본설계 방식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은 분명해 보인다.

〈표 4-1〉 ~ 〈표 4-5〉는 모집단 및 1차 표본, 참석의향자 그리고 최종 시민참여자의 지역, 성, 연령, 직업 그리고 지지정당의 분포를 나타낸다. 인구학적 변인인 지역, 성 그리고 연령의 경우에 모집단 정보가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나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절대 비교가 아닌 상대 비교만이 가능하다.

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000명 표본 구성 시 모집단인 일반 국민의 성, 연령, 지역 분포를 고려했기 때문이지 무작위 표집에 의한 결과는 아니다. 참여의향자 5,881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과 연령은 모집단 분포와 유사하지만 성 분포는 남성의 비율이 모집단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참여의향자 5,881명으로부터 최종표본 500명을 추출했는데 이 최종표본의 성, 연령, 지역, 공사 재개/중단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5,881명에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500명의 성, 연령, 지역, 공사 재개/중단 분포가 우연히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500명 표본추출은 무작위 확률표집이라기보다는 최종 참여의향자 5,047명을 대상으로 한 할당표집에 가깝다. 20,000명으로부터 5,881명의 참여의향자를 모집하고, 최종까지 참여의향이 있었던 5,047명을 확정 한 후, 500명의 성, 연령, 지역의 분포를 모집단 분포와 비슷하게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모집된 5,047명에게 참여를 독려하여 할당표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 90,000여 명으로부터 20,000명과 500명을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90,000여 명 중 참여의향자 5,047명을 파악하여, 이들로부터 비확률 표집인 할당표집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90,000여 명으로부터 20,006명도 90,000여 명 중 조사에 응답한 24.5%일 뿐이고 500명 추출틀로 활용된 5,047명만이 진정한 응답자라 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비확률 표집인 할당표집법이 활용되었다는 의심은 과연 모집단인 일반 국민 전체가 숙의과정에 참여했어도 시민참여단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의문의 존재는 향후 공론조사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사항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의심은 참석의향자와 시민참여단의 성, 연령, 지역이 아닌 다른 변수들의 분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특별히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비율이 참석의향자와 시민참여단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시민참여단에게만 질문이 이루어진 소득(표 4-6) 및 종교 부분(표 4-7)을 살펴보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개인이 40%이며 무교 역시 44%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교 및 소득 분포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4-8〉은 1차 조사 및 3차 조사에서 모두 질문되었던 직업 문항에 대한 일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일치도가 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조사가 전화조사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직업이 민감한 질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측정 오차가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1차 표본 및 최종 표본 그리고 각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는 비록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표본이 추출되었으나 여러 변수에서 표본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표본의 크기를 키우고 무응답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표본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본 공론조사 역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표본설계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무응답 오차, 측정 오차 그리고 프레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 과정상의 노력과 관리는 다른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에 비하여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표본의 대표성은 100%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표본 오차를 감안한 의사결정 이외에 비표본 오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모집단 및 표본의 지역 분포

지 역	모집단		1차표본		참석의향자		2차표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서 울	9,860,795	23.2%	3,944	19.7%	1,154	19.6%	109	23.1%
부 산	2,800,297	6.6%	1,385	6.9%	454	7.7%	31	6.6%
대 구	2,492,907	5.9%	963	4.8%	276	4.7%	27	5.7%
인 천	2,477,823	5.8%	1,119	5.6%	337	5.7%	27	5.7%
광 주	1,415,929	3.3%	548	2.7%	170	2.9%	15	3.2%
대 전	1,823,535	4.3%	569	2.8%	172	2.9%	19	4.0%
울 산	543,061	1.3%	447	2.2%	128	2.2%	6	1.3%
경 기	9,991,646	23.5%	4,851	24.2%	1,387	23.6%	111	23.6%
강 원	922,713	2.2%	608	3.0%	167	2.8%	10	2.1%
충 북	1,240,682	2.9%	614	3.1%	157	2.7%	14	3.0%
충남(세종포함)	1,233,217	2.9%	901	4.5%	267	4.5%	14	3.0%
전 북	2,208,455	5.2%	719	3.6%	226	3.8%	25	5.3%
전 남	1,232,774	2.9%	739	3.7%	221	3.8%	14	3.0%
경 북	1,883,427	4.4%	1,064	5.3%	302	5.1%	20	4.2%
경 남	2,172,937	5.1%	1,290	6.4%	386	6.6%	26	5.5%
세 주	233,369	0.5%	245	1.2%	77	1.3%	3	0.6%
합 계	42,533,567	100.0%	20,006	100.0%	5,881	100.0%	471	100.0%

〈표 4-2〉 모집단 및 표본의 성별 분포

성 별	모집단		1차표본		참석의향자		2차표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남 자	21,083,080	49.6%	9,930	49.6%	3,452	58.7%	233	49.5%
여 자	21,450,487	50.4%	10,076	50.4%	2,429	41.3%	238	50.5%
합 계	42,533,567	100.0%	20,006	100%	5,881	100.0%	471	100.0%

〈표 4-3〉 모집단 및 표본의 연령 분포

연 령	모집단		1차표본		참석의향자		2차표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19~29세	7,442,075	17.5%	3,506	17.5%	924	15.7%	68	14.4%
30~39세	7,453,115	17.5%	3,517	17.6%	969	16.5%	80	17.0%
40~49세	8,725,523	20.5%	4,105	20.5%	1,182	20.1%	108	22.9%
50~59세	8,486,281	20.0%	3,993	20.0%	1,315	22.4%	104	22.1%
60세 이상	10,426,573	24.5%	4,885	24.4%	1,491	25.4%	111	23.6%
합 계	42,533,567	100.0%	20,006	100.0%	5,881	100.0%	471	100.0%

〈표 4-4〉 표본의 직업 분포

직업	1차표본		참석의향자		2차표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림/어업	604	3.0%	186	3.2%	11	2.3%
자영업	3,412	17.1%	1,232	20.9%	79	16.8%
판매/영업/서비스직	2,039	10.2%	598	10.2%	41	8.7%
생산/기능/노무직	1,784	8.9%	531	9.0%	31	6.6%
사무/관리/전문직	5,427	27.1%	1,567	26.6%	128	27.2%
주부 (가사에만 종사)	3,727	18.6%	849	14.4%	101	21.4%
학생	1,545	7.7%	421	7.2%	43	9.1%
무직/퇴직/은퇴 등	1,409	7.0%	491	8.3%	37	7.9%
모름/무응답	59	0.3%	6	0.1%	0	0.0%
합계	20,006	100.0%	5,881	100.0%	471	100.0%

〈표 4-5〉 표본의 정당지지도 분포

정 당	1차표본		참석의향자		2차표본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더불어민주당	7,927	39.6%	2,549	43.3%	217	46.1%
자유한국당	1,789	8.9%	615	10.5%	49	10.4%
국민의당	741	3.7%	240	4.1%	14	3.0%
바른정당	696	3.5%	219	3.7%	17	3.6%
정의당	606	3.0%	214	3.6%	20	4.2%
기타 정당	157	0.8%	60	1.0%	4	0.8%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7,443	37.2%	1,877	31.9%	145	30.8%
모름/무응답	647	3.2%	107	1.8%	5	1.1%
합 계	20,006	100.0%	5,881	100.0%	471	100.0%

〈표 4-6〉 2차표본의 소득 분포

소 득	빈 도	비 율
100만원 미만	22	4.7%
100~200 만원	39	8.3%
200~300 만원	87	18.5%
300~400 만원	61	13.0%
400~500 만원	76	16.1%
500~600 만원	77	16.3%
600~700 만원	30	6.4%
700만원 이상	75	15.9%
모 름	4	0.8%
합 계	471	100.0%

〈표 4-7〉 2차표본의 종교 분포

종 교	빈 도	비 율
기 독 교	117	24.8%
불 교	81	17.2%
천 주 교	60	12.7%
기 타	3	0.6%
무 교	208	44.2%
모 름	2	0.4%
합 계	471	100.0%

〈표 4-8〉 1차조사와 3차조사의 직업 비교

직업 조사	빈 도	비 율
같 음	356	75.6%
다 름	115	24.4%
합 계	474	100.0%

〈표 4-9〉 1차조사 vs 4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2.9%	4.9%	1.3%	29.1%
	건설재개	2.1%	34.2%	0.4%	36.7%
	판단유보	15.5%	17.2%	1.5%	34.2%
합 계		40.6%	56.3%	3.2%	100.0%

전체: 471명

〈표 4-10〉 1차조사 vs 3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2%	2.3%	6.6%	29.1%
	건설재개	1.7%	30.4%	4.7%	36.7%
	판단유보	10.6%	11.7%	11.9%	34.2%
합 계		32.5%	44.4%	23.1%	100.0%

전체: 471명

〈표 4-11〉 3차조사 vs 4차조사 건설 문항 의견 변화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1.2%	0.6%	0.6%	32.5%
	건설재개	1.7%	42.0%	0.6%	44.4%
	판단유보	7.6%	13.6%	1.9%	23.1%
합 계		40.6%	56.3%	3.2%	100.0%

전체: 471명

〈표 4-9〉~〈표 4-11〉은 1차 전화조사를 포함하여 실시된 3번의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에 속한 471명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변화를 보여준다. 1차 조사는 원전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3차 조사는 오리엔테이션 시 배부된 교육 자료 및 온라인 정보를 각 참여자가 학습한 후 2박 3일 입소 직후 이루어졌다. 마지막 4차 조사는 모든 숙의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숙의 효과가 반영된 최종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참여자에게 주어진 자료 및 온라인을 통한 교육 역시 일정부분 의사결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나 건설재개 여부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역시 숙의 과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단 유보 층에서 건설 재개로 의견을 변경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재개 중단으로 의견을 변경한 참여자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변화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건설 재개의 상대적 빈도상의 우위를 심화시킨 것이다.

〈표 4-12〉~〈표 4-14〉는 원전 확대에 대한 의견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의견 역시 건설 재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1차 조사의 결과가 변화 없이 유지되나 각 참여자 개인의 지식 습득과 온라인 과정 그리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경향성, 원전 축소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원전 유지나 확대에 동의했던 상당수의 참여자가 원전 축소로 그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 원전 축소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원전 건설 재개에 동의한 시민이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검증 측면에서 이러한 건설 재개 및 원전 확대에 대한 의견 변화와 각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경제 상태 변인과의 교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3차원

이상의 교차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작성된 교차표는 별첨에 있다.

〈표 4-12〉 1차조사 vs 4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7.8%	8.3%	0.8%	0.4%	47.3%
	유지	11.9%	15.9%	3.6%	0.2%	31.6%
	확대	1.7%	6.8%	4.9%	0.6%	14.0%
	모름	3.0%	3.4%	0.4%	0.2%	7.0%
합 계		54.4%	34.4%	9.8%	1.5%	100.0%

전체: 471명

〈표 4-13〉 1차조사 vs 3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3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5.5%	9.3%	0.8%	1.7%	47.3%
	유지	8.7%	17.6%	4.7%	0.6%	31.6%
	확대	1.5%	5.3%	6.8%	0.4%	14.0%
	모름	2.3%	3.0%	0.8%	0.8%	7.0%
합 계		48.0%	35.2%	13.2%	3.6%	100.0%

전체: 471명

〈표 4-14〉 3차조사 vs 4차조사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0.6%	6.4%	0.2%	0.8%	48.0%
	유지	11.5%	21.7%	1.9%	0.2%	35.2%
	확대	0.4%	5.1%	7.4%	0.2%	13.2%
	모름	1.9%	1.3%	0.2%	0.2%	3.6%
합 계		54.4%	34.4%	9.8%	1.5%	100.0%

전체: 471명

1차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표본 추출 시 고려된 변수는 성, 지역 그리고 연령, 그리고 건설 재개 찬반 여부이다. 즉, 이러한 변수들이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되었고, 이는 또한 층화를 위해 사용된 변수들이 실제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 혹은 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별첨의 표들을 통해서 볼 때 시민참여단 추출을 위해 사용된 층화 변수들은 유의하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 역시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직업군, 소득 수준, 지지 정당 및 정치 성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 및 원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에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이러한 변수들이 층화를 위해 고려된 변수들에 의하여 일정 부분 설명되고, 따라서 건설 재개 여부 및 원전 확대 방안에 대한 직업군, 소득

수준, 지지 정당 및 정치 성향의 일부 효과가 성, 연령, 지역과 같은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그 설명력을 완전하게 보존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업군, 소득 수준, 지지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대한 모집단인 국민 전체의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표본의 해당 변수 기준 대표성을 직접 논의하기는 어려우나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나 지지정당의 경우에는 표본 분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가 전체 공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및 시사점

일반적인 공론조사와는 그 목적이 다를 수 있는 조사로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는 그 최종 결론을 정책 결정을 위한 보조 자료가 아닌 직접적인 의사 결정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찬반에 대한 최종 결과가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상의 차이로 인하여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공론조사가 추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검증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조사과정을 살펴볼 때 조사 측면에서의 검증은 최초 표본, 숙의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 희망 집단 그리고 최종 시민참여단의 모집단 대표성에 대한 통계적 혹은 사회과학적 이론 및 실증 검증의 요소가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와 더불어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학습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등이 바른 공론조사를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언급한 각 단계에서 추출 혹은 구성되는 집단들의 대표성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크기를 갖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과 몇 가지 중요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숙의과정에 많은 수의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를 위해서는 성, 연령, 지역 그리고 1차 조사에서 구한 건설 재개 찬성 여부 변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

참여단이 구성되었다.

기존 전화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1차 조사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서 조사 전 과정이 모니터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무응답이 발생하였고 또한 참여를 희망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여러 변수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참여단 선발에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층화 변수로 사용되어 모집단 대표성을 일부 확보하였으나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수준, 지지 정당 그리고 정치 성향과 같은 변수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다른 시민 참여단의 분포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은 최종 질문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였음 역시 확인되었다.

통계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대표성과 관련된 문제는 비표본오차와 주로 관련이 있어 표본오차를 나타내는 분산이나 한계허용오차로 설명되지 않을 뿐 더러 비표본 오차는 추정된 통계량들의 편향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의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응답 오차, 프레임 오차 그리고 측정 오차에 대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 대규모로 최초 이루어진 본 공론화 『시민 참여형조사』가 기존의 다른 조사에 비하여 철저한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금번과 같이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도구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 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번 수행된 조사에서 발생한, 그러나 그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비표본 오차를 더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공론조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직접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조사 방식을 국가기관이 인정한다면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의
결과 역시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숙의 영역 검증

1. 숙의 영역 검증의 범위

본 장에서는 이번 공론조사의 숙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스탠포드대학교 숙의 민주주의센터(CDD: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에 준거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공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견(authentic opinion)’을 도출하기 위해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진이 고안한 방법론이다. CD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축적해 왔다. CDD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론조사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고유한 공론조사 기법을 도입했다 하더라도(최종보고서, p.70) CDD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에 준거하여 이번 공론조사 전반을 평가해 보는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이번 공론조사 절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본 장에서는 이번 공론조사에서의 숙의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검증한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 및 엄밀성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비교하여 공론조사가 가지는 핵심적 차별성은 참여자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참여자들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론조사의 주체는 참여자들이 취득하는 정보 및 토론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이번 공론조사를 가) 자료집과 사전학습 단계, 나) 분임토의, 그리고 다) 숙의효과 등 세 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는 정보습득과 상호토론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의견’을 형성하는 공론조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DD가 규정하는 공론조사의 핵심 요소들이다.

2. 속의 영역 검증

가. 사전자료집 작성 및 배포 및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일반 여론조사와 비교하여 공론조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정보에 근거한 의견형성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사전자료집은 참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 정보와 배경 지식을 제공하므로 공론조사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자료집에서 찬·반 의견과 관련된 정보가 균형 있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 및 전문 분야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1) 사전자료집 전달 지연

사전자료집은 참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공론조사의 핵심 요소다. 시민참여단 모두가 사전자료집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찬반 양측이 동의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양측 의견의 균형을 맞추어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공론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명시하는 있는 바와 같이(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 p.76), 자료집 내용에 대한 양측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 배포 예정이었던 자료집 전달이 28일에 이르러서야 이행되었다. 이 결과 보통 4주 정도를 요구하는 자료집 숙지기간이 약 2주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시민참여단이 생소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속의효과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양측 전문가 의견 불일치

사전자료집은 찬반 양측의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작성되었다. 자료집 작성 시의 문제가 토론장에서도 재차 불거져 시민참여단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예를 들어, 2일차에서는 저준위·저선량 방사능 방출량과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양측 전문가 간 논쟁이 벌어졌다. 또 3일차에는 원전을 더 건설하지 않고도 전기 공급이 충분한 지에 대해 양측 전문가 간 논쟁이 벌어졌다. 즉, 공사 중단측은 2030년 전기수요량 예측치인 100GW 공급이 현재 발전소 공급량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사 재개측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패널 단가 하락 예측치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사 중단측은 태양광 패널 단가가 향후 70원까지 하락하여 원전 단가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 주장한 반면 공사 재개측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의견 대립 때문에 결국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을 향한 시민참여단의 답답함이 터져 나와 전문가들과 사회자가 시민참여단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일차 전문가 질의응답 스크립트 및 3일차 전문가 질의응답 스크립트 참조).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진영의 합의라는 첫 걸음을 제대로 떼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여 시민참여단이 양측 전문가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 스탠포드 대학교 CDD의 지침에 따르면 사전자료집 작성은 공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룬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사항이 이번 공론조사 기간 내에 잘 지켜지지 못했다.

3) 전문가 자격 요건의 불균형과 감정적 호소에 근거한 발표

양측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자격 요건에도 불균형이 존재했다. 공사 재개 측의 경우,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10명은 한수원(3명, 30%) 관계자를 제외하면 학교와 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전문가(7명, 70%)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 한수원 김한곤 소장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이다. 따라서 거의 전원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공사 중단 측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12명 중 학계 전문가는 6명(50%)에 불과했다. 반면 시민단체(2명), 애널리스트(1명), 정치단체(2명), 일반 주민(1명)등의 비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사 재개측 전문가 그룹과 비교해 전문성 차원에서 불균형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양측에서 동일한 수준과 분량의 전문적 정보를 시민참여단에 제공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문성 차원의 불균형은 전문가들의 발표 방식에서도 진영 간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특히 공사 중단 측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가령 고리원전 인근 주민으로 갑상선암 발생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중인 이진섭씨는 다른 패널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적

호소로 일관했다. 또 마무리 세션의 경우 양측 모두 기존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하는 대신 자신들의 사적 경험(예: 원전수주와 관련한 사적경험)과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는 시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유도하여 정보화된 의견을 형성한다는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론조사의 결과가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이 훨씬 우월했던 공사 재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진영 간 불균형을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것은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있다.

〈표 5-1〉 양측 입장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자 현황

세션	재개 측	중단 측	비고
제1세션: 총론토의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발표
	정범진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강정민 (미국 NRDC 선임연구위원)	질의응답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이진섭 (고려원전 인근 주민)	질의응답
	배성만 (한수원 처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질의응답
제2세션: 쟁점토의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발표
	김한곤 (한수원 소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질의응답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백도명 (前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질의응답
	김수근 (성균관대 의대 교수)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캠페이너)	질의응답
제3세션: 쟁점토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산업부 전력 정책심의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발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질의응답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성호 (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질의응답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질의응답
제4세션: 마무리 토의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체코원전수출담당 팀장)	조현철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예수회신부)	발표

나. 분임 토의

1) 의견형성 왜곡현상

분임토의에 대한 검증은 설문조사 데이터와 분임토의 녹취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검증위원회는 공론조사 진행 기간 동안 모든 분임토의 내용의 녹취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달된 녹취록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공론화위원회가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에 사회과학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통계 전문가 중심이고, 속의분과에 텍스트 분석 전문가가 없어 발행한 오류로 보인다.

- ① 우선 녹음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아예 누락된 경우도 있어 모든 분임조를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본 검증에서는 한 번이라도 녹취록에서 녹취 상태 불량의 상태로 인하여 제외된 5개의 조(2세션(35, 48조), 3세션(35, 37, 42조), 4세션(42, 43, 48조), 5세션(43조))을 제외한 43개의 조의 녹취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②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설문 아이디어와 발언자의 아이디어를 연계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측에서 이러한 데이터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참여자의 속성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해졌다.
- ③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측에서는 제공된 녹취록은 어느 참여자의 발언 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연구진에서 모든 녹음파일을 다시

듣고 매칭시켜야 했고 이 때문에 분석기간이 매우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분임토의의 숙의성 검토의 일환으로 CDD에서 규정하는 ‘숙의적 왜곡(deliberative distortion)’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CDD에서는 분임 토의가 숙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집단내의 압력 등으로 인해 ‘의견의 균일화(의견동일화, homogenization)’, ‘찬반 의견의 양극단화(의견극화, polarization)’, ‘특정 사회적 우위(socially advantaged)에 있는 사람에 의한 토론 의견의 지배(의견우세, domination)’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견동일화’의 조작적 정의는 CDD의 방식을 차용, 각 분임토의조별로 3차, 4차 조사에서 의견의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즉, 4차 조사에서 의견의 편차가 3차 조사 때보다 적어졌다면 ‘의견 동일화’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토론회 이전인 3차 분임토의 조별 의견의 평균값을 구하여 스케일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당 분임조에서 지배적이었던 의견의 방향으로 평균이 움직였다면 이를 ‘의견극화’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의견우세는 분임토의의 진행을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우위에 있는 집단(남성, 대졸자, 고소득자)의 의견 방향으로 체계적인 의견 변화가 있었다면 이를 특정집단에 의한 의견우세로 판단하였다(Luskin, Fishkin, & Hahn, 2017 참고)¹⁰).

우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와 관련해서는 절반보다 훨씬 많은 분임조(87.5%)에서 ‘의견다양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의견없음’에

10) Luskin, R. C., Fishkin, J. S., & Hahn, K. S. (2017, upcoming). Deliberative Distortions? Homogenization, Polarization, and Domination in Small Group Delibera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s*.

서 어느 쪽이든 의견을 가진 쪽으로 이동한 참여자들이 늘어나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전반적인 원전정책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의견동질화(66.7%)가 나타났다.

약 절반의 분임토의 조에서 의견극화가 일어난 반면 나머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CDD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본 공론조사가 반드시 양극단화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반면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견극화가 일어난 분임조(66.7%)가 그렇지 않은 분임조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일정부분 공론조사가 양극단화를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분임토의조의 의견이 여성, 비대졸자, 그리고 저소득자의 의견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득권층이 아닌 집단의 의견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실제로는 좀 더 관심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의 의견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5-2〉 분임토의 의견 왜곡 정도 검증 (단위: 개 조)

판단 기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원전 정책
의견동질화 (homogenization)	6 (12.5%)	32 (66.7%)
의견극화 (polarization)	23 (47.9%)	31 (64.6%)
의견우세 (domination): 남성	15 (33.3%)	14 (29.2%)
의견우세 (domination): 대졸자	19 (39.6%)	25 (52.1%)
의견우세 (domination): 고소득자	14 (29.2%)	11 (22.9%)

2) 의견 교환의 균질성

분임 토의에서의 사회자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사회자는 사전 교육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분임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자의 토론 진행 방식이 분임조에 따라 다를 경우 토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CDD에서는 사회자의 토론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모든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토론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는다. 참여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이다. 이처럼 분임 토의 사회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공론조사에서 사회자의 역할 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높아 토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과정’을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토론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발언 순서에 따라 발언자를 원점(source node),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목표점(target node)으로 설정한 관계도(edge list)를 구성했다. 동일한 원점과 목표점이 여러 번 등장한 경우 발언 횟수에 따라 가중치(weight)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갑), (을), (병) 순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 (갑) 다음에 (을)이 발언한 경우가 2번 등장한다. 이 때 (갑)이 원점, (을)이 목표점이 되는 관계의 가중치는 2가 된다. (을)이 원점, (병)이 목표점이 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래 표와 같은 관계도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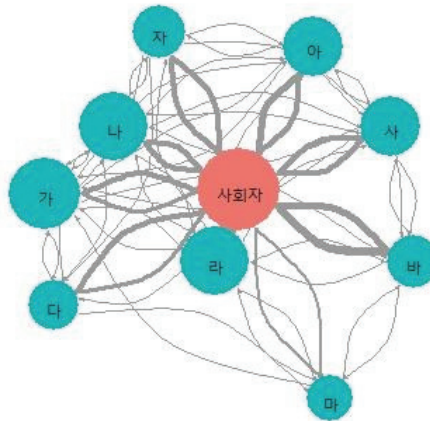
〈표 5-3〉 발언자 관계도(edge list) 예시

원점 (Source node)	목표점 (Target node)	가중치(발언 횟수)
(갑)	(을)	2
(을)	(병)	2
(병)	(갑)	1

이를 바탕으로 1모드(mode) 행렬을 구성해 토론 사회자와 참여자가 발언 관계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지 분석했다. 먼저 토론 사회자와 참여자의 내향도(in-degree)와 외향도(out-degree)를 계산했다. 발언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내향 중앙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을 계산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언자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43개 분임조의 발언자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도식은 부록에 별도로 첨부했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34조 발언자 네트워크는 사회자에 의존하는 토론 참여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네트워크에서 각 점(node)은 발언자를 의미하며 토론 참여자들(가~자)과 사회자가 이에 속한다. 두 발언자가 말을 주고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두 점을 이어주는 선의 두께도 두꺼워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자와 토론자 (가), (나), (다), (바) 간 말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았다. 그러나 토론자 간에는 상호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닌 사회자에 의존한 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 것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1〉 34조 발언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녹취 상태 불량으로 분석에서 제외한 5개 분임조를 제외하고 43개 분임조 중 36개 분임조(약 83.7%)에서 사회자의 내향 중앙성 및 외향 중앙성이 같은 분임에 속한 토론 참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참여자가 아닌 토론 사회자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반면 토론 참여자는 낮은 내향 중앙성 및 외향 중앙성을 보였다. 이는 토론자들은 사회자의 발언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43개 분임의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의 중앙성 평균을 비교한 결과 참여자 보다 사회자의 내향 중앙성 및 외향 중앙성 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아래 표에 제시했다.

〈표 5-4〉 조별 토론 사회자의 중앙성과 토론 참여자의 중앙성 평균

중앙성	중앙성	평균	표준편차	t값
내향 중앙성	토론 사회자 내향 중앙성	11.238	5.091	2.91***
	토론 참여자 내향 중앙성	2.873	0.984	
외향 중앙성	토론 사회자 외향 중앙성	11.128	5.149	2.58**
	토론 참여자 외향 중앙성	2.883	0.996	

** p<.05 *** p<.01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글자 수를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3개 분임의 토론 스크립트 215만 8,450자를 분석한 결과, 각 분임조에서 사회자의 평균 발언분량은 약 11,118자였는데 반해 토론자의 발언분량의 3,935자로 약 1/3 수준에 머물렀다. 또 각 분임조에서 사회자는 평균적인 참여자보다 발언분량이 약 3배 이상 많았으며, 최대 8.4배에 달했다. 발언 횟수에서의 사회자-참여자 간 격차는 사회자라는 위치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발언 분량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임 토의의 진행이 CDD의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5〉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 발언 분량 (43개 조)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회자의 평균 발언 횟수	110.3	50.60	30	312
토론자의 평균 발언 횟수	28.96	21.16	1	128
사회자의 평균 발언 글자 수	11117.95	4548.812	3574	23659
토론자 1 인당 평균 발언 글자 수	3935.31	2705.05	108	20491
각 분임의 사회자와 토론자의 평균 발언 분량 차이(배수)	3.082	1.668	0.689	8.434

* 사회자의 글자 수를 토론 참여자의 글자 수 평균으로 나눔

각 분임조별로 분석해 보면 18조, 6조, 20조, 1조 사회자의 발언분량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2조, 27조, 45조, 40조 사회자는 발언 분량이 가장 적어, 사회자 개입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6조, 18조, 4조, 5조 사회자의 발언 빈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27조, 32조, 40조, 13조 사회자의 발언 빈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자 선정 시 가장 바람직한 배경을 가진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자의 발언과 개입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분임토론이 전문가 토론을 참관하고 공사 재개/중단 전문가에게 물을 질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분임토의 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에 집중하지 않고 양측 전문가들 간 토론에 대해 각 조별로 질문을 만드는 미션을 완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 사회자의 개입과 발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분임토의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의 발언 기회는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분임토의가 과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혹은 재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심도 갖게 한다.

〈표 5-6〉 조별 사회자 발언 분량 (43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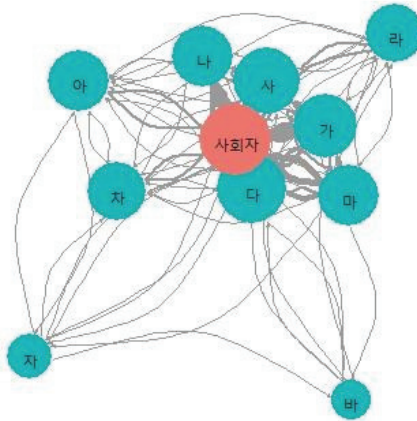
분임(조)	사회자 발 언량	사회자 발언횟수	사회자 in-degree centrality	사회자 out-degree centrality
1조	17028	125	13.89	13.89
2조	8175	121	12.10	12.10
3조	16497	132	13.20	13.20
4조	16316	172	17.20	17.20
5조	14069	171	17.10	17.10
6조	20503	312	31.10	31.20
7조	13437	138	13.70	13.80
8조	8184	94	8.64	8.55
9조	11660	147	14.70	14.70
10조	13333	86	8.60	8.60
11조	14151	105	10.50	10.50
12조	12444	107	9.82	9.73
13조	6593	48	4.80	4.80
14조	8111	57	5.70	5.70
15조	16451	74	8.22	8.22
16조	11808	116	12.78	12.89
17조	7572	58	5.80	5.80
18조	23659	187	18.70	18.70
19조	7599	93	9.30	9.30
20조	18118	154	15.40	15.40
21조	14735	144	14.40	14.40
22조	7839	64	6.50	6.40
23조	7711	65	6.60	6.50

분임(조)	사회자 발 언량	사회자 발언횟수	사회자 in-degree centrality	사회자 out-degree centrality
24조	10725	104	10.50	10.40
25조	8964	123	12.30	12.30
26조	8241	107	10.60	10.70
27조	3722	30	3.10	3.00
28조	14492	149	16.56	16.56
29조	6611	61	6.10	6.10
30조	6431	66	6.50	6.60
31조	11539	122	13.56	13.56
32조	3574	46	4.50	4.60
33조	12860	155	15.50	15.50
34조	14028	137	15.22	15.22
36조	9324	80	8.00	8.00
38조	12312	91	9.10	9.10
39조	8614	95	9.50	9.50
40조	4750	46	4.60	4.60
41조	11778	143	13.00	13.00
44조	13521	96	9.60	9.60
45조	4201	82	8.20	8.20
46조	6640	164	16.40	16.40
47조	9752	76	6.91	6.91

참여자가 균등하게 발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참여에 적극적인 몇몇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반면 소극적인 사람들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만일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건설 재개 찬성, 반대 등 한 쪽 분위기를 주도할 경우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동조 압력을 받아 침묵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자는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모든 토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발언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참여자간 발언 횟수가 매우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분임 41조 발언자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자와 토론자 (가), (다), (마) 사이에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반면 토론자 (자), (바)는 발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분임 토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 참여자가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참여자들은 딴 짓을 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이는 몇몇 참여자들이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독차지해 나머지 참여자들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 41조 발언자 네트워크



스크립트를 통해 토론자의 발언 분량을 비교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각 분임조에서 발언 분량이 가장 많은 토론자와 가장 적은 토론자를 비교했을 때 평균 약 13.381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심지어 분임조 xx의 경우 약 68.167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참여자가 어느 분임조에 속하는지에 따라 발언할 기회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7〉 토론 참여자 간 발언 분량 차이 (43개 분임조)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최다 토론자 발언 횟수	58.19	26.84	24	128
최소 토론자 발언 횟수	9.70	4.36	1	18
최다 토론자 발언 글자 수	8480.58	2979.65	3650	20491
최소 토론자 발언 글자 수	985.30	569.32	108	2246
각 분임의 발언 분량 최다 토론자와 최소 토론자의 차이* (배수)	13.381	12.986	1.648	68.167

* 최다 토론자의 글자 수를 최소 토론자의 글자 수로 나눔

〈표 5-8〉 43개 조에 대한 모든 텍스트 분석 결과

	발언분량				발언횟수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발언량	평균	분산	발언 횟수	발언 횟수	평균	분산	발언횟수	평균	분산	발언 횟수	평균	분산	Out-degree	평균	분산
1조	31542	3504.67	6902465.56	221	24.56	183.14	2.73	2.26	2.73	2.26	2.73	2.26	2.26	2.73	2.26	2.26
2조	39079	3907.90	1998906.89	211	21.10	33.09	2.11	0.35	2.11	0.35	2.11	0.35	0.33	2.11	0.33	0.33
3조	35977	3597.70	3808902.41	215	21.50	121.65	2.15	1.22	2.15	1.22	2.15	1.22	1.22	2.15	1.22	1.22
4조	30205	3020.50	2679137.25	263	26.30	46.61	2.63	0.47	2.63	0.47	2.63	0.47	0.47	2.63	0.47	0.47
5조	45303	4530.30	2778482.21	278	27.80	73.96	2.78	0.74	2.78	0.74	2.78	0.74	0.74	2.78	0.74	0.74
6조	45472	4547.20	10074130.36	456	45.60	559.24	4.57	5.59	4.57	5.59	4.56	5.59	5.59	4.56	5.59	5.59
7조	37019	3701.90	4524912.69	295	29.50	143.85	2.96	1.49	2.96	1.49	2.95	1.44	1.44	2.95	1.44	1.44
8조	40925	3720.45	8468077.70	374	34.00	737.27	3.08	5.99	3.08	5.99	3.09	6.09	6.09	3.09	6.09	6.09
9조	40898	4089.80	2218422.96	286	28.60	55.24	2.86	0.55	2.86	0.55	2.86	0.55	0.55	2.86	0.55	0.55
10조	34468	3446.80	4420646.16	180	18.00	28.00	1.80	0.28	1.80	0.28	1.80	0.28	0.28	1.80	0.28	0.28
11조	28839	2883.90	3200605.49	209	20.90	78.89	2.09	0.79	2.09	0.79	2.09	0.79	0.79	2.09	0.79	0.79
12조	36495	3317.73	4494574.56	240	21.82	260.33	1.98	2.17	1.98	2.17	1.98	2.15	2.15	1.98	2.15	2.15
13조	48927	4892.70	12630018.01	203	20.30	161.61	2.03	1.62	2.03	1.62	2.03	1.62	1.62	2.03	1.62	1.62
14조	32525	3252.50	2029025.85	140	14.00	41.60	1.40	0.42	1.40	0.42	1.40	0.42	0.42	1.40	0.42	0.42
15조	26354	2928.22	1794595.28	125	13.89	40.54	1.54	0.50	1.54	0.50	1.54	0.50	0.50	1.54	0.50	0.50
16조	26236	2915.11	2670970.54	229	25.44	271.80	2.84	3.43	2.84	3.43	2.83	3.36	3.36	2.83	3.36	3.36
17조	27898	2789.80	2629893.76	191	19.10	102.89	1.91	1.03	1.91	1.03	1.91	1.03	1.03	1.91	1.03	1.03
18조	32814	3281.40	7125332.84	366	36.60	674.64	3.66	6.75	3.66	6.75	3.66	6.75	6.75	3.66	6.75	6.75
19조	42843	4284.30	6533121.01	348	34.80	672.36	3.48	6.72	3.48	6.72	3.48	6.72	6.72	3.48	6.72	6.72
20조	21482	2148.20	1083049.96	190	19.00	43.60	1.90	0.44	1.90	0.44	1.90	0.44	0.44	1.90	0.44	0.44
21조	51046	5104.60	14061374.04	559	55.90	1077.29	5.59	10.77	5.59	10.77	5.59	10.77	10.77	5.59	10.77	10.77

발언분량		발언횟수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발언량	평균	분산	발언 횟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분산
22조	43202	4320.20	1969207.76	173	17.30	22.21	1.72	0.22	1.73	0.22
23조	32532	3253.20	3872316.16	200	20.00	76.40	1.99	0.78	2.00	0.76
24조	34225	3422.50	4747163.85	353	35.30	390.21	3.52	3.83	3.53	3.90
25조	34967	3496.70	6135009.81	421	42.10	510.69	4.21	5.11	4.21	5.11
26조	43923	4392.30	10713569.61	331	33.10	665.09	3.32	6.71	3.31	6.65
27조	33406	3340.60	9935582.24	289	28.90	486.29	2.88	4.76	2.89	4.86
28조	44157	4406.33	3863245.78	354	39.33	689.33	4.37	8.51	4.37	8.51
29조	44560	4456.00	7229241.00	352	35.20	407.56	3.52	4.08	3.52	4.08
30조	36118	3611.80	1980881.16	179	17.90	17.29	1.80	0.17	1.79	0.17
31조	27796	3088.44	5500922.02	185	20.56	98.91	2.28	1.18	2.28	1.22
32조	40364	4036.40	7114549.84	241	24.10	164.89	2.42	1.70	2.41	1.65
33조	39096	3909.60	5802345.84	231	23.10	84.49	2.31	0.84	2.31	0.84
34조	27383	3042.56	3192314.25	220	24.44	93.58	2.72	1.16	2.72	1.16
36조	36918	3691.80	1817783.96	195	19.50	59.25	1.95	0.59	1.95	0.59
38조	29646	2964.60	247034.84	179	17.90	16.49	1.79	0.16	1.79	0.16
39조	47526	4752.60	11506673.24	279	27.90	231.09	2.79	2.31	2.79	2.31
40조	60723	6072.30	8607385.61	359	35.90	198.89	3.59	2.01	3.59	1.99
41조	39465	3946.50	5203445.85	430	43.00	705.80	3.93	5.83	3.93	5.83
44조	50640	5064.00	6661631.00	381	38.10	470.29	3.81	4.70	3.81	4.70
45조	60955	6095.50	12961796.25	450	45.00	890.80	4.50	8.91	4.50	8.91
46조	61425	6142.50	35413808.65	414	41.40	618.64	4.14	6.19	4.14	6.19
47조	55004	5000.36	14809502.60	524	47.64	1503.32	4.33	12.42	4.33	12.42

3) 분임토의 주제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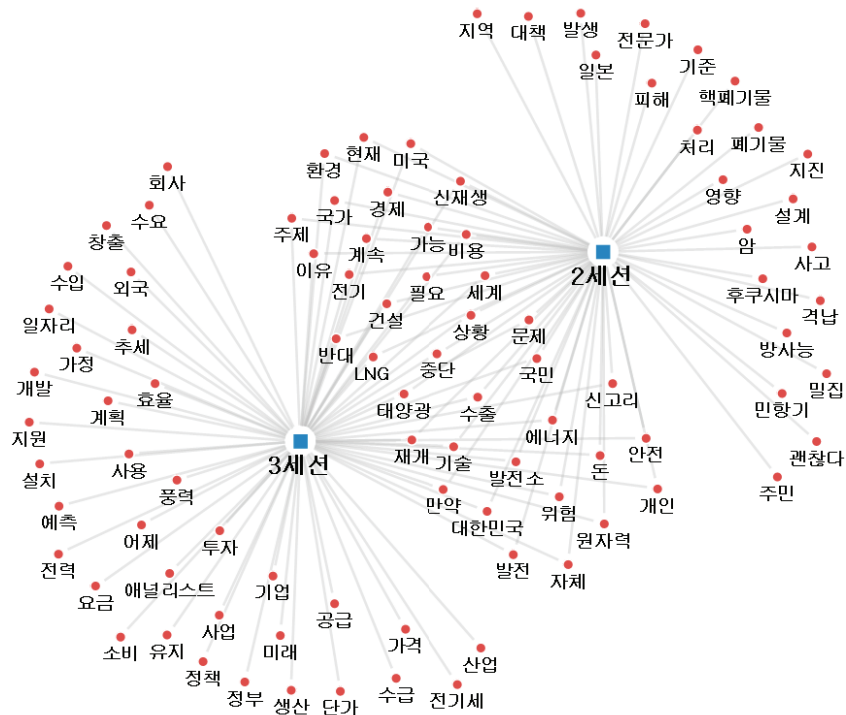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분임 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적절성을 간략해서 분석했다. 총론 토의와 마무리 토의를 제외한 두 번의 쟁점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세션에서 진행된 쟁점토의는 안정성과 환경성을, 3세션에서 진행된 쟁점토의는 전력수급 등 경제성을 다루었다. 토론 스크립트를 자연어 처리한 후 각 세션에서 100회 이상 등장한 단어로 2모드(mode) 행렬을 구성했다. 왼쪽과 오른쪽 양 끝에 배치된 단어들은 각각 2세션과 3세션에서 주로 언급된 단어들이고 중간에 있는 단어들은 두 세션에서 모두 중요하게 언급된 단어이다.

분석 결과 2세션에서는 ‘방사능’, ‘후쿠시마’ 등 안전과 환경에 대한 단어들이, 3세션에서는 ‘전기세’, ‘투자’ 등 경제성에 관한 단어들이 주로 나타났다. 동시에 2세션과 3세션 모두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단어로 ‘위험’, ‘안전’, ‘환경’, ‘비용’, ‘수출’, ‘돈’ 등이 있었다. 이는 2세션의 주제들이 3세션에서도 다루어졌으며, 반대로 3세션의 주제들이 2세션에서도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션이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속성상 분리되어 논의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즉 원전 정책 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문제를 논의할 때 ‘경제성’과 ‘안전’ 또는 ‘환경’ 관련 사안들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세션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세션과 3세션에서 각각 ‘민항기’와 ‘애널리스트’ 같이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단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했다. 민항기는 전문가 발표 중 민항기가 원자력 발전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는 전문

가 세션 발표자였다. 이는 분임 토의가 자료집에 기초하기 보다는 앞선 전문가 발표 내용에 상당 부분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분임 토의 모니터링 당시에도 자료집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또한 토의 중 논쟁이 일어날 때 자료집을 참고해 답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사회자도 자료집 참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다. 분임 토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출처에 근거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논의하기 보다는 전문가 발표를 듣고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림 5-3〉 2세션과 3세션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주요 단어들



4) 기타 고려 사항

이외에도 사회자의 토론 진행 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몇몇 분임조에서는 사회자가 거수투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수투표는 집단의 의견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력을 일으켜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 만일 한 쪽 입장을 가진 다수가 손을 들어 강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다수 의견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진행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사회자의 질문 선정방식이 분임조마다 달랐다. 토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해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분임 토의 사회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날 오전에 진행된 분임토의와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토론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생각을 나누기 보다는 전문가 질의응답 세션에서 제기할 질문을 만드는데 주로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몇몇 분임조는 1시간의 토론 중 30분 이상을 질문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도 했다. 사회자들이 토론 참여자에게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회자가 토론 참여자 개개인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다른 참여자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분임 토의 환경도 원활한 토론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 여러 분임조가 한 공간에서 토론을 실시하게 배치되어 다른 분임조의 논의가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 분임조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발언 중일 때는 다른 분임조에 속한 참여자들은 집중을 하지 못했고 토론이 중단되는 경우도 목격되었다. 실제로 분임 25~27조와 29~32조의 경우 소음으로 인

해 다른 분임조의 토의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되었다. 본 검증위원단은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참여조사 첫날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칸막이 설치와 일부 분임조들의 공간 재배정을 제안했다.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른 조의 토론 내용이 다 들리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에서 효율적인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숙의효과

마지막으로 숙의 효과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CDD의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1) 공론조사 참여가 이슈에 대한 의견 변화로 이어졌는지 여부, 2) 의견 변화가 주로 숙의의 효과로 일어났는지 여부, 3) 의견 변화가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일어났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차 20,006명에 대한 설문 조사부터, 2차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3차 토론 참여 전 설문조사, 4차 최종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면서 의견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 본 분석은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참여한 시민들 471명을 분석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1) 공론조사 참여 이후 의견변화

먼저 공론 조사 참여 전후의 의견변화가 유의미했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1차, 3차, 4차 설문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1=중단, 2=판단유보, 3=재개로 재코딩, 4차 최종의

경우 1=중단, 2=재개),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1=확대, 2=유지, 3=축소 재코딩)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 했다. 2차 설문조사에는 이 두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설문조사와 3차 설문조사 사이에는 사전 브리핑 자료집과 e-러닝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두 조사에서의 차이는 자료집의 ‘처치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3차와 4차 조사 사이에는 전문가 강연 및 Q&A, 그리고 분임 토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3차와 4차 조사에서 감지된 변화는 ‘토론회 처치 효과’로 볼 수 있다.

우선 사안별로 의견 변화에 대한 유의미성 검증(비율검증)을 실시했을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관한 의견 변화는 1차에서 3차, 그리고 3차에서 4차 조사사이에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과 “재개” 의견 모두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유보” 의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3.3%의 참여자만이 여전히 “유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집 및 e-러닝, 그리고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모두 일종의 ‘처치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에서는 의견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 사이에는 어떤 의견도 유의미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았다. 3차에서 4차 조사 사이에도 “원전 감소” 의견이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나머지 의견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1차에서 4차 조사 사이의 의견 변화를 고려했을 때도 “유지” 의견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속의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상황적 요인이 의견 형성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번

공론조사의 주제가 전반적인 원전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의견형성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 사안별 의견 분포와 변화 유의미성 검증

신고리 5·6호기	1차	3차	4차	1-3차	3-4차	1-4차
중단	27.6%	30.7%	39.4%	n.s.	p<.01	p<.01
재개	36.6%	44.7%	57.2%	p<.05	p<.01	p<.01
유보	35.8%	24.6%	3.3%	p<.01	p<.01	p<.01
원전	1차	3차	4차	1-3차	3-4차	1-4차
확대	14.0%	13.3%	9.7%	n.s.	n.s.	p<.05
유지	32.8%	37.2%	35.5%	n.s.	n.s.	n.s.
축소	45.6%	45.9%	53.2%	n.s.	p<.05	p<.05

요약하면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건설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38.7%가 의견 변화를 보였고 전반적인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도 36.9%가 의견 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번 공론조사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0〉 사안별 의견 변화 비율

신고리 5·6호기	1차-3차	3차-4차	1차-4차	3차-4차 (최종설문)	1차-4차 (최종설문)
중단 → 재개	2.3%	0.6%	5.00%	2.8%	8.3%
재개 → 중단	1.9%	1.9%	2.4%	1.0%	3.4%
변화 없음	64.3%	74.2%	61.3%	96.2%	88.3%
원전	1차-3차	3차-4차	1차-4차	3차-4차 (최종설문)	1차-4차 (최종설문)
확대 → 축소	1.8%	0.4%	2.00%	--	--
축소 → 확대	1.0%	0.3%	1.0%	--	--
변화 없음	65.1%	72.7%	63.1%	--	--

2) 의견 변화의 숙의효과 영향 여부

지금까지 공론조사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의견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견 변화가 ‘숙의’의 효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조사의 취지는 정보 제공과 분임토론 등으로 구성되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해당 공공 사안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여(knowledge gain)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숙의 효과’로 볼 수 있다.

CDD에서는 이러한 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사안에 대한 지식수준이 공론조사를 통해 증가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 그리고 의견 변화가 지식수준이 높아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럴 경우 의견 변화를 진정한 숙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의견변화가 숙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숙의 효과라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CD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 검증에서는 우선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 지식수준이 높아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공론조사의 설문지는 총 8개의 지식설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들은 주로 자료집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다. 동일한 8개의 지식 설문이 2차, 3차, 4차 설문 조사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마도 지식수준의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총 8개의 지식설문에서 정답을 맞힌 수를 계산하여 평균을 구했다. 그 결과 지식수준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 약 2개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3차에서 4차 조사 사이에 다시 약 1.2개의 지식 증가가 발생했다. 각 단계에서의 지식 증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사전 자료집 및 e-러닝, 그리고 토론회가 모두 상당한 정도의 정보 제공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 5-11〉 2차-4차 지식설문 전체 평균 정답 개수

2차	3차	4차	2차-3차	3차-4차	2차-4차
2.78	4.8	6.0	p<.01	p<.01	p<.01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론조사의 속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증대가 실질적인 의견 변화로 이어졌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12>는 각 사안별 의견 변화에 지식수준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 변화가 지식 습득과는 무관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원전 정책 의견 변화에도 지식 습득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의견 변화가 반드시 속의의 결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설문지에 포함된 지식 질문이 실질적인 지식 습득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참여자에게서 지식습득이 일어났다면 지식습득 차이가 의견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분석에서는 지식 습득이 의견 변화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공론조사 기간 동안 분명히 의견 변화도 있었고 상당한 정도의 지식 습득도 있었으나 이것이 모두 속의의 결과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표 5-12〉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 변화에 미친 지식수준 변화 영향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2-3차 지식 변화	-0.01 (0.01)	-0.01 (0.02)	-	-	-	-	0.01 (0.01)	0.02 (0.02)
3-4차 지식 변화	-	-	-0.03 (0.02)	-0.03 0.02	-	-	0.02 (0.02)	-0.04** (0.02)
2-4차 지식 변화	-	-	-	-	-0.03 (0.01)	-0.03 (0.02)	-	-
인구학 적변인 *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표 5-13〉 원전 정책 대한 의견 변화에 미친 지식수준 변화 영향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3-4차 의견 변화
2-3차 지식 변화	0.01 (0.01)	0.01 (0.01)	-	-	-	-	0.01 (0.02)	0.01 (0.01)
3-4차 지식 변화	-	-	0.02 0.02	0.01 0.02	-	-	0.02 (0.02)	0.02 (0.02)
2-4차 지식 변화			-	-	0.02 (0.01)	0.01 (0.01)	-	-
인구학적 변인*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비포함	포함

* 인구학적 변인: 거주지역, 성별, 연령, 지지정당, 교육수준, 이념성향, 가구소득수준

3) 숙의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났는지 여부

숙의효과가 시민참여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경제학적 변인별로 의견 변화 및 지식 습득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의견 변화 측면에서 주요 사회·경제학적 변인별 격차는 매우 미미했다.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이념, 교육수준에 따라 모두 1차, 3차, 4차 모두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견 변화에서는 인구학적 배경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 즉, 1차에서 3차 조사로의 의견변화나, 3차에서 4차 조사로의 의견변화에는 별다른 인구학적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이념 성향이었는데 진보는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보수는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다.

〈표 5-14〉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의견 평균

(1=중단, 2=판단유보 3=재개)

구분1	구분2	1차	3차	4차	1차-3차	3차-4차
성별	남성	2.28	2.25	2.30	0.02	0.05
	여성	1.96	2.03	2.06	0.06	0.20
	차이	p<.01	p<.01	p<.01	n.s.	n.s.
연령	20대	1.88	2.07	2.11	0.02	0.04
	30대	1.76	1.97	2.02	0.20	0.04
	40대	1.88	1.89	1.87	0.05	-0.02
	50대	2.28	2.15	2.22	-0.12	0.07
	60대 이상	2.52	2.51	2.56	-0.01	0.04
	차이	p<.01	p<.01	p<.01	p<.05	n.s.
교육	고졸 이하	2.35	2.35	2.42	0.01	0.08
	대졸 이상	1.98	2.04	2.06	0.06	0.01
	차이	p<.01	p<.01	p<.01	n.s.	n.s.
가구소득	하(<300만원)	2.13	2.17	2.22	0.06	0.05
	중(<600만원)	2.09	2.10	2.04	0.02	-0.06
	상(>600만원)	2.08	2.13	2.23	0.05	0.10
	차이	n.s.	n.s.	n.s.	n.s.	n.s.
이념	진보	1.71	1.73	1.67	0.02	-0.07
	중도	2.21	2.32	2.43	0.11	0.11
	보수	2.71	2.63	2.73	-0.06	0.08
	차이	p<.01	p<.01	p<.01	n.s.	p<.05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 변화를 살펴보면 각 시점별 의견이 인구학적인 배경에 의한 차이는 가구소득, 성별을 제외하고 1차, 3차, 4차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1차에서 3차에서와 3차에서 4차에서의 의견변화는 신고리 원

전 건설 의견과 마찬가지로 성별을 제외하고 인구학적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적인 의견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원전 정책 의견 평균
(1=확대, 2=유지, 3=축소)

구분1	구분2	1차	3차	4차	1차-3차	3차-4차
성별	남성	2.31	2.37	2.43	0.79	0.05
	여성	2.38	2.31	2.46	-0.06	0.16
	차이	n.s.	n.s.	n.s.	p<.05	p<.05
연령	20대	2.41	2.34	2.52	-0.02	0.18
	30대	2.59	2.54	2.64	-0.03	0.10
	40대	2.58	2.59	2.60	0.01	0.01
	50대	2.23	2.34	2.42	0.10	0.10
	60대 이상	2.00	1.97	2.12	-0.02	0.14
	차이	p<.01	p<.01	p<.01	n.s.	n.s.
교육	고졸 이하	2.15	2.11	2.22	-0.03	0.13
	대졸 이상	2.42	2.45	2.56	0.04	0.10
	차이	p<.01	p<.01	p<.01	n.s.	n.s.
가구소득	하(<300만원)	2.29	2.24	2.38	-0.02	0.15
	중(<600만원)	2.39	2.36	2.45	-0.01	0.07
	상(>600만원)	2.34	2.41	2.51	0.07	0.09
	차이	n.s.	n.s.	n.s.	n.s.	n.s.
이념	진보	2.62	2.63	2.74	0.03	0.11
	중도	2.65	2.25	2.34	-0.02	0.14
	보수	1.90	1.89	2.04	0.04	0.15
	차이	p<.01	p<.01	p<.01	n.s.	n.s.

아래 표에서는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원전에 관한 각 단계마다의 지식수준과 지식수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수준에 있어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에 따른 지식수준의 변화 차이는 전반적으로 성, 교육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공론조사 기간 중 전반적으로 고르게 지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2차와 3차 사이의 지식수준의 획득에 대한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론조사 실시 단계부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여성 시민참여단(2차 조사 남성평균: 3.22, 여성평균 2.33), 고졸 이하의 시민참여단(2차 조사 고졸이하 평균: 2.02, 대졸이상: 3.12)에서 큰 지식 획득 패턴이 발견되었다.

〈표 5-16〉 주요 인구학적 변인별 지식 평균

구분1	구분2	2차	3차	4차	2-3차 지식 변화	3-4차 지식 변화	2-4차 지식 변화
성별	남성	3.22	5.03	6.01	1.82	1.05	2.87
	여성	2.33	4.57	5.88	2.24	1.31	3.54
	차이	p<.01	p<.01	n.s.	p<.05	n.s.	p<.01
연령	20대	2.97	4.67	6.08	1.70	1.41	3.11
	30대	3.33	5.17	6.28	1.84	1.11	2.95
	40대	2.72	5.03	6.50	2.31	1.47	3.78
	50대	2.88	4.98	5.93	2.10	0.95	3.04
	60대 이상	2.18	4.28	5.30	2.10	1.01	3.11
	차이	p<.01	p<.01	p<.01	n.s.	n.s.	p<.05
이념	진보	2.97	4.99	6.19	2.01	1.20	3.22
	중도	2.57	4.71	5.80	2.14	1.10	3.23
	보수	3.01	4.74	6.07	1.73	1.32	3.06
	차이	n.s.	n.s.	n.s.	n.s.	n.s.	n.s.
교육	고졸 이하	2.02	4.36	5.50	2.34	1.13	3.47
	대졸 이상	3.12	5.01	6.21	1.89	1.20	3.09
	차이	p<.01	p<.01	p<.01	p<.05	n.s.	n.s.
가구 소득	하(<300만원)	2.45	4.49	5.61	2.04	1.12	3.16
	중(<600만원)	2.81	4.73	5.87	1.92	1.14	3.06
	상(>600만원)	3.08	5.11	6.37	2.04	1.25	3.29
	차이	n.s.	p<.05	n.s.	n.s.	n.s.	n.s.

3. 소결

숙의 영역에 대한 검증은 가) 자료집 전달과정, 나) 분임 토론, 그리고 다) 숙의 효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우선 사전자료집 배포단계에서는 찬반 양측이 사실 관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료 전달이 지연되었던 점은 문제이다. 또한 양측이 토론회 기간 동안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사실 관계’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양측 전문가들의 기술적 전문성 차이가 존재했으며 일부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던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숙의는 누구의 지식이 더 정확하고 누가 토론을 더 잘하고 누가 더 호소력이 있는가를 평가해 표를 주는 게임이 아니다. 이는 숙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분임토의 진행과정에 있어 CDD가 규정하는 왜곡 현상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일부 의견의 ‘동질화’와 ‘양극단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임 토의 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또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균일하게 주어지지 않아 일부 적극적인 토론자들이 토론을 주도하는 경향도 감지되었다. 향후 공론조사 진행에 있어서는 사회자에 대한 사전 교육 뿐 만 아니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음 문제로 인해 참여자들이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여 장소 선정과 세팅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조사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의견 변화와 지식 습득이 일어

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공론조사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러나 의견 변화가 숙의의 효과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 변화와 지식 습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 변화가 대체로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균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우선 공론조사는 참여자의 숙의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 유권자가 공론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숙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공론조사의 바람직한 목적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주체가 공론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공론조사는 CDD가 시행 주체가 되어 진행하면서 자료집 제작부터 설문 작성, 그리고 자료 분석까지 수행했다. 반면 이번 공론조사는 이미 ‘탈원전’을 정책 방향으로 밝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공론조사 수행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이번 공론조사는 CDD의 자문을 받아 공론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국내 조사업체가 자료집 작성부터 설문 작업, 그리고 사회자 훈련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론조사의 목적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운 조사업체가 공론화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주도함으로써 결과의 수용성 확보를 위태롭게 했다. 공론화지원단은 효과적으로 공론조사의 진행을 뒷받침했으나 공론화위원회의 관료화와 관료적 시각의 일정 관리 및 자료 통제는

향후 공론조사에서는 사라져야 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자료집 배포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토론장에서조차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따라서 향후 공론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체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숙의과정의 검증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준비과정이 짧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자료집 작성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돌발 상황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공론조사의 주목적은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가상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의견 형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적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과 분석에서도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또한 어떤 상황 인식이 의견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론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론조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검증위원회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열흘 남짓이었으며 그나마도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과 10시간 안팎의 시간만이 주어졌다. 분임 토의 녹취록 또한 연구진이 추가적인 코딩을 해야 하는 상태로 전달되어 실제 분석 기간은 4-5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데이터의 전면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VI. 소통 영역 검증

1. 소통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공론화위원회는 법률, 조사, 숙의, 소통의 네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본 검증보고서 또한 그 각각 분과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상의 분과 위원회들은 각자 7월말이나 8월초 그 활동을 시작하여 전체적인 공론화위원회 사업의 각종 업무들을 분담하였다. 본 장은 그 중 소통분과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소통’이라는 기능적 영역에 대한 재음미와 공론화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다.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법·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했던 법률분과나 조사과정을 책임졌던 조사분과,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최종토론회에 이르는 내용생산과 프로그램을 책임졌던 숙의분과에 비해 ‘소통’분과에 지워진 과제는 애초에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이해한 방식은 〈대국민홍보〉의 연장선상이었다. 이것은 공론화위원회 활동기간 중 개최된 소통분과 회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 6-1〉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체들의 참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부딪혀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례 없는 과정이었으며 특히 미리 합의된 의사결정의 규칙이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규칙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규칙

설정이 소통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이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체들 간의 ‘소통’이 매우 첨예한 과제였다. 다시 말해,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부터 공론조사의 실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들 간의 소통은 매우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반면, 이를 대국민 홍보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문제를 잠재적으로 내포한 것이었다.

〈표 6-1〉 소통분과 회의와 논의 사항 (출처: 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

회의일자	논의 사항
1차 회의 (8월 3일)	○ 홈페이지 개설 전 검토사항 점검 ○ 온라인 홍보방안 토의
2차 회의 (8월 8일)	○ 홈페이지 점검 ○ 공론화 관련 홍보 및 광고 추진방안 ○ 공론화 관련 카드뉴스, 웹툰(안) 보고
3차 회의 (8월 18일)	○ 공론화 관련 TV, 신문 등 인터뷰 계획 ○ 카드뉴스, 웹툰 등 콘텐츠 감수
4차 회의 (8월 31일)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계획 ○ 9월 이후 주요 홍보사안 실행계획 ○ 카드뉴스 검토
5차 회의 (9월 21일)	○ 공론화 소통 홍보사항 점검 ○ TV토론회 및 종합토론회(TV생중계 및 취재지원) 고려사항 검토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의견의 상호불일치를 해결하고 상호 수긍할만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과 숙고 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¹¹⁾. 숙의의 핵심은 단순한 기계적인 의견의 집약이 아니라 상호 설득과 의견의 변환(가능성)에

11) Amy Gutmann and Dennis Thompson,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있으며, 이는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다. 이러한 참여 주체들의 상호신뢰와 협업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이들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이며, 소통분과위원회가 담당했어야 할 영역은 애초 정의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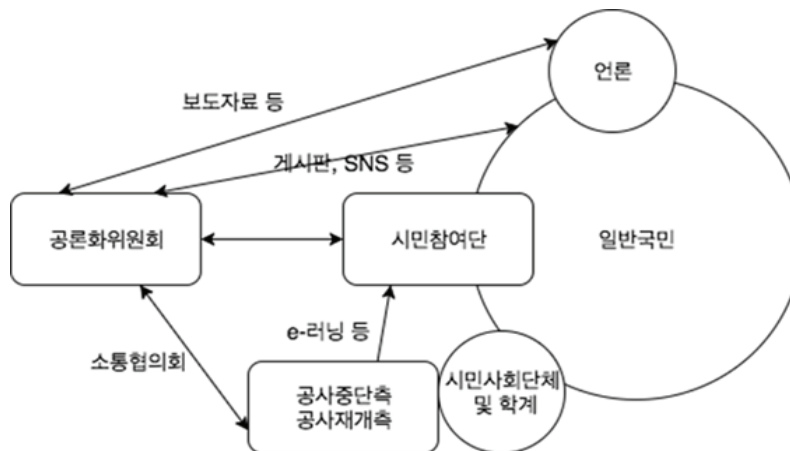
소통의 내용과 범위가 대국민홍보의 관점으로 축소된 것은 전체적인 공론화 위원회의 소통분야가 이미 시작부터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되었음을 함의한다.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첫째,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주체들인 시민참여단이나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의 소통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였으며, 그러한 협의와 소통의 기록조차 충분히 남기지 않았다. 둘째, 공론화위원회가 매우 중요시하고 고심한 언론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의 경우에도 그것이 홍보의 관점으로 치환되면서 매우 일방향적인 정보의 제공에 그치게 되었다.

따라서 소통영역에 대한 검증은 우선 소통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금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했던 소통의 채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어떤 소통이 실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주체들과 이들 사이에 벌어진 소통과정을 우선 설명할 것이다.

2. 소통 영역 검증의 내용 및 범위

공론화 과정, 특히 소통의 관점에서 관련된 주체들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다. 아래의 <그림 6-1>은 해당 주체들과 그 사이의 가능한 소통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6-1> 소통의 주체들과 소통의 흐름



우선 공식적인 주체들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졌던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과정의 중핵이라 할 만한 시민참여단, 그리고 숙의과정의 내용을 제공할 공사 중단측과 공사 재개측이 구성한 소통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 삼자간의 상호작용은 소통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공론화 과정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 언론, 그리고 시

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각 주체들 간 가능한 소통의 관계들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며, 매우 많은 부분은 비공식적 채널에서 수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그림의 화살표가 주체들 간의 가능한 소통의 상호관계라면 화살표 위에 적시된 내용은 실제로 시행되었거나 기록이 남아있는 소통의 채널들이다.

예컨대, 공론화위원회는 언론을 대상으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실제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시민참여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게시판들 통해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의 양측을 공론화위원회에 결합시키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 자체는 시민참여단이 수행할 숙의과정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이러닝(e-Learning)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됐으며, 해당 사이트는 시민참여단이 게시판의 형태로 질문이나 요구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물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사이에는 공론화의 전 과정에 걸친 여러 소통의 채널들이 있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공식적 소통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소통을 검증할 것이다.

3. 소통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소통 영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라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우선 소통이라는 과정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며 공식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포착되고 기록으로 남겨진 소통의 내용과 그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 소통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소통의 양상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공식적으로 남겨진 기록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특히 중요한 비판적인 평가는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소통의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 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회의, 특히 소통분과위원회나 소통협의회에서 토의되고 진행된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간단한 회의록, 약 2시간 분량의 회의가 평균 A4지 한두 장으로 요약된 회의록으로만 남아있다. 독일 탈원전 공론화의 경우 2014년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위원회’는 회의록 전체 뿐 아니라 회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연방의회 홈페이지에 영구 보관하고 대중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소통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회의참여주체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구성된 채널과 누적된 소통의 자료들이 위원회의 해산과 함께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단에게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던 e-러닝 사이트가 11월 중순 폐쇄되었고 이와 함께 게시판에 존재했던 시민참여단의 요구사항이나 질의응답 내용도 함께 삭제되었다. 물론 해당 사이트는 시민참여단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폐쇄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은 사실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이전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하던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삭제되었으며, 검증보고서가 작성된 12월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메인 웹사이트에 불과하다.¹²⁾ 메인 웹사이트의 자료실에 링크된 시민참여단이 활용했던 건설 중단/재개 양측이 제작한 e-러닝 사이트의 동영상들은 물론 연결이 끊겼다.

셋째, 가장 중요한 소통의 고리인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사이에 일어난 기록은 일정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발송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소통 기록의 미비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 소통분과위가 자임했던 언론·대국민 홍보와 관련된 자료들은 최소한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어떤 요청과 질문을 받았으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운영이나 일정과 관련된 소통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내용과 관련된 2차적인 소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산된 담당자들이 각기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포괄적인 업무 영역으로서 시민참여단의 요청과 질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본 검증보고서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애초 공론화위원회가 정의한 언론과 대국민 소통의 내용을 검토한다. 언론과의 소통에 있어

12) 본 보고서에서는 e-러닝 사이트의 게시물들만을 따로 받아 검증에 사용하였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와 관련된 대국민소통은 검증하지 못했다.

서는 어떠한 보도자료들이 제공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보도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대국민소통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했던 홈페이지와 “제언방”으로 명명된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대국민소통의 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것이다. 시민참여단과 재개/중단 양측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e-러닝 사이트에 남겨진 질의응답 게시판(Q&A)를 통하여 진행된 양상을 파악하려 한다.

공론화위원회와 재개·중단 양측이 구성한 협의체인 소통협의회의 활동을 검토하고 어떤 의제들이 토의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참여한 갈등의 지점이었던 곳에서 어떠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4. 소통 영역 검증 결과

가. 언론: 보도자료와 보도

대통령이 6월 17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고 천명하고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이 결의된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7월 24일이었다. 매우 급박하고 짧은 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안게 된 부담은 이중적이었는데, 그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교적 생소했던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내용을 널리 알리며, 동시에 공론화 자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적어도 위원회 출범시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고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은 편도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은 이상의 두 가지 임무를 해당 기간에 완수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자원을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들은 8, 9월에 걸쳐 10회 TV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기자간담회와 취재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라디오와 포탈 등에 광고를 통해 공론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홍보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위원회 구성이 추진되던 7월 7일부터 시민참여단 종합 토론회가 진행된 10월 15일까지 총 2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18건의 기본 보도자료와 4건의 보도참고자료, 1건의 보도해명자료가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6-2>에 요약되어 있다.

<표 6-2>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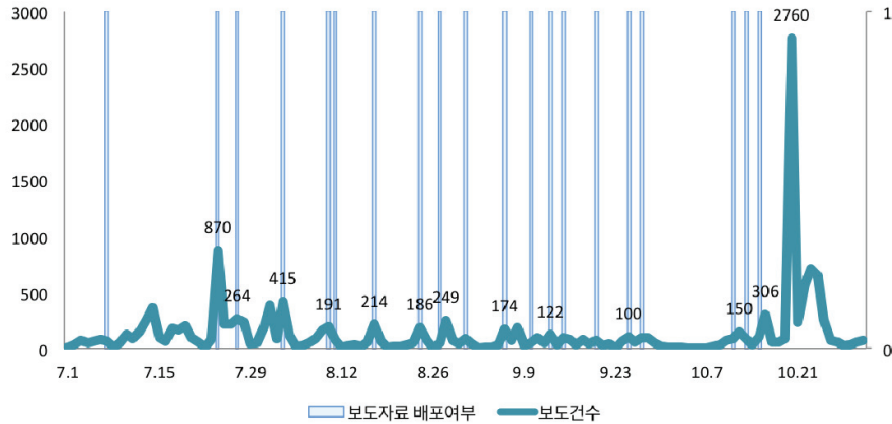
순번	일시	보도형태	보도내용
1	17.07.07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추진
2	17.07.24	보도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3	17.07.24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4	17.07.27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5	17.08.03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6	17.08.10	보도자료	건설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
7	17.08.10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8	17.08.10	보도자료	건설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개최
9	17.08.11	보도해명자료	'공론화 전 과정을 용역업체에 떠넘긴 공론화위' 해명
10	17.08.17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11	17.08.24	보도자료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 선정 및 1차조사 실시계획
12	17.08.27	보도참고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현장 방문
13	17.08.31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14	17.09.06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15	17.09.10	보도자료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조사 마무리
16	17.09.13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17	17.09.15	보도자료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및 500명 구성분포 소개
18	17.09.20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19	17.09.25	보도자료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위원회 입장문
20	17.09.27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11차 회의 결과
21	17.10.11	보도자료	공론화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
22	17.10.13	보도참고자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환영사
23	17.10.15	보도참고자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폐회사

보도자료는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배포되었으며, 위원회 구성부터 토론회 진행 당일까지의 진행 및 논란 사항에 관한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7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8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 내용이 공유되었다. 특히 8월 11일, 9월 25일에는 공론화위원회에 제기된 논란 사항들에 관해 해명 자료 또는 위원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것이 해명자료나 입장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기초적인 사실의 서술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 인식이 높지 않았던 초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과 소개, 그리고 명확한 일정을 언론을 통해 알리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 소통이나 홍보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위원회의 준비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았고 공론화 과정과 일정이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명확한 제도적 제한과 규칙들이 확립되지 않았던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반드시 직접적인 언론의 관심이나 보도로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된 총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수직선들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기를 나타낸다. 전반적인 경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가장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는 물론 위원회의 최종권고가 발표된 10월 20일로 약 2,700여건의 기사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는 위원 위촉 보도자료가 배포된 7월 24일의 870건이었다. 요컨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그 시작과 끝에 가장 높았다.

〈그림 6-2〉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시기 및 언론보도건수 비교



‘시작과 끝’의 사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시민참여단이 확정된 9월말 이후 최종토론회 이전 시기까지는 긴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위원회의 보도자료도, 언론보도도 매우 저조하였다. 해당 시기가 단순한 휴지기(休止期)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개별적으로 자료집과 e-러닝을 수행하던 시기였고 토론회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공론조사의 의미나 이후 일정, 그리고 재개·중단 양측의 의견이나 협의 과정을 언론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나. 직접적인 대(對)국민 소통: 홈페이지와 제언방

공론화위원회가 개설한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는 가장 핵심적인 대국민 소통 창구였다. 해당 홈페이지는 8월 10일 개설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내용과 핵심적인 사항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로 작동하였다.

홈페이지의 운영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6-3>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뉴를 극도로 단순화한 디자인적 요소나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동되는 기술적 요소는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용자 빈도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다. 정확한 총 조회수는 알 수 없지만 한 카드뉴스(“공론화 과정 궁금하셨죠!”)가 게시 후 조회수가 9,000회 이상 기록된 점, 제언방의 게시물 수가 8,700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위원회 소개”이외에도 위원회의 각종 활동과 일정, 그리고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으며 이는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E-mail : web@sgr56.go.kr 저작권 보호 정책
Copyright(c)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All Rights Reserved



〈표 6-3〉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원회 홈페이지는 많은 종류와 분량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왜 공론화인가?”라는 항목에서 “카드뉴스”라는 형식을 통해 공론화 과정 자체의 의미와 과정을 짧은 문답식으로 풀어내었다는 점이다. 해당 카드뉴스들은 홈페이지의 전 게시물을 통틀어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제공된 카드뉴스들은 3건에 불과하고 그 중 한 건은 최종권고안에 대한 재구성이며, 다른 2건은 8월말과 9월초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드뉴스라는 형식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나 카드뉴스가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한 전파력이 매우 높은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론화 과정의 후반부에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공론화 자료모음”의 하위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 또한 상당히 알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에서 사용했던 자료집을 그대로 제공하였고 또한 이들이 e-러닝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했던 중단·재개 양측의 동영상¹³⁾도 제공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단순히 참여단이 아닌 국민 일반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시민참여단에게 주어지는 논쟁적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로부터의 검증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다.

〈표 6-3〉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구성 사항

시작 화면 메뉴		소 메뉴 및 세부 메뉴 탭
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위원장 소개 및 인사말 위원회 개요 위원소개 분과위원회 조직도 공론화지원단
	•위원회 활동	인터뷰/기고 보도자료 추진일정 주간계획 위원회 회의록
왜 공론화인가	•카드뉴스 •만평 및 웹툰	
공론화 참여방	•공론화 제언방 •공론화 자료모음 •공지사항	
공론화 자료모음	•숙의자료집 •토론회 자료 •TV토론회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13) 동영상의 경우에는 e-러닝 사이트의 폐쇄와 함께 지금은 연결이 끊긴 상태이다.

‘소통’이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면 홈페이지는 근본적으로 불특정
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공표하는 형식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
에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제언방(참여방 하위)”은 다른 홈페이지의 공간
들과는 다른 차원의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소통의 채널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피드백의 경로였기 때문이다.

공론화 제언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등) 계정 및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
능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는 한편, 실명인증에 준하는 조건을 통하
여 익명 게시판의 전형적인 폐해들도 피하려 노력하였다. 게시자명의 처음절만
남기는 익명화의 배려 또한 돋보였다.

〈그림 6-4〉 제언방 게시물의 날짜별 추이



그 결과, 8월 10일부터 12월 5일(현재)까지 총 8765건의 글이 공론화 제언방에 게재됐다. 조회 수 역시 각 글마다 적게는 10회부터 많은 경우 1,200 여회에 달하며, 댓글을 통해 참여자 간 의견을 주고받는 양상도 나타난다.

〈그림 6-4〉는 해당 제언방의 게시물 수를 날짜별로 나타낸 것이다. 언론의 보도 추이와는 약간 다르게 게시물들은 시작부터 꾸준히 8월 하순에 걸쳐 상당한 수준¹⁴⁾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긴 공휴일이었던 10월초에 시작해서 최종토론회가 진행되던 10월 중순 직전까지 최고점을 이룬다. 개인적인 의견 피력이 주를 이루지만 공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작성된 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참여 분포가 특정 참여자들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시자의 아이디(ID) 혹은 계정명이 일부 익명 처리돼 있어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내용의 글이 동일 계정명으로 매일 1회 이상 게재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엘**의 계정명으로 “전기료 10년새 63% —급등에... 호주, 신재생 에너지 정책 포기(10.19)”, “캐나다 온타리오의 신재생 비극... 전기료 5배로 폭등, 일자리 7만개 사라져(10.19)”, “췌! 비밀? 꼭꼭 숨은 원전올림픽(10.17)”, “멈췄던 원전 80%까지 재가동... 일본 ‘원전 체제’로 빠르게 복귀중(10.16)”과 같은 콘텐츠가 매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가장 주요하게는, 공론화 제언방이 위원회와 대중의 원활한 쌍방향 소통 채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제언에 대한 위원회 측의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언방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14) 물론 모든 게시판의 게시 패턴과 동일하게 주중에 가장 많은 글과 조회가 몰리고 주말과 휴일에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주기적 ‘계절성(seasonality)’을 보인다.

기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않지만, 매일 모니터 하며 업무에 참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을 바랍니다.”

사실 소통분과위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기 소통분과위 회의록을 보면 “제언 내용을 유형별로 묶어 1주 단위로 게시(소통분과위 2차 회의결과 보고서, 1쪽)”하거나, 최소 “자동답변 프로그램(소통분과위 1차 회의결과 보고서, 1쪽)”이나 “게시판 운영정책 및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소통분과위 1차 회의결과 보고서, 1쪽)”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응 부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글도 상당수 눈에 띄는 바, 공론화위원회가 일반 국민들과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쌍방향 소통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제언방의 게시판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최종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공론화 절차가 끝나고 공론화위원회가 해산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 작성 이후의 소통까지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이는 앞서도 밝혔던 투명한 자료의 공개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활동 기간 중에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며 이후 기록을 남기는 역할이야말로 공론위원회가 수행했어야 할 소통의 주요 내용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다. 시민참여단과의 소통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 중 하나였으며 이 집단만큼 언론이나 여론 등의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주목을 받은 그룹은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471명의 ‘결정’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들에게 누가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이들을 외부적 접촉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에게 정보와 가이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이나 관리능력과 직결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검증보고서는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특히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민참여단을 대했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건설 중단/재개 측과의 소통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상호견제 속에서 최소화되었으며, 일방향의 모습을 띠었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 정보는 극단적으로 제한된 형태의 공식적 자료집이나 동영상,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일정과 관련된 통화·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한되었다. 시민참여단의 입장에서는 위원회나 양측 전문가들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채널이 참여단 선정 직후에서 최종발표회에 이르는 약 3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e-러닝 사이트 동영상에 딸린 Q&A 게시판으로 한정되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시민참여단이 매우 적극적으로 해

당 게시판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폭넓은 범위의 질문과 문제제기를 던졌다면, 이에 대한 대답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결국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는 불만들도 다수 발견된다. 최종토론회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만난 한 참여단(50대·남)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는 없었다. 와서 몇 번 [발표와 분임토의] 해보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긴 하겠는데 그 전에는 좀 답답했다.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니까 그래도 사회자[분임모더레이터를 지칭함]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그래도 훨씬 낫다. [Q&A 게시판은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동영상 보기 바쁜데 그걸 누가 보나. 답변도 금방 안 올라오는 것 같던데 그거 몰라면 다시 또 거기[해당 동영상]로 찾아가야 하지 않는가...”

한 사람의 의견으로 모든 문제점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작 공론화 조사의 대상인 시민 참여단과의 소통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둘째, 여타 소통의 채널과는 달리 시민참여단 개인과 공론화위원회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의 기록은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남겨졌다. 앞서 언급한 e-러닝 사이트가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전에 폐쇄된 것을 포함하여 이들로부터 어떤 반응과 질문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거나 적

어도 검증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았다¹⁵⁾.

공식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검증을 한다거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사이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후의 가능한 공론조사의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기록의 수집에서부터 그 체계적인 아카이브와 이후 사용자들에 대한 제공에까지 이르는 상당히 광범한 업무 영역이 애초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의되지 않았으며 이를 담당할 부서나 책임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하에서는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건설 중단/재개 측 사이에 그래도 남아있는 최소한의 소통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e-러닝 동영상 Q&A 게시판 분석을 수행한다.

사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한 e-러닝 사이트는 공론화조사에서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그 함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에너지 정책이라는 복잡한 의제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선정 후 최종토론회 이전까지 약 한달의 기간 동안, 충분한 학습된 의견(informed opinion)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해당 e-러닝 사이트는 시민참여단만이 고유한 로그인 아이디로 접근권을 부여받아서 이들의 동영상 학습 진행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 동영상에 부가된 게시판 기능을 통하여 궁금한 질문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Q&A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의 논의처럼 시민참여단과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건설 중단

15) 시민참여단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기록은 존재한다. 그 내용은 크게 오리엔테이션과 최종토론회에 참여하는 이송수단과 관련된 것, 자료집 배송 및 동영상 시청 안내, 순회토론회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어떤 회신이나 추가적인 질문과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재개 양측의 소통의 유일한 공식채널로 기능했던 것이다.

〈표 6-4〉 e-러닝 동영상 Q&A 게시판 질의와 응답

	질의대상	질의건수	응답건수	강의별 질의수	
총게시물수: 112	위원회	20	17	1강(17)	2강(37)
	건설중단측	67	63	3강(13)	4강(20)
	건설재개측	52	41	5강(13)	6강(15)

〈표 6-4〉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당 기간 동안에는 게시된 질문의 총 숫자는 112건¹⁶⁾이었으며 질의는 애초 해당 강의동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다른 여타의 소통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게시판은 양측에서 제작한 동영상의 내용 뿐 아니라 공론화과정 전반의 진행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제기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위원회’의 명의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앞서 지적한 공식적 소통채널이 미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해당 게시판은 그 형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첫째, 일반적인 소통의 채널로서 따로 디자인된 게시판이 아니어서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이전 게시물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질의에 대한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답변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참여단과 위원회의 질의응답은 매우 시사적이다.

16) 최종토론회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게시물은 제외하였다.

〈표 6-5〉 참여단의 질문과 위원회 답변 (덧글 26번)

참여단 질문	위원회 답변
[제목]질의응답이 시작된 지 벌써 7일째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다면…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여부는 공사 중단 촉구 공사 재개측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위원회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할 수 없는(또는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시민참여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측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Q&A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건설 중단/재개 양측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게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판에 제기된 질문들은 게시 동영상 자료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더 주요하게는 공론화과정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제안, 나아가 불만 등이 많았다. 공식 자료집의 제공이 늦어진대거나 답변의 부실이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다수 발견된다. 요컨대 동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공론화과정의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들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소통영역을 평가하는 본 장은 이러한 불만과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왜 그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수렴되고 처리되어야 할 시민참여단과 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소통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해당 Q&A 게시판에는 최종토론회가 끝나고, 심지어 최종권고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올라온 게시물들이 있었다. 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결과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받지 못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군가는 해주어야 하지 않는지를 묻는 게시물들이었다. 해당 게시판은 e-러닝 사이트가

11월 18일자로 폐쇄되면서 같이 사라졌다.

라. 소통협의회: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의 소통

공론화위원회가 당면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는 공사 중단·공사 재개로 참여하게 대립된 양측을 공론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의 역할로 끌어들이오는 과제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러한 역할은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그 결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 정책, 환경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분포된 시민·학술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했던 만큼, 대통령과 국무회의,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의 의미가 주목받으면서 이들 또한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들과의 정례적인 협의채널로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기로 제5차 정기회의(8.17.)에서 결정하였고 이후 소통협의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료집의 작성이나 학습자료 제작, 토론회 발표 등의 세부사항들의 조율이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통협의회에 건설 중단측에서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대표로 참여하였고, 건설 재개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참여하였다.

소통협의회 결성이 불가피했던 만큼 상당한 수준의 갈등이 거의 공론화과정 전 기간에 걸쳐 이곳에서 참여하게 드러났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토론회 발표자의 선정과 발표시간 배분에서부터 자료집과 동영상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과 난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가장 주요한 성과로 참여한 대립의

주체들인 양측에 대한 소통창구를 단일화하고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그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거둔 성과의 매우 큰 부분이 소통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고 이들을 끝까지 공식적 소통의 채널 안에 잡아둘 수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소통협의회는 '17년 8월 17일(목)을 시작으로 10월 10일(화)까지 약 53일의 기간 동안 총 7차례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1차, 3차 및 6차는 건설중단측과 건설재개측이 위원회와 개별 협의회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2, 4, 5, 7차에서는 위원회와 양측이 모두 참가하는 합동 협의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회차에서 토의된 내용은 부록으로 제공된 <표 6-8>에 정리하였다.

〈표 6-6〉 소통협의회 개최

회차	1	2	3	4	5	6	7
일시	중단: 8.17. 재개: 8.18.	8.23	중단:8.31. 재개:9.1.	9.8.	9.21.	9.29. 중단:13시 재개:15시	10.10.
회의시간	1시간50분	2.5시간	1.5시간	4.5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표 6-7〉 회차별 참석 사항

회차		1	2	3	4	5	6	7	총참여 회수
위 원 회 측	위원장	○	○	-	-	-	○	○	4
	이희진	○	○	○/○	○	○	○	○	8
	유태경	○	-	○/-	○			-	3
	이성재	○	○	○/○	○	○	○	-	7
	김영원	-	○	-	-	-	○	-	2
	남형기	-	○	-	-	○		○	3
	박지운	-	-	-	-	○		-	1
	김원동	-	-	-	-	-	○	-	1
	김정인	-	-	-	-	-	○	-	1
	이윤석	-	-	-	-	-	-	○	1
	조사팀장	-	○	-	-	-	-	-	1
	정보지원팀장	-	○	-	-	-	-	-	1
	총 인원	4	7	3/2	3	4	6	4	-
중 단 측	염형철	○	○	○	-	-	○	○	5
	이현석	○	○	○	○	○	-	○	6
	이영희	○	○	-	○	-	-	○	4
	신지형	○	-	-	○	-	-	-	2
	조현철	-	-	○	-	-	○	-	2
	양이원영	-	-	-	-	○	○	-	2
	장다울	-	-	-	-	○	-	-	1
	총 인원	4	3	3	3	3	3	3	-
재 개 측	강재열	○	○	○	○	○	○	○	7
	임채영	○	-	○	○	○	-	-	4
	한장희	○	○	○	○	-	○	-	5
	윤지웅	-	○	-	-	-	-	-	1
	이종수	-	-	○	-	○	○	○	4
	문주현	-	-	-	-	-	○	○	2
	총 인원	3	3	4	3	3	4	3	-
회별 총석인원		11	13	10/9	9	10	13	10	-

소통협의회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2명~7명 사이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중단측과 재개측은 각각 매 회차마다 3~4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위원회측에서는 이희진 위원이 매회차 개별 협의회와 합동 협의회에 모두 참여하여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 중단측에서는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총 6차례 참가하였다. 재개측에서는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7차례의 소통 협의회에 모두 참석하여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

그 이외에도 중단측에서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영희(가톨릭대 교수)가 주된 참석자였으며 재개측의 경우, 강재영(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한수원 지역상생처장) 등이 주된 참석자였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소통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건설재개 측'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중단측은 소속 연구자의 주장이 정부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제한을 주장하였으며 재개 측은 전문가의 의견 표명은 정당한 것으로 그리고 숙의과정에서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숙의분과위원회'와 '소통협의회' 등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율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양측의 견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였다. 공론화위원회 내의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해결방안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한 조정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공론화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 적의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요컨대, 소통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정부를 통해 우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건 그 노력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의 소통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을 정부 부처를 통해 상명하달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통협의회가 작동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결론적으로 해당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¹⁷⁾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론 건설재개 측은 환영을, 건설중단 측은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그것이 공론화 과정의 파행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소통영역을 검토하는 본 장은 해당 결정의 설득력을 평가하는데 있지는 않다. 다만 이곳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소통협의회라는 짧은 기간에 구축된 소통의 채널이 존재했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초기의 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마치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

17) <정출연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참여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최종 입장>, 해당 부분을 이곳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연구원이 전문분야의 연구자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문적 식견을 발표하려는 기회를 막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공론화 의제에 대해 양측 사이에 치열하게 의견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해 연구원의 의견이 어느 한 쪽의 입장과 같다고 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 공론화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아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국민 일반이나 시민참여단에 대해 풍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숙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아도 참여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는 공론화의 이러한 본질적 요청에 반한다. 그밖에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어느 한쪽의 전문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누군가의 참여가 공론화 운영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서는 여전히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그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이상의 유권해석이 결과적인 파행으로는 치닫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소통영역에서 보였던 최고의 성과는 팽팽하게 대립된 건설 중단/재개 측을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회라는 틀로 견인했던 점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론화 과정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점이 되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도화된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표 6-8〉 회차별 소통협의회 주요 내용

회차	주요 의제	주요 협의 내용
1차 (개별)	협의회 운영방안	■ 중단측 - 개별회의 참석 규모 확대하여 다양한 입장 전달 - 언론 발표 전 공론화 진행절차 사전 협의 -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참여 배제하자 ■ 재개측 - 협의회 개최 전 주제를 사전에 공유
	1차 간담회 요구사항 답변	■ 중단측 -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속기록 공개 허용 - 조사 실시 전 주민 및 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 발표 -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토론 자료집 등이 시민사회에 무료 제공되어야 - 후쿠시마 사고 현장도 방문해야 ■ 재개측 - 건설 반대측의 탈핵퍼포먼스 전면 중지 - 시민참여단 내 시민행동측 참여 견제
	속의자료집 작성 관련	■ 중단측 - 속의 의제를 신고리 56호기로 한정하지 말아야. 탈원전 가치판단을 토대로 하자. - 자료집 목차에 관해 의견 제시하겠음.
	위원회 요청사항	향후 일정 조정
2차 (합동)	전문가 자문그룹 시민참여단 1차조사 기본계획(안)	■ 재개측 자문위원 후보자의 친원전 성향 이유로 자문그룹 구성 자체를 반대(중단측) ■ 1차 조사 실시하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재개 선택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측안을 금일(8.23)까지 제출
	향후 주요일정(안)	■ 중단측, 시민참여단의 현장방문계획 반대 ■ 토론회 등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 추석연휴 기간에도 속의프로그램이 필요(TV토론회일정조정)
	토론자료집 내용(안)	■ 목차 관련, 7개 주제로 양측이 자유롭게 선정 ■ 양측 각각 20쪽 이내 통일된 서식에 따라 양측이 작성
3차 (개별)	토론자료집 검토(안)	■ 중단측 - 토론집 의제 관련, 주제목 외 '부제목' 추가 여부 결정할 것

회차	주요 의제	주요 협의 내용
		- 양측 교차 검토 등 거쳐 자료집 최종 확정할 것(9.14) ■ 재개측 - 토론집 의제 관련, '부제목' 추가 반대 - 중의적, 자극적 표현 자제 바람
	자료검증 전문가그룹 구성 운영(안)	■ 중단측 - 전문가그룹 필요성 여부, 그룹 분야 추가 여부 등 검토 필요 ■ 재개측 - 구성 운영안에 찬성
	동영상 제작(안)	■ 중단측 - 강의는 유명인 아닌 전문가가 수행해야 - 강의 시간 15분 이내로 - 자극적 내용 자제하고 동영상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 ■ 재개측 - 강의는 유명인 아닌 전문가가 수행해야
	기타	■ 중단측 - 공개토론회 일정, 대상 등 사전 협의 필요 - 최종토론회는 10.9(월) 선호 ■ 재개측 -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제를 탈원전 아닌 '신고리5,6호기'로 한정하고 정부의 탈원전 홍보 자제 - 검증위원회 구성에 동의
	4차(합동)	■ 토론자료집 목차 및 내용 - 지금까지 논의해 온 7가지 의제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가 가치중립적 내용을 작성 ■ 동영상 목차 및 e-러닝 학습자료 제작 - 1강~5강까지는 의제별로 15분씩 제작, 6강은 나머지 의제를 포함한 종합 의견을 25분 분량으로 제작 ■ 자료검증 전문가그룹 운영 - 양측이 주장하는 논거가 아니라 자료출처, 숫자, 통계, 그래프에 한정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자료 검증 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 ■ 공론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측이 이견이 없어 구성하기로 확정 ■ 지역순회토론회 등 관련 협조 - 지역순회토론회, YTN 토론회 등 개최일정을 공유
	5차(합동)	■ 시민참여단 자료집 제작 및 검토 관련 - 중단측이 9.10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재개측은 9.24일(日)까지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 - 건설중단 측은 수정된 결론부분, 건설재개 측은 수정된 서론부분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상호 교환하여 검토하기로 ■ 자료집 목차 - 목차 최종 합의 ■ 자료집 배포 - 2,000부 인쇄하되 건설 중단/재개 측 자료 내용의 순서를 달리해 각각 1,000부씩 인쇄하고, 시민참여단에게도 순서를 달리하는 자료집을 동일 수로 배포 ■ e-러닝 제작 관련 - 양측이 자율성을 갖고 제작, 목차는 통일된 제목을 사용 - 시민참여단이 올린 질문에 대해 중단/재개 양측 전문가 답할 수 있도록

회차	주요 의제	주요 협의 내용
6차(개별)		- 조치 ■ 기타 - 10.13~15일 종합토론회의 참관인단 수는 5인에서 8인으로 확대
		■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계획(안) - 양측, 토론회계획(안) 검토후 발표자 등 의견 회신 ■ 전문가 참여방안 - 양측 입장에는 변화 없으나, 위원회 결정을 보고 입장화신 ■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의 토론회 참여 적절성 - 위원회에서 논의 후 후속조치 여부 등 결정
7차(합동)		■ 종합토론회 시간 조정 - 14일(토)1세션 발표시간 확대(20분→25분), 점심시간 축소(80분) ■ 질의응답 운영 관련 - 질문 및 응답 시간, 반론 및 재반론 시간 운영 논의 ■ 발표순서 - 세션1(총론) 발표순서는 당일 제비뽑기, 이후 발표순서는 번갈아 ■ 참관인수 확대 - 8명에서 10명으로 ■ 지역주민 인터뷰 - 건설 재개/중단 입장 지역주민 의견의 균형적 전달 중요 ■ 현장영상 소개 - 양측 입장 확인, 최종 소개 방안은 위원회에서 결정 ■ 미래세대토론회 영상 - 양측 검토 후 위원회에 10.10일(화)까지 의견 제출, 위원회 최종 결정

5. 소결

공론조사와 숙의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이론적인 관점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의견이 다른 타인과 지적 설득과 토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래 지녔던 견해나 의견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신뢰와 협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일 수밖에 없다.

반면, 공론화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선택한 경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토론과 상호작용보다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소통분과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매우 협소하게,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국민홍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이나 건설 중단/재개 양측과의 소통을 맡을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였으며, 언론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쌍방향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향적인 홍보에 그치게 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소통영역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장은 ‘소통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공론화과정의 행위자들을 구성하는 위원회, 시민참여단, 공사 중단·공사 재개 측, 언론, 일반 국민 등의 사이에서 벌어진 소통의 양상을 밝히고 평가하였다.

공론화위원회가 애초에 정의하였던 홍보의 관점에서 ‘소통’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적극적인 내용을 알렸으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다만 시민참여단이 선정된 이후부터

최종토론회가 개최되는 기간, 즉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이르는 약 1달간의 기간 동안에는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 자체나 그 합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개설한 홈페이지는 직접적인 대(對)국민 홍보창구였으며 그 운영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과 동영상 등의 학습 자료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했으며 회의록을 제공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였다. 카드뉴스나 웹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는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실이 돋보이나 지속적인 내용생산이 아쉬웠다.

홈페이지에 포함된 ‘제언방’은 단순한 일방향적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 활용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게시글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이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쌍방향 소통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과의 소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작 숙의의 주체가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의 접근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극단적인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이들을 위한 소통의 채널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e-러닝 사이트의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에 국한되었다. 애초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 동영상의 내용에 대한 문의·응답이 오가야 할 공간을 시민참여단이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이나 일정에 대한 의견 개진의 채널로 사용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가장 소통영역에서 성공을 거둔 부분이 있다면 건설 중

단/재개 양측을 공식적인 소통협의회라는 틀로 끌어들이고 이를 유지했다는 점일 것이다. 애초 스스로 정의한 대국민홍보로서의 소통은 아니었지만 양측과의 소통의 문제가 공론화 과정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통협의회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지속적인 협상과 토론의 플랫폼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후반부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참여와 관련된 매우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상황이 공론화 과정 자체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공론화위원회가 소통영역을 대국민홍보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통할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기록’의 문제로 여전히 남는다. 소통이 공식·비공식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체계적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소통의 기록을 수집하고 축적하며 기록으로 보전하는 역할을 맡은 책임 있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통의 많은 기록들은 게시판의 댓글과 축약된 회의록 정도로 남게 되었다.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일은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영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미래에 있을지 모를 또 다른 공론조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아쉽게 놓쳤던 또 다른 ‘소통’의 의미는 미래와의 소통이기도 하였다.

VII. 결론

어떤 공론조사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정치적 상황, 사회문화적 조건, 사안의 특수성과 보편성, 공론의 범위 등에 따라 공론조사의 성공조건도 달라진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진행과정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하고 그 잣대에 맞춰 공론조사에 점수를 매기고 싶어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공론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공론조사의 필요성, 공론화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시민참여형조사의 대표성과 객관성, 숙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소통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2017년 7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시점부터 무수한 비판과 논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논란은 대개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점이나 오류들에 초점을 두거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의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 등 매우 근본적인 담론인 경우가 많았다.

본 보고서에 담은 검증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공론조사에 대한 검증 결과는 기존 비판이 지나치게 근본적이거나 지엽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아주 작은 내용부터 전반적 조직 구조와 수행 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들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물론 완벽한 공론조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검증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검증위원회는 모든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획득하고자 했으며 주어진

자료의 한계와 검증기간의 제약 내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를 간결하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본 보고서에 담았다. 물론 모든 검증 결과는 검증위원회가 가진 정보와 자료, 그리고 사실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제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엄밀히 말해 공론조사가 아닌 기존의 공론조사를 재설계한 시민참여형조사이다. 시민참여형 조사가 정책 자문인지, 공공자문인지, 또는 정책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471명의 대표성을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조사방법론 입장에서는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종 결과가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상의 차이로 인하여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공론조사가 추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에 대한 통계적 혹은 사회과학적 이론 및 실증의 요소가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① 법·제도

이번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가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는, 시민참여형조사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숙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의 권한 범위,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와 관련되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또는 행정절차법과 연계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결국 향후 공론조사는 대의제와 공론화 제도의 상생방안을 찾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슈와 관련 담당 부처 안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와 법

를도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시민참여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 선정에 대한 절차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 검증위원회, 조사위탁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기능과 역할의 구체화와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론조사의 경우 조사과정 설계와 자료검증에 있어 사실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팩트 체크 기관이 필요하다.

② 조사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숙의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참여형조사에서 성, 연령, 지역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의 건설 재개/중단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무응답율이 비교적 높았고, 소득수준, 지지정당, 그리고 정치성향 등에서 공론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분포에서 있어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은 최종 질문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표본설계 및 조사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론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조사 자료가 검증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절실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수집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사 자료 수집과 수집 결과의 공개는 공론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③ 숙의

숙의 영역에 대한 검증은 자료집 전달과정, 분임 토론, 그리고 숙의 효과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우선 사전자료집 배포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찬반 양측이 사실 관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료 전달이 지연되었고, 양측이 토론회 기간 동안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사실 관계'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 전문가들의 전문성 차이가 존재했으며 일부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숙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분임토의 진행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높고 몇몇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토론을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론조사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의견 변화와 지식 습득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숙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변화와 지식 습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견 변화가 숙의의 효과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④ 소통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근본적으로 선택한 경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토론과 상호작용보다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의 소통을 맡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였고, 언론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향적 홍보에 그쳤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민참여단이 선정된 이후부터 종합토론회가 개최되는 기간, 즉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지 못했고, 공론화 과정 자체나 그 합의대한 보다 깊이 있는 담론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제언방’은 일방향적 홍보가 아닌,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게시글에 대한 위원회의 답변이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쌍방향적 소통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공론화위원회가 소통영역을 대국민홍보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통합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은 ‘기록’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소통이 공식·비공식적 영역 전반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 기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통을 기록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기록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맡은 책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통의 많은 기록들은 게시판의 댓글과 축약된 회의록 정도로 남게 되었다.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일은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영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한다. 이는 또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공론조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아쉽게 높였던 또 다른 ‘소통’의 의미는 미래와의 소통이기도 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는 성공적이었는가? 그 전에 성공한 공론조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공론조사를 구성하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다양해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은 최소한 충족해야 성공한 조사라고 알려져 있다. 우선 공론조사는 이해당사자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참여와 발언기회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지도 모르는 결정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결정되거나,

발언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그런 상태에서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공론장이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상호 토론기회를 제공할 때, 공론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이슈는 날이 갈수록 전문화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로 다루어지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론조사 결과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 치우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론조사 결과와 의사 결정의 정당성은 낮아진다. 정보 제공에서 소외된 당사자가 그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토론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심의민주주의 이론에서 공론장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강조하는 공적 대화로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와 공적 관점에서의 이익과 가치의 재정의가 발생하는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 일반 국민 모두가 공론조사의 참여자가 되는 방법은 국민투표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논쟁을 일반 국민들이 공유하는 것은 공론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는 공론조사를 수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 결정의 결과를 되도록 많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론조사 결과의 국민적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의 공정성의 확보이다.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만이 상반된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참여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검증위원회는

이 물음에 대해 성공 또는 실패로 답하기보다는 검증 내용을 최대한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사실과 정보에 기초해 제시함으로써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판단의 책임을 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대한 평가는 성공/실패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향후 공론조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김원용. 2003. “공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조사 (公論調査)(deliberative poll) 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1: 209-232.
- 이준웅. 2017. “공론조사 주제적 적용의 범위와 방법론적 타당성.” 《한국조사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1-9.
- 조성겸·조은희·윤정로. 2006. 공론조사에서 토론 절차의 타당성.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1-786.
- Gastil, J., and Dillard, J. P. 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1): 3-23.
- Gutmann, A., and Thompson, D. 2009.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부록 1

분석 결과 표

〈표 1〉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1.8%	5.9%	2.9%	20.6%
	건설재개	5.9%	47.1%	0.0%	52.9%
	판단유보	8.8%	17.6%	0.0%	26.5%
합 계		26.5%	70.6%	2.9%	100.0%

전체: 34명

〈표 2〉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3.5%	2.7%	0.9%	17.1%
	건설재개	0.9%	44.1%	0.0%	45.0%
	판단유보	16.2%	21.6%	0.0%	37.8%
합 계		30.6%	68.5%	0.9%	100.0%

전체: 111명

〈표 3〉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7.7%	5.6%	1.2%	34.6%
	건설재개	2.2%	28.7%	0.6%	31.5%
	판단유보	16.2%	15.6%	2.2%	34.0%
합 계		46.1%	49.8%	4.0%	100.0%

전체: 321명

〈표 4〉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80.0%	0.0%	80.0%
	판단유보	0.0%	20.0%	0.0%	20.0%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5명

〈표 5〉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3%	3.9%	1.7%	24.9%
	건설재개	2.6%	44.6%	0.4%	47.6%
	판단유보	11.2%	14.2%	2.1%	27.5%
합 계		33.0%	62.7%	4.3%	100.0%

전체: 233명

〈표 6〉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6.5%	5.9%	0.8%	33.2%
	건설재개	1.7%	23.9%	0.4%	26.1%
	판단유보	19.7%	20.2%	0.8%	40.8%
합 계		47.9%	50.0%	2.1%	100.0%

전체: 238명

〈표 7〉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2%	0.0%	4.5%	22.7%
	건설재개	0.0%	40.9%	0.0%	40.9%
	판단유보	13.6%	18.2%	4.5%	36.4%
합 계		31.8%	59.1%	9.1%	100.0%

전체: 22명

〈표 8〉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2.8%	5.1%	2.6%	20.5%
	건설재개	2.6%	33.3%	0.0%	35.9%
	판단유보	17.9%	25.6%	0.0%	43.6%
합 계		33.3%	64.1%	2.6%	100.0%

전체: 39명

〈표 9〉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3.0%	8.0%	0.0%	31.0%
	건설재개	3.4%	32.2%	0.0%	35.6%
	판단유보	16.1%	16.1%	1.1%	33.3%
합 계		42.5%	56.3%	1.1%	100.0%

전체: 87명

〈표 10〉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4.6%	3.3%	0.0%	27.9%
	건설재개	9.8%	32.8%	1.6%	44.3%
	판단유보	16.4%	6.6%	4.9%	27.9%
합 계		50.8%	42.6%	6.6%	100.0%

전체: 61명

〈표 11〉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1.1%	7.9%	0.0%	28.9%
	건설재개	0.0%	30.3%	0.0%	30.3%
	판단유보	22.4%	17.1%	1.3%	40.8%
합 계		43.4%	55.3%	1.3%	100.0%

전체: 76명

〈표 12〉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8.6%	2.6%	2.6%	33.8%
	건설재개	0.0%	36.4%	0.0%	36.4%
	판단유보	10.4%	18.2%	1.3%	29.9%
합 계		39.0%	57.1%	3.9%	100.0%

전체 : 77명

〈표 13〉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0%	3.3%	3.3%	26.7%
	건설재개	0.0%	33.3%	0.0%	33.3%
	판단유보	13.3%	26.7%	0.0%	40.0%
합 계		33.3%	63.3%	3.3%	100.0%

전체: 30명

〈표 14〉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3%	4.0%	1.3%	30.7%
	건설재개	0.0%	38.7%	1.3%	40.0%
	판단유보	13.3%	16.0%	0.0%	29.3%
합 계		38.7%	58.7%	2.7%	100.0%

전체: 75명

〈표 15〉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0.0%	25.0%	0.0%	25.0%
	판단유보	0.0%	50.0%	0.0%	50.0%
합 계		25.0%	75.0%	0.0%	100.0%

전체: 4명

〈표 16〉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3.5%	5.9%	1.5%	30.9%
	건설재개	1.5%	22.1%	1.5%	25.0%
	판단유보	13.2%	27.9%	2.9%	44.1%
합 계		38.2%	55.9%	5.9%	100.0%

전체 : 68명

〈표 17〉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5.0%	11.3%	1.3%	47.5%
	건설재개	0.0%	17.5%	1.3%	18.8%
	판단유보	12.5%	16.3%	5.0%	33.8%
합 계		47.5%	45.0%	7.5%	100.0%

전체 : 80명

〈표 18〉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1.5%	2.8%	1.9%	36.1%
	건설재개	0.0%	26.9%	0.0%	26.9%
	판단유보	23.1%	13.0%	0.9%	37.0%
합 계		54.6%	42.6%	2.8%	100.0%

전체: 108명

〈표 19〉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2%	2.9%	1.0%	24.0%
	건설재개	3.8%	39.4%	0.0%	43.3%
	판단유보	17.3%	15.4%	0.0%	32.7%
합 계		41.3%	57.7%	1.0%	100.0%

전체: 104명

〈표 20〉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8.1%	3.6%	0.9%	12.6%
	건설재개	4.5%	55.9%	0.0%	60.4%
	판단유보	9.9%	17.1%	0.0%	27.0%
합 계		22.5%	76.6%	0.9%	100.0%

전체: 111명

〈표 21〉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0%	2.9%	0.0%	22.9%
	건설재개	2.9%	34.3%	1.4%	38.6%
	판단유보	15.7%	21.4%	1.4%	38.6%
합 계		38.6%	58.6%	2.9%	100.0%

전체: 70명

〈표 22〉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3.4%	5.2%	1.5%	30.2%
	건설재개	2.0%	34.2%	0.2%	36.4%
	판단유보	15.5%	16.5%	1.5%	33.4%
합 계		40.9%	55.9%	3.2%	100.0%

전체: 401명

〈표 23〉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8.5%	3.8%	3.8%	46.2%
	건설재개	7.7%	11.5%	0.0%	19.2%
	판단유보	30.8%	3.8%	0.0%	34.6%
합 계		76.9%	19.2%	3.8%	100.0%

전체: 26명

〈표 24〉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42.9%	3.9%	0.0%	46.8%
	건설재개	0.6%	14.3%	1.3%	16.2%
	판단유보	21.4%	14.9%	0.6%	37.0%
합 계		64.9%	33.1%	1.9%	100.0%

전체: 154명

〈표 25〉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2.8%	6.4%	1.8%	21.1%
	건설재개	2.3%	38.1%	0.0%	40.4%
	판단유보	12.4%	23.9%	2.3%	38.5%
합 계		27.5%	68.3%	4.1%	100.0%

전체 : 218명

〈표 26〉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1%	3.1%	1.5%	7.7%
	건설재개	3.1%	75.4%	0.0%	78.5%
	판단유보	4.6%	7.7%	1.5%	13.8%
합 계		10.8%	86.2%	3.1%	100.0%

전체 : 65명

〈표 27〉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0.0%	80.0%	80.0%
	판단유보	0.0%	20.0%	0.0%	20.0%
합 계		0.0%	20.0%	80.0%	100.0%

전체: 5명

〈표 28〉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66.7%	0.0%	0.0%	66.7%
	건설재개	0.0%	0.0%	0.0%	0.0%
	판단유보	33.3%	0.0%	0.0%	33.3%
합 계		100.0%	0.0%	0.0%	100.0%

전체: 3명

〈표 29〉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6.2%	5.1%	1.7%	23.1%
	건설재개	4.3%	39.3%	0.0%	43.6%
	판단유보	17.1%	15.4%	0.9%	33.3%
합 계		37.6%	59.8%	2.6%	100.0%

전체: 117명

〈표 30〉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7.3%	8.6%	0.0%	25.9%
	건설재개	1.2%	34.6%	0.0%	35.8%
	판단유보	21.0%	17.3%	0.0%	38.3%
합 계		39.5%	60.5%	0.0%	100.0%

전체: 81명

〈표 31〉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3.3%	5.0%	3.3%	21.7%
	건설재개	5.0%	38.3%	1.7%	45.0%
	판단유보	13.3%	16.7%	3.3%	33.3%
합 계		31.7%	60.0%	8.3%	100.0%

전체: 60명

〈표 32〉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3.3%	0.0%	0.0%	33.3%
	건설재개	0.0%	33.3%	0.0%	33.3%
	판단유보	0.0%	33.3%	0.0%	33.3%
합 계		33.3%	66.7%	0.0%	100.0%

전체: 3명

〈표 33〉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1.3%	3.4%	1.0%	35.6%
	건설재개	0.5%	29.8%	0.5%	30.8%
	판단유보	13.5%	18.3%	1.9%	33.7%
합 계		45.2%	51.4%	3.4%	100.0%

전체: 208명

〈표 34〉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2명

〈표 3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7%	5.5%	0.0%	31.2%
	건설재개	0.0%	33.9%	1.8%	35.8%
	판단유보	17.4%	11.9%	3.7%	33.0%
합 계		43.1%	51.4%	5.5%	100.0%

전체: 109명

〈표 3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2.6%	3.2%	6.5%	32.3%
	건설재개	3.2%	25.8%	0.0%	29.0%
	판단유보	12.9%	25.8%	0.0%	38.7%
합 계		38.7%	54.8%	6.5%	100.0%

전체: 31명

〈표 3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5%	7.4%	0.0%	25.9%
	건설재개	7.4%	37.0%	0.0%	44.4%
	판단유보	7.4%	18.5%	3.7%	29.6%
합 계		33.3%	63.0%	3.7%	100.0%

전체: 27명

〈표 3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5%	3.7%	0.0%	22.2%
	건설재개	3.7%	33.3%	0.0%	37.0%
	판단유보	25.9%	14.8%	0.0%	40.7%
합 계		48.1%	51.9%	0.0%	100.0%

전체 : 27명

〈표 3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0%	0.0%	0.0%	20.0%
	건설재개	6.7%	20.0%	0.0%	26.7%
	판단유보	40.0%	13.3%	0.0%	53.3%
합 계		66.7%	33.3%	0.0%	100.0%

전체: 15명

〈표 4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5%	10.5%	0.0%	21.1%
	건설재개	0.0%	31.6%	0.0%	31.6%
	판단유보	15.8%	31.6%	0.0%	47.4%
합 계		26.3%	73.7%	0.0%	100.0%

전체 : 19명

〈표 4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16.7%	0.0%	16.7%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33.3%	0.0%	33.3%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 6명

〈표 4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7.0%	3.6%	0.9%	31.5%
	건설재개	0.0%	36.9%	0.0%	36.9%
	판단유보	13.5%	18.0%	0.0%	31.5%
합 계		40.5%	58.6%	0.9%	100.0%

전체 : 111명

〈표 4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0.0%	0.0%	0.0%	30.0%
	건설재개	10.0%	40.0%	0.0%	50.0%
	판단유보	10.0%	10.0%	0.0%	2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 10명

〈표 4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1.4%	7.1%	0.0%	28.6%
	건설재개	14.3%	28.6%	0.0%	42.9%
	판단유보	14.3%	14.3%	0.0%	28.6%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 14명

〈표 4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8.6%	0.0%	0.0%	28.6%
	건설재개	0.0%	35.7%	0.0%	35.7%
	판단유보	7.1%	28.6%	0.0%	35.7%
합 계		35.7%	64.3%	0.0%	100.0%

전체: 14명

〈표 4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40.0%	0.0%	4.0%	44.0%
	건설재개	8.0%	16.0%	0.0%	24.0%
	판단유보	20.0%	8.0%	4.0%	32.0%
합 계		68.0%	24.0%	8.0%	100.0%

전체: 25명

〈표 4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7.1%	0.0%	7.1%
	건설재개	0.0%	28.6%	0.0%	28.6%
	판단유보	21.4%	35.7%	7.1%	64.3%
합 계		21.4%	71.4%	7.1%	100.0%

전체: 14명

〈표 4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5.0%	10.0%	0.0%	25.0%
	건설재개	0.0%	55.0%	0.0%	55.0%
	판단유보	5.0%	15.0%	0.0%	20.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20명

〈표 4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2%	7.7%	7.7%	34.6%
	건설재개	0.0%	38.5%	0.0%	38.5%
	판단유보	11.5%	15.4%	0.0%	26.9%
합 계		30.8%	61.5%	7.7%	100.0%

전체: 26명

〈표 5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66.7%	0.0%	66.7%
	건설재개	33.3%	0.0%	0.0%	33.3%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33.3%	66.7%	0.0%	100.0%

전체: 3명

〈표 5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5.0%	4.6%	0.5%	40.1%
	건설재개	1.8%	18.9%	0.9%	21.7%
	판단유보	24.4%	13.8%	0.0%	38.2%
합 계		61.3%	37.3%	1.4%	100.0%

전체: 217

〈표 5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	8.2%	0.0%	10.2%
	건설재개	2.0%	73.5%	0.0%	75.5%
	판단유보	0.0%	14.3%	0.0%	14.3%
합 계		4.1%	95.9%	0.0%	100.0%

전체: 49명

〈표 5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78.6%	0.0%	78.6%
	판단유보	21.4%	0.0%	0.0%	21.4%
합 계		21.4%	78.6%	0.0%	100.0%

전체: 14명

〈표 5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5.9%	0.0%	5.9%
	건설재개	0.0%	47.1%	0.0%	47.1%
	판단유보	5.9%	29.4%	11.8%	47.1%
합 계		5.9%	82.4%	11.8%	100.0%

전체: 17명

〈표 5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20.0%	0.0%	20.0%
	판단유보	15.0%	15.0%	0.0%	30.0%
합 계		65.0%	35.0%	0.0%	100.0%

전체: 20명

〈표 5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25.0%	50.0%	0.0%	75.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4명

〈표 5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3.1%	5.5%	3.4%	22.1%
	건설재개	2.8%	37.9%	0.0%	40.7%
	판단유보	9.0%	24.8%	3.4%	37.2%
합 계		24.8%	68.3%	6.9%	100.0%

전체: 145명

〈표 5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0%	0.0%	0.0%	20.0%
	건설재개	0.0%	80.0%	0.0%	8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5명

〈표 59〉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66.7%	0.0%	66.7%
	건설재개	33.3%	0.0%	0.0%	33.3%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33.3%	66.7%	0.0%	100.0%

전체: 11명

〈표 60〉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5.0%	4.6%	0.5%	40.1%
	건설재개	1.8%	18.9%	0.9%	21.7%
	판단유보	24.4%	13.8%	0.0%	38.2%
합 계		61.3%	37.3%	1.4%	100.0%

전체: 79명

〈표 61〉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	8.2%	0.0%	10.2%
	건설재개	2.0%	73.5%	0.0%	75.5%
	판단유보	0.0%	14.3%	0.0%	14.3%
합 계		4.1%	95.9%	0.0%	100.0%

전체: 41명

〈표 62〉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78.6%	0.0%	78.6%
	판단유보	21.4%	0.0%	0.0%	21.4%
합 계		21.4%	78.6%	0.0%	100.0%

전체: 31명

〈표 63〉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5.9%	0.0%	5.9%
	건설재개	0.0%	47.1%	0.0%	47.1%
	판단유보	5.9%	29.4%	11.8%	47.1%
합 계		5.9%	82.4%	11.8%	100.0%

전체: 128명

〈표 64〉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20.0%	0.0%	20.0%
	판단유보	15.0%	15.0%	0.0%	30.0%
합 계		65.0%	35.0%	0.0%	100.0%

전체: 101명

〈표 65〉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25.0%	50.0%	0.0%	75.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43명

〈표 66〉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3.1%	5.5%	3.4%	22.1%
	건설재개	2.8%	37.9%	0.0%	40.7%
	판단유보	9.0%	24.8%	3.4%	37.2%
합 계		24.8%	68.3%	6.9%	100.0%

전체: 37명

〈표 67〉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1.8%	2.9%	5.9%	20.6%
	건설재개	2.9%	38.2%	11.8%	52.9%
	판단유보	8.8%	8.8%	8.8%	26.5%
합 계		23.5%	50.0%	26.5%	100.0%

전체: 34명

〈표 68〉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8%	2.7%	3.6%	17.1%
	건설재개	0.0%	38.7%	6.3%	45.0%
	판단유보	12.6%	15.3%	9.9%	37.8%
합 계		23.4%	56.8%	19.8%	100.0%

전체: 111명

〈표 69〉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4.6%	2.2%	7.8%	34.6%
	건설재개	2.2%	25.9%	3.4%	31.5%
	판단유보	10.3%	10.6%	13.1%	34.0%
합 계		37.1%	38.6%	24.3%	100.0%

전체: 321명

〈표 70〉 1차조사 vs 3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80.0%	0.0%	80.0%
	판단유보	0.0%	20.0%	0.0%	20.0%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5명

〈표 71〉 1차조사 vs 3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5.9%	1.7%	7.3%	24.9%
	건설재개	2.6%	38.6%	6.4%	47.6%
	판단유보	6.4%	9.0%	12.0%	27.5%
합 계		24.9%	49.4%	25.8%	100.0%

전체: 233명

〈표 72〉 1차조사 vs 3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4.4%	2.9%	5.9%	33.2%
	건설재개	0.8%	22.3%	2.9%	26.1%
	판단유보	14.7%	14.3%	11.8%	40.8%
합 계		39.9%	39.5%	20.6%	100.0%

전체: 238명

〈표 73〉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2%	0.0%	4.5%	22.7%
	건설재개	0.0%	27.3%	13.6%	40.9%
	판단유보	9.1%	4.5%	22.7%	36.4%
합 계		27.3%	31.8%	40.9%	100.0%

전체: 22명

〈표 74〉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5.4%	0.0%	5.1%	20.5%
	건설재개	2.6%	28.2%	5.1%	35.9%
	판단유보	12.8%	17.9%	12.8%	43.6%
합 계		30.8%	46.2%	23.1%	100.0%

전체: 39명

〈표 75〉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7.2%	6.9%	6.9%	31.0%
	건설재개	2.3%	29.9%	3.4%	35.6%
	판단유보	12.6%	12.6%	8.0%	33.3%
합 계		32.2%	49.4%	18.4%	100.0%

전체: 87명

〈표 76〉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7%	1.6%	6.6%	27.9%
	건설재개	8.2%	31.1%	4.9%	44.3%
	판단유보	9.8%	8.2%	9.8%	27.9%
합 계		37.7%	41.0%	21.3%	100.0%

전체: 61명

〈표 77〉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7.1%	3.9%	7.9%	28.9%
	건설재개	0.0%	26.3%	3.9%	30.3%
	판단유보	11.8%	13.2%	15.8%	40.8%
합 계		28.9%	43.4%	27.6%	100.0%

전체: 76명

〈표 78〉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6.0%	1.3%	6.5%	33.8%
	건설재개	0.0%	32.5%	3.9%	36.4%
	판단유보	5.2%	7.8%	16.9%	29.9%
합 계		31.2%	41.6%	27.3%	100.0%

전체: 77명

〈표 79〉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0%	0.0%	6.7%	26.7%
	건설재개	0.0%	33.3%	0.0%	33.3%
	판단유보	13.3%	13.3%	13.3%	40.0%
합 계		33.3%	46.7%	20.0%	100.0%

전체: 30명

〈표 80〉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4.0%	0.0%	6.7%	30.7%
	건설재개	0.0%	33.3%	6.7%	40.0%
	판단유보	12.0%	12.0%	5.3%	29.3%
합 계		36.0%	45.3%	18.7%	100.0%

전체: 75명

〈표 81〉 1차조사 vs 3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0.0%	25.0%	0.0%	25.0%
	판단유보	0.0%	50.0%	0.0%	50.0%
합 계		25.0%	75.0%	0.0%	100.0%

전체: 4명

〈표 82〉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1%	1.5%	10.3%	30.9%
	건설재개	1.5%	20.6%	2.9%	25.0%
	판단유보	4.4%	16.2%	23.5%	44.1%
합 계		25.0%	38.2%	36.8%	100.0%

전체: 68명

〈표 83〉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0.0%	2.5%	15.0%	47.5%
	건설재개	0.0%	17.5%	1.3%	18.8%
	판단유보	7.5%	10.0%	16.3%	33.8%
합 계		37.5%	30.0%	32.5%	100.0%

전체: 80명

〈표 84〉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7.8%	2.8%	5.6%	36.1%
	건설재개	0.0%	20.4%	6.5%	26.9%
	판단유보	15.7%	10.2%	11.1%	37.0%
합 계		43.5%	33.3%	23.1%	100.0%

전체: 108명

〈표 85〉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3%	1.9%	3.8%	24.0%
	건설재개	3.8%	35.6%	3.8%	43.3%
	판단유보	15.4%	8.7%	8.7%	32.7%
합 계		37.5%	46.2%	16.3%	100.0%

전체: 104명

〈표 86〉 1차조사 vs 3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8.1%	2.7%	1.8%	12.6%
	건설재개	2.7%	50.5%	7.2%	60.4%
	판단유보	7.2%	14.4%	5.4%	27.0%
합 계		18.0%	67.6%	14.4%	100.0%

전체: 111명

〈표 87〉 1차조사 vs 3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6%	2.9%	1.4%	22.9%
	건설재개	2.9%	31.4%	4.3%	38.6%
	판단유보	11.4%	20.0%	7.1%	38.6%
합 계		32.9%	54.3%	12.9%	100.0%

전체: 70명

〈표 88〉 1차조사 vs 3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4%	2.2%	7.5%	30.2%
	건설재개	1.5%	30.2%	4.7%	36.4%
	판단유보	10.5%	10.2%	12.7%	33.4%
합 계		32.4%	42.6%	24.9%	100.0%

전체: 401명

〈표 89〉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4.6%	0.0%	11.5%	46.2%
	건설재개	3.8%	11.5%	3.8%	19.2%
	판단유보	19.2%	3.8%	11.5%	34.6%
합 계		57.7%	15.4%	26.9%	100.0%

전체: 26명

〈표 90〉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8.3%	3.2%	5.2%	46.8%
	건설재개	0.6%	14.3%	1.3%	16.2%
	판단유보	14.3%	8.4%	14.3%	37.0%
합 계		53.2%	26.0%	20.8%	100.0%

전체: 154명

〈표 91〉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6%	1.8%	8.7%	21.1%
	건설재개	1.8%	32.1%	6.4%	40.4%
	판단유보	8.7%	17.0%	12.8%	38.5%
합 계		21.1%	50.9%	28.0%	100.0%

전체: 218명

〈표 92〉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4.6%	3.1%	0.0%	7.7%
	건설재개	3.1%	67.7%	7.7%	78.5%
	판단유보	3.1%	6.2%	4.6%	13.8%
합 계		10.8%	76.9%	12.3%	100.0%

전체: 65명

〈표 93〉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80.0%	0.0%	80.0%
	판단유보	20.0%	0.0%	0.0%	20.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5명

〈표 94〉 1차조사 vs 3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3.3%	0.0%	33.3%	66.7%
	건설재개	0.0%	0.0%	0.0%	0.0%
	판단유보	33.3%	0.0%	0.0%	33.3%
합 계		66.7%	0.0%	33.3%	100.0%

전체: 3명

〈표 95〉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4.5%	2.6%	6.0%	23.1%
	건설재개	2.6%	36.8%	4.3%	43.6%
	판단유보	12.8%	11.1%	9.4%	33.3%
합 계		29.9%	50.4%	19.7%	100.0%

전체: 117명

〈표 96〉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6.0%	4.9%	4.9%	25.9%
	건설재개	1.2%	32.1%	2.5%	35.8%
	판단유보	11.1%	13.6%	13.6%	38.3%
합 계		28.4%	50.6%	21.0%	100.0%

전체: 81명

〈표 97〉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6.7%	1.7%	3.3%	21.7%
	건설재개	5.0%	30.0%	10.0%	45.0%
	판단유보	8.3%	11.7%	13.3%	33.3%
합 계		30.0%	43.3%	26.7%	100.0%

전체: 60명

〈표 98〉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33.3%	33.3%
	건설재개	0.0%	33.3%	0.0%	33.3%
	판단유보	0.0%	0.0%	33.3%	33.3%
합 계		0.0%	33.3%	66.7%	100.0%

전체: 3명

〈표 99〉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6.0%	1.4%	8.2%	35.6%
	건설재개	0.5%	26.0%	4.3%	30.8%
	판단유보	10.1%	11.5%	12.0%	33.7%
합 계		36.5%	38.9%	24.5%	100.0%

전체: 208명

〈표 100〉 1차조사 vs 3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2명

〈표 10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2%	5.5%	5.5%	31.2%
	건설재개	0.0%	30.3%	5.5%	35.8%
	판단유보	12.8%	6.4%	13.8%	33.0%
합 계		33.0%	42.2%	24.8%	100.0%

전체: 109명

〈표 10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8%	3.2%	3.2%	32.3%
	건설재개	3.2%	19.4%	6.5%	29.0%
	판단유보	12.9%	16.1%	9.7%	38.7%
합 계		41.9%	38.7%	19.4%	100.0%

전체: 31명

〈표 10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4.8%	3.7%	7.4%	25.9%
	건설재개	7.4%	33.3%	3.7%	44.4%
	판단유보	3.7%	14.8%	11.1%	29.6%
합 계		25.9%	51.9%	22.2%	100.0%

전체: 27명

〈표 10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7.4%	0.0%	14.8%	22.2%
	건설재개	3.7%	29.6%	3.7%	37.0%
	판단유보	11.1%	7.4%	22.2%	40.7%
합 계		22.2%	37.0%	40.7%	100.0%

전체: 27명

〈표 105〉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3.3%	0.0%	6.7%	20.0%
	건설재개	6.7%	13.3%	6.7%	26.7%
	판단유보	20.0%	6.7%	26.7%	53.3%
합 계		40.0%	20.0%	40.0%	100.0%

전체: 15명

〈표 106〉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5%	10.5%	0.0%	21.1%
	건설재개	0.0%	31.6%	0.0%	31.6%
	판단유보	5.3%	21.1%	21.1%	47.4%
합 계		15.8%	63.2%	21.1%	100.0%

전체: 19명

〈표 107〉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6.7%	0.0%	0.0%	16.7%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0.0%	33.3%	33.3%
합 계		16.7%	50.0%	33.3%	100.0%

전체: 6명

〈표 108〉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3.4%	0.0%	8.1%	31.5%
	건설재개	0.0%	32.4%	4.5%	36.9%
	판단유보	10.8%	13.5%	7.2%	31.5%
합 계		34.2%	45.9%	19.8%	100.0%

전체: 111명

〈표 109〉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0.0%	0.0%	0.0%	30.0%
	건설재개	10.0%	30.0%	10.0%	50.0%
	판단유보	10.0%	10.0%	0.0%	20.0%
합 계		50.0%	40.0%	10.0%	100.0%

전체: 10명

〈표 110〉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1.4%	0.0%	7.1%	28.6%
	건설재개	7.1%	28.6%	7.1%	42.9%
	판단유보	7.1%	14.3%	7.1%	28.6%
합 계		35.7%	42.9%	21.4%	100.0%

전체: 14명

〈표 11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8.6%	0.0%	0.0%	28.6%
	건설재개	0.0%	28.6%	7.1%	35.7%
	판단유보	7.1%	21.4%	7.1%	35.7%
합 계		35.7%	50.0%	14.3%	100.0%

전체: 14명

〈표 11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40.0%	0.0%	4.0%	44.0%
	건설재개	4.0%	16.0%	4.0%	24.0%
	판단유보	8.0%	8.0%	16.0%	32.0%
합 계		52.0%	24.0%	24.0%	100.0%

전체: 25명

〈표 11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7.1%	7.1%
	건설재개	0.0%	21.4%	7.1%	28.6%
	판단유보	21.4%	14.3%	28.6%	64.3%
합 계		21.4%	35.7%	42.9%	100.0%

전체: 14명

〈표 11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5.0%	0.0%	10.0%	25.0%
	건설재개	0.0%	50.0%	5.0%	55.0%
	판단유보	5.0%	15.0%	0.0%	20.0%
합 계		20.0%	65.0%	15.0%	100.0%

전체: 20명

〈표 115〉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2%	3.8%	11.5%	34.6%
	건설재개	0.0%	38.5%	0.0%	38.5%
	판단유보	11.5%	11.5%	3.8%	26.9%
합 계		30.8%	53.8%	15.4%	100.0%

전체: 26명

〈표 116〉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66.7%	0.0%	66.7%
	판단유보	0.0%	33.3%	0.0%	33.3%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3명

〈표 117〉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2.3%	1.8%	6.0%	40.1%
	건설재개	1.4%	17.1%	3.2%	21.7%
	판단유보	17.1%	9.2%	12.0%	38.2%
합 계		50.7%	28.1%	21.2%	100.0%

전체: 217명

〈표 118〉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0%	6.1%	2.0%	10.2%
	건설재개	2.0%	69.4%	4.1%	75.5%
	판단유보	0.0%	12.2%	2.0%	14.3%
합 계		4.1%	87.8%	8.2%	100.0%

전체: 49명

〈표 119〉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57.1%	21.4%	78.6%
	판단유보	14.3%	0.0%	7.1%	21.4%
합 계		14.3%	57.1%	28.6%	100.0%

전체: 14명

〈표 120〉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5.9%	5.9%
	건설재개	0.0%	35.3%	11.8%	47.1%
	판단유보	0.0%	29.4%	17.6%	47.1%
합 계		0.0%	64.7%	35.3%	100.0%

전체: 17명

〈표 121〉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40.0%	5.0%	5.0%	50.0%
	건설재개	0.0%	15.0%	5.0%	20.0%
	판단유보	5.0%	10.0%	15.0%	30.0%
합 계		45.0%	30.0%	25.0%	100.0%

전체: 20명

〈표 122〉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25.0%	50.0%	0.0%	75.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4명

〈표 123〉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3%	2.1%	9.7%	22.1%
	건설재개	2.1%	34.5%	4.1%	40.7%
	판단유보	6.9%	15.2%	15.2%	37.2%
합 계		19.3%	51.7%	29.0%	100.0%

전체: 145명

〈표 124〉 1차조사 vs 3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0.0%	0.0%	20.0%	20.0%
	건설재개	0.0%	60.0%	20.0%	8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0.0%	60.0%	40.0%	100.0%

전체: 5명

〈표 125〉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8.2%	0.0%	9.1%	27.3%
	건설재개	9.1%	45.5%	0.0%	54.5%
	판단유보	18.2%	0.0%	0.0%	18.2%
합 계		45.5%	45.5%	9.1%	100.0%

전체: 11명

〈표 126〉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1.5%	0.0%	7.6%	29.1%
	건설재개	2.5%	43.0%	3.8%	49.4%
	판단유보	10.1%	3.8%	7.6%	21.5%
합 계		34.2%	46.8%	19.0%	100.0%

전체: 79명

〈표 127〉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22.0%	4.9%	2.4%	29.3%
	건설재개	2.4%	26.8%	4.9%	34.1%
	판단유보	7.3%	17.1%	12.2%	36.6%
합 계		31.7%	48.8%	19.5%	100.0%

전체: 41명

〈표 128〉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2%	3.2%	3.2%	9.7%
	건설재개	3.2%	38.7%	6.5%	48.4%
	판단유보	19.4%	9.7%	12.9%	41.9%
합 계		25.8%	51.6%	22.6%	100.0%

전체: 31명

〈표 129〉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30.5%	3.9%	10.2%	44.5%
	건설재개	0.8%	21.9%	4.7%	27.3%
	판단유보	9.4%	8.6%	10.2%	28.1%
합 계		40.6%	34.4%	25.0%	100.0%

전체: 128명

〈표 130〉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9.8%	2.0%	4.0%	25.7%
	건설재개	1.0%	27.7%	3.0%	31.7%
	판단유보	13.9%	18.8%	9.9%	42.6%
합 계		34.7%	48.5%	16.8%	100.0%

전체: 101명

〈표 131〉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7.0%	0.0%	11.6%	18.6%
	건설재개	2.3%	20.9%	7.0%	30.2%
	판단유보	7.0%	14.0%	30.2%	51.2%
합 계		16.3%	34.9%	48.8%	100.0%

전체: 43명

〈표 132〉 1차조사 vs 3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3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1차조사	건설중단	10.8%	2.7%	0.0%	13.5%
	건설재개	0.0%	43.2%	8.1%	51.4%
	판단유보	5.4%	16.2%	13.5%	35.1%
합 계		16.2%	62.2%	21.6%	100.0%

전체: 37명

〈표 133〉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0.6%	0.0%	2.9%	23.5%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5.9%	20.6%	0.0%	26.5%
합 계		26.5%	70.6%	2.9%	100.0%

전체: 34명

〈표 134〉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고졸)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2.5%	0.9%	0.0%	23.4%
	건설재개	2.7%	54.1%	0.0%	56.8%
	판단유보	5.4%	13.5%	0.9%	19.8%
합 계		30.6%	68.5%	0.9%	100.0%

전체: 111명

〈표 135〉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5.8%	0.6%	0.6%	37.1%
	건설재개	1.6%	36.1%	0.9%	38.6%
	판단유보	8.7%	13.1%	2.5%	24.3%
합 계		46.1%	49.8%	4.0%	100.0%

전체: 321명

〈표 136〉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100.0%	0.0%	10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5명

〈표 137〉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남성)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4.0%	0.4%	0.4%	24.9%
	건설재개	1.7%	47.2%	0.4%	49.4%
	판단유보	7.3%	15.0%	3.4%	25.8%
합 계		33.0%	62.7%	4.3%	100.0%

전체: 233명

〈표 138〉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여성)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8.2%	0.8%	0.8%	39.9%
	건설재개	1.7%	37.0%	0.8%	39.5%
	판단유보	8.0%	12.2%	0.4%	20.6%
합 계		47.9%	50.0%	2.1%	100.0%

전체: 238명

〈표 139〉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7.3%	0.0%	0.0%	27.3%
	건설재개	0.0%	31.8%	0.0%	31.8%
	판단유보	4.5%	27.3%	9.1%	40.9%
합 계		31.8%	59.1%	9.1%	100.0%

전체: 22명

〈표 140〉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8.2%	0.0%	2.6%	30.8%
	건설재개	0.0%	46.2%	0.0%	46.2%
	판단유보	5.1%	17.9%	0.0%	23.1%
합 계		33.3%	64.1%	2.6%	100.0%

전체: 39명

〈표 141〉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2.2%	0.0%	0.0%	32.2%
	건설재개	3.4%	46.0%	0.0%	49.4%
	판단유보	6.9%	10.3%	1.1%	18.4%
합 계		42.5%	56.3%	1.1%	100.0%

전체: 87명

〈표 142〉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6.1%	1.6%	0.0%	37.7%
	건설재개	3.3%	34.4%	3.3%	41.0%
	판단유보	11.5%	6.6%	3.3%	21.3%
합 계		50.8%	42.6%	6.6%	100.0%

전체: 61명

〈표 143〉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7.6%	1.3%	0.0%	28.9%
	건설재개	3.9%	39.5%	0.0%	43.4%
	판단유보	11.8%	14.5%	1.3%	27.6%
합 계		43.4%	55.3%	1.3%	100.0%

전체: 76명

〈표 144〉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8.6%	1.3%	1.3%	31.2%
	건설재개	0.0%	41.6%	0.0%	41.6%
	판단유보	10.4%	14.3%	2.6%	27.3%
합 계		39.0%	57.1%	3.9%	100.0%

전체: 77명

〈표 145〉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0.0%	0.0%	3.3%	33.3%
	건설재개	0.0%	46.7%	0.0%	46.7%
	판단유보	3.3%	16.7%	0.0%	20.0%
합 계		33.3%	63.3%	3.3%	100.0%

전체: 30명

〈표 146〉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6.0%	0.0%	0.0%	36.0%
	건설재개	0.0%	44.0%	1.3%	45.3%
	판단유보	2.7%	14.7%	1.3%	18.7%
합 계		38.7%	58.7%	2.7%	100.0%

전체: 75명

〈표 147〉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0.0%	75.0%	0.0%	75.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25.0%	75.0%	0.0%	100.0%

전체: 4명

〈표 148〉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2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5.0%	0.0%	0.0%	25.0%
	건설재개	2.9%	33.8%	1.5%	38.2%
	판단유보	10.3%	22.1%	4.4%	36.8%
합 계		38.2%	55.9%	5.9%	100.0%

전체: 68명

〈표 149〉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3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5.0%	1.3%	1.3%	37.5%
	건설재개	0.0%	27.5%	2.5%	30.0%
	판단유보	12.5%	16.3%	3.8%	32.5%
합 계		47.5%	45.0%	7.5%	100.0%

전체: 80명

〈표 150〉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4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2.6%	0.9%	0.0%	43.5%
	건설재개	3.7%	29.6%	0.0%	33.3%
	판단유보	8.3%	12.0%	2.8%	23.1%
합 계		54.6%	42.6%	2.8%	100.0%

전체: 108명

〈표 151〉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50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5.6%	1.0%	1.0%	37.5%
	건설재개	0.0%	46.2%	0.0%	46.2%
	판단유보	5.8%	10.6%	0.0%	16.3%
합 계		41.3%	57.7%	1.0%	100.0%

전체: 104명

〈표 152〉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7.1%	0.0%	0.9%	18.0%
	건설재개	1.8%	65.8%	0.0%	67.6%
	판단유보	3.6%	10.8%	0.0%	14.4%
합 계		22.5%	76.6%	0.9%	100.0%

전체: 111명

〈표 153〉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유선)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2.9%	0.0%	0.0%	32.9%
	건설재개	1.4%	51.4%	1.4%	54.3%
	판단유보	4.3%	7.1%	1.4%	12.9%
합 계		38.6%	58.6%	2.9%	100.0%

전체: 70명

〈표 154〉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선)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0.9%	0.7%	0.7%	32.4%
	건설재개	1.7%	40.4%	0.5%	42.6%
	판단유보	8.2%	14.7%	2.0%	24.9%
합 계		40.9%	55.9%	3.2%	100.0%

전체: 401명

〈표 155〉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3.8%	0.0%	3.8%	57.7%
	건설재개	7.7%	7.7%	0.0%	15.4%
	판단유보	15.4%	11.5%	0.0%	26.9%
합 계		76.9%	19.2%	3.8%	100.0%

전체: 26명

〈표 156〉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진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1.9%	1.3%	0.0%	53.2%
	건설재개	1.9%	22.7%	1.3%	26.0%
	판단유보	11.0%	9.1%	0.6%	20.8%
합 계		64.9%	33.1%	1.9%	100.0%

전체: 154명

〈표 157〉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0.2%	0.5%	0.5%	21.1%
	건설재개	1.4%	49.1%	0.5%	50.9%
	판단유보	6.0%	18.8%	3.2%	28.0%
합 계		27.5%	68.3%	4.1%	100.0%

전체: 218명

〈표 158〉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보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9.2%	0.0%	1.5%	10.8%
	건설재개	0.0%	76.9%	0.0%	76.9%
	판단유보	1.5%	9.2%	1.5%	12.3%
합 계		10.8%	86.2%	3.1%	100.0%

전체: 65명

〈표 159〉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0.0%	0.0%	0.0%	20.0%
	건설재개	0.0%	80.0%	0.0%	8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5명

〈표 160〉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66.7%	0.0%	0.0%	66.7%
	건설재개	0.0%	0.0%	0.0%	0.0%
	판단유보	33.3%	0.0%	0.0%	33.3%
합 계		100.0%	0.0%	0.0%	100.0%

전체: 3명

〈표 161〉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9.1%	0.0%	0.9%	29.9%
	건설재개	0.9%	49.6%	0.0%	50.4%
	판단유보	7.7%	10.3%	1.7%	19.7%
합 계		37.6%	59.8%	2.6%	100.0%

전체: 117명

〈표 162〉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불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7.2%	1.2%	0.0%	28.4%
	건설재개	2.5%	48.1%	0.0%	50.6%
	판단유보	9.9%	11.1%	0.0%	21.0%
합 계		39.5%	60.5%	0.0%	100.0%

전체: 81명

〈표 163〉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5.0%	1.7%	3.3%	30.0%
	건설재개	3.3%	38.3%	1.7%	43.3%
	판단유보	3.3%	20.0%	3.3%	26.7%
합 계		31.7%	60.0%	8.3%	100.0%

전체: 60명

〈표 164〉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33.3%	0.0%	33.3%
	판단유보	33.3%	33.3%	0.0%	66.7%
합 계		33.3%	66.7%	0.0%	100.0%

전체: 3명

〈표 165〉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6.1%	0.5%	0.0%	36.5%
	건설재개	1.4%	36.5%	1.0%	38.9%
	판단유보	7.7%	14.4%	2.4%	24.5%
합 계		45.2%	51.4%	3.4%	100.0%

전체: 208명

〈표 166〉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2명

〈표 16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서울)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3.0%	0.0%	0.0%	33.0%
	건설재개	1.8%	37.6%	2.8%	42.2%
	판단유보	8.3%	13.8%	2.8%	24.8%
합 계		43.1%	51.4%	5.5%	100.0%

전체: 109명

〈표 16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부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2.3%	3.2%	6.5%	41.9%
	건설재개	3.2%	35.5%	0.0%	38.7%
	판단유보	3.2%	16.1%	0.0%	19.4%
합 계		38.7%	54.8%	6.5%	100.0%

전체: 31명

〈표 16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구)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5.9%	0.0%	0.0%	25.9%
	건설재개	3.7%	48.1%	0.0%	51.9%
	판단유보	3.7%	14.8%	3.7%	22.2%
합 계		33.3%	63.0%	3.7%	100.0%

전체: 27명

〈표 17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인천)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2.2%	0.0%	0.0%	22.2%
	건설재개	0.0%	37.0%	0.0%	37.0%
	판단유보	25.9%	14.8%	0.0%	40.7%
합 계		48.1%	51.9%	0.0%	100.0%

전체: 27명

〈표 17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광주)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0.0%	0.0%	0.0%	40.0%
	건설재개	0.0%	20.0%	0.0%	20.0%
	판단유보	26.7%	13.3%	0.0%	40.0%
합 계		66.7%	33.3%	0.0%	100.0%

전체: 15명

〈표 17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대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5.8%	0.0%	0.0%	15.8%
	건설재개	0.0%	63.2%	0.0%	63.2%
	판단유보	10.5%	10.5%	0.0%	21.1%
합 계		26.3%	73.7%	0.0%	100.0%

전체: 19명

〈표 17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울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16.7%	0.0%	16.7%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33.3%	0.0%	33.3%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6명

〈표 17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기)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3.3%	0.0%	0.9%	34.2%
	건설재개	0.0%	45.9%	0.0%	45.9%
	판단유보	7.2%	12.6%	0.0%	19.8%
합 계		40.5%	58.6%	0.9%	100.0%

전체: 111명

〈표 17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강원)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40.0%	0.0%	40.0%
	판단유보	0.0%	10.0%	0.0%	1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10명

〈표 17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5.7%	0.0%	0.0%	35.7%
	건설재개	7.1%	35.7%	0.0%	42.9%
	판단유보	7.1%	14.3%	0.0%	21.4%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14명

〈표 17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5.7%	0.0%	0.0%	35.7%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14.3%	0.0%	14.3%
합 계		35.7%	64.3%	0.0%	100.0%

전체: 14명

〈표 17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2.0%	0.0%	0.0%	52.0%
	건설재개	8.0%	16.0%	0.0%	24.0%
	판단유보	8.0%	8.0%	8.0%	24.0%
합 계		68.0%	24.0%	8.0%	100.0%

전체: 25명

〈표 17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전남)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1.4%	0.0%	0.0%	21.4%
	건설재개	0.0%	35.7%	0.0%	35.7%
	판단유보	0.0%	35.7%	7.1%	42.9%
합 계		21.4%	71.4%	7.1%	100.0%

전체: 14명

〈표 18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5.0%	5.0%	0.0%	20.0%
	건설재개	0.0%	65.0%	0.0%	65.0%
	판단유보	5.0%	10.0%	0.0%	15.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20명

〈표 18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경남)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0.8%	0.0%	0.0%	30.8%
	건설재개	0.0%	53.8%	0.0%	53.8%
	판단유보	0.0%	7.7%	7.7%	15.4%
합 계		30.8%	61.5%	7.7%	100.0%

전체: 26명

〈표 18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제주)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66.7%	0.0%	66.7%
	판단유보	0.0%	33.3%	0.0%	33.3%
합 계		0.0%	100.0%	0.0%	100.0%

전체: 3명

〈표 18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8.8%	1.4%	0.5%	50.7%
	건설재개	2.8%	24.4%	0.9%	28.1%
	판단유보	9.7%	11.5%	0.0%	21.2%
합 계		61.3%	37.3%	1.4%	100.0%

전체: 217

〈표 18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1%	0.0%	0.0%	4.1%
	건설재개	0.0%	87.8%	0.0%	87.8%
	판단유보	0.0%	8.2%	0.0%	8.2%
합 계		4.1%	95.9%	0.0%	100.0%

전체: 49명

〈표 18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4.3%	0.0%	0.0%	14.3%
	건설재개	0.0%	57.1%	0.0%	57.1%
	판단유보	7.1%	21.4%	0.0%	28.6%
합 계		21.4%	78.6%	0.0%	100.0%

전체: 14명

〈표 18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5.9%	58.8%	0.0%	64.7%
	판단유보	0.0%	23.5%	11.8%	35.3%
합 계		5.9%	82.4%	11.8%	100.0%

전체: 17명

〈표 18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5.0%	0.0%	0.0%	45.0%
	건설재개	5.0%	25.0%	0.0%	30.0%
	판단유보	15.0%	10.0%	0.0%	25.0%
합 계		65.0%	35.0%	0.0%	100.0%

전체: 20명

〈표 18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50.0%	0.0%	0.0%	50.0%
	건설재개	0.0%	50.0%	0.0%	50.0%
	판단유보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100.0%

전체: 4명

〈표 18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7.9%	0.0%	1.4%	19.3%
	건설재개	0.0%	51.0%	0.7%	51.7%
	판단유보	6.9%	17.2%	4.8%	29.0%
합 계		24.8%	68.3%	6.9%	100.0%

전체: 145명

〈표 19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0.0%	0.0%	0.0%	0.0%
	건설재개	0.0%	60.0%	0.0%	60.0%
	판단유보	20.0%	20.0%	0.0%	40.0%
합 계		20.0%	80.0%	0.0%	100.0%

전체: 5명

〈표 191〉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45.5%	0.0%	0.0%	45.5%
	건설재개	0.0%	45.5%	0.0%	45.5%
	판단유보	0.0%	0.0%	9.1%	9.1%
합 계		45.5%	45.5%	9.1%	100.0%

전체: 11명

〈표 192〉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1.6%	1.3%	1.3%	34.2%
	건설재개	0.0%	46.8%	0.0%	46.8%
	판단유보	6.3%	11.4%	1.3%	19.0%
합 계		38.0%	59.5%	2.5%	100.0%

전체: 79명

〈표 193〉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1.7%	0.0%	0.0%	31.7%
	건설재개	9.8%	39.0%	0.0%	48.8%
	판단유보	9.8%	7.3%	2.4%	19.5%
합 계		51.2%	46.3%	2.4%	100.0%

전체: 41명

〈표 194〉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25.8%	0.0%	0.0%	25.8%
	건설재개	3.2%	48.4%	0.0%	51.6%
	판단유보	9.7%	12.9%	0.0%	22.6%
합 계		38.7%	61.3%	0.0%	100.0%

전체: 31명

〈표 195〉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9.8%	0.0%	0.8%	40.6%
	건설재개	0.8%	32.8%	0.8%	34.4%
	판단유보	7.0%	15.6%	2.3%	25.0%
합 계		47.7%	48.4%	3.9%	100.0%

전체: 128명

〈표 196〉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주부)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31.7%	2.0%	1.0%	34.7%
	건설재개	0.0%	48.5%	0.0%	48.5%
	판단유보	7.9%	8.9%	0.0%	16.8%
합 계		39.6%	59.4%	1.0%	100.0%

전체: 101명

〈표 197〉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학생)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6.3%	0.0%	0.0%	16.3%
	건설재개	0.0%	32.6%	2.3%	34.9%
	판단유보	11.6%	30.2%	7.0%	48.8%
합 계		27.9%	62.8%	9.3%	100.0%

전체: 43명

〈표 198〉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건설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4차조사			합 계
		건설중단	건설재개	판단유보	
3차조사	건설중단	16.2%	0.0%	0.0%	16.2%
	건설재개	5.4%	54.1%	2.7%	62.2%
	판단유보	5.4%	16.2%	0.0%	21.6%
합 계		27.0%	70.3%	2.7%	100.0%

전체: 37명

〈표 199〉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14.7%	5.9%	0.0%	2.9%	23.5%
	유지	8.8%	29.4%	2.9%	0.0%	41.2%
	확대	2.9%	8.8%	8.8%	0.0%	20.6%
	모름	5.9%	8.8%	0.0%	0.0%	14.7%
합 계		32.4%	52.9%	11.8%	2.9%	100.0%

전체: 34명

〈표 200〉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고졸)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6.1%	6.3%	1.8%	0.0%	34.2%
	유지	9.9%	21.6%	7.2%	0.0%	38.7%
	확대	1.8%	4.5%	7.2%	0.9%	14.4%
	모름	4.5%	6.3%	1.8%	0.0%	12.6%
합 계		42.3%	38.7%	18.0%	0.9%	100.0%

전체: 111명

〈표 201〉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4.9%	9.0%	0.6%	0.3%	54.8%
	유지	13.1%	12.1%	1.9%	0.3%	27.4%
	확대	1.6%	7.5%	3.7%	0.6%	13.4%
	모름	2.2%	1.9%	0.0%	0.3%	4.4%
합 계		61.7%	30.5%	6.2%	1.6%	100.0%

전체: 321명

〈표 202〉 1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0.0%	20.0%	0.0%	0.0%	20.0%
	유지	0.0%	40.0%	40.0%	0.0%	8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0.0%	60.0%	40.0%	0.0%	100.0%

전체: 5명

〈표 203〉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남성)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6.9%	7.3%	0.9%	0.4%	45.5%
	유지	12.9%	18.9%	3.0%	0.0%	34.8%
	확대	0.9%	8.2%	5.6%	0.9%	15.5%
	모름	1.7%	1.7%	0.4%	0.4%	4.3%
합 계		52.4%	36.1%	9.9%	1.7%	100.0%

전체: 233명

〈표 204〉 1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여성)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8.7%	9.2%	0.8%	0.4%	49.2%
	유지	10.9%	13.0%	4.2%	0.4%	28.6%
	확대	2.5%	5.5%	4.2%	0.4%	12.6%
	모름	4.2%	5.0%	0.4%	0.0%	9.7%
합 계		56.3%	32.8%	9.7%	1.3%	100.0%

전체: 238명

〈표 205〉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6.4%	0.0%	0.0%	0.0%	36.4%
	유지	9.1%	22.7%	4.5%	0.0%	36.4%
	확대	4.5%	4.5%	9.1%	0.0%	18.2%
	모름	0.0%	9.1%	0.0%	0.0%	9.1%
합 계		50.0%	36.4%	13.6%	0.0%	100.0%

전체: 22명

〈표 206〉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3.1%	10.3%	5.1%	0.0%	38.5%
	유지	12.8%	25.6%	2.6%	0.0%	41.0%
	확대	2.6%	5.1%	2.6%	0.0%	10.3%
	모름	7.7%	0.0%	0.0%	2.6%	10.3%
합 계		46.2%	41.0%	10.3%	2.6%	100.0%

전체: 39명

〈표 207〉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0.2%	6.9%	1.1%	1.1%	49.4%
	유지	5.7%	21.8%	4.6%	0.0%	32.2%
	확대	2.3%	9.2%	2.3%	1.1%	14.9%
	모름	0.0%	2.3%	1.1%	0.0%	3.4%
합 계		48.3%	40.2%	9.2%	2.3%	100.0%

전체: 87명

〈표 208〉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4.4%	6.6%	0.0%	0.0%	41.0%
	유지	23.0%	4.9%	6.6%	0.0%	34.4%
	확대	1.6%	8.2%	9.8%	0.0%	19.7%
	모름	3.3%	1.6%	0.0%	0.0%	4.9%
합 계		62.3%	21.3%	16.4%	0.0%	100.0%

전체: 61명

〈표 209〉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2.1%	17.1%	0.0%	1.3%	60.5%
	유지	6.6%	17.1%	2.6%	0.0%	26.3%
	확대	0.0%	2.6%	5.3%	0.0%	7.9%
	모름	1.3%	3.9%	0.0%	0.0%	5.3%
합 계		50.0%	40.8%	7.9%	1.3%	100.0%

전체: 76명

〈표 210〉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5.5%	5.2%	0.0%	0.0%	50.6%
	유지	14.3%	15.6%	2.6%	0.0%	32.5%
	확대	0.0%	3.9%	1.3%	1.3%	6.5%
	모름	6.5%	2.6%	1.3%	0.0%	10.4%
합 계		66.2%	27.3%	5.2%	1.3%	100.0%

전체: 77명

〈표 211〉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6.7%	16.7%	0.0%	0.0%	43.3%
	유지	10.0%	10.0%	3.3%	3.3%	26.7%
	확대	3.3%	13.3%	3.3%	0.0%	20.0%
	모름	6.7%	3.3%	0.0%	0.0%	10.0%
합 계		46.7%	43.3%	6.7%	3.3%	100.0%

전체: 30명

〈표 212〉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8.7%	2.7%	1.3%	0.0%	42.7%
	유지	14.7%	13.3%	1.3%	0.0%	29.3%
	확대	2.7%	9.3%	8.0%	1.3%	21.3%
	모름	1.3%	5.3%	0.0%	0.0%	6.7%
합 계		57.3%	30.7%	10.7%	1.3%	100.0%

전체 : 75명

〈표 213〉 1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5.0%	25.0%	0.0%	0.0%	50.0%
	유지	0.0%	0.0%	25.0%	0.0%	25.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25.0%	0.0%	0.0%	25.0%
합 계		25.0%	50.0%	25.0%	0.0%	100.0%

전체: 4명

〈표 214〉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3.8%	11.8%	0.0%	0.0%	45.6%
	유지	20.6%	13.2%	0.0%	0.0%	33.8%
	확대	0.0%	8.8%	4.4%	0.0%	13.2%
	모름	0.0%	7.4%	0.0%	0.0%	7.4%
합 계		54.4%	41.2%	4.4%	0.0%	100.0%

전체: 68명

〈표 215〉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3.8%	7.5%	2.5%	0.0%	63.8%
	유지	15.0%	10.0%	2.5%	0.0%	27.5%
	확대	1.3%	1.3%	1.3%	0.0%	3.8%
	모름	1.3%	2.5%	0.0%	1.3%	5.0%
합 계		71.3%	21.3%	6.3%	1.3%	100.0%

전체: 80명

〈표 216〉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0.9%	8.3%	0.0%	0.9%	60.2%
	유지	6.5%	11.1%	1.9%	0.0%	19.4%
	확대	0.0%	5.6%	3.7%	0.0%	9.3%
	모름	8.3%	1.9%	0.9%	0.0%	11.1%
합 계		65.7%	26.9%	6.5%	0.9%	100.0%

전체: 108명

〈표 217〉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6.5%	8.7%	1.0%	1.0%	47.1%
	유지	13.5%	14.4%	3.8%	0.0%	31.7%
	확대	4.8%	8.7%	4.8%	0.0%	18.3%
	모름	1.0%	1.0%	1.0%	0.0%	2.9%
합 계		55.8%	32.7%	10.6%	1.0%	100.0%

전체: 104명

〈표 218〉 1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17.1%	6.3%	0.9%	0.0%	24.3%
	유지	8.1%	27.9%	8.1%	0.9%	45.0%
	확대	1.8%	9.0%	9.0%	2.7%	22.5%
	모름	2.7%	5.4%	0.0%	0.0%	8.1%
합 계		29.7%	48.6%	18.0%	3.6%	100.0%

전체: 111명

〈표 219〉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유선)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1.4%	11.4%	0.0%	1.4%	44.3%
	유지	12.9%	10.0%	7.1%	0.0%	30.0%
	확대	0.0%	7.1%	10.0%	1.4%	18.6%
	모름	1.4%	5.7%	0.0%	0.0%	7.1%
합 계		45.7%	34.3%	17.1%	2.9%	100.0%

전체: 70명

〈표 220〉 1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선)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8.9%	7.7%	1.0%	0.2%	47.9%
	유지	11.7%	17.0%	3.0%	0.2%	31.9%
	확대	2.0%	6.7%	4.0%	0.5%	13.2%
	모름	3.2%	3.0%	0.5%	0.2%	7.0%
합 계		55.9%	34.4%	8.5%	1.2%	100.0%

전체: 401명

〈표 221〉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61.5%	3.8%	0.0%	0.0%	65.4%
	유지	11.5%	3.8%	0.0%	0.0%	15.4%
	확대	3.8%	3.8%	3.8%	0.0%	11.5%
	모름	0.0%	7.7%	0.0%	0.0%	7.7%
합 계		76.9%	19.2%	3.8%	0.0%	100.0%

전체: 26명

〈표 222〉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진보)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9.1%	7.1%	0.6%	0.6%	67.5%
	유지	13.0%	7.8%	0.0%	0.0%	20.8%
	확대	0.6%	3.2%	1.9%	0.0%	5.8%
	모름	4.5%	1.3%	0.0%	0.0%	5.8%
합 계		77.3%	19.5%	2.6%	0.6%	100.0%

전체: 154명

〈표 223〉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8.9%	9.6%	1.4%	0.5%	40.4%
	유지	11.9%	19.7%	5.0%	0.5%	37.2%
	확대	2.3%	6.0%	5.0%	1.4%	14.7%
	모름	3.2%	4.1%	0.5%	0.0%	7.8%
합 계		46.3%	39.4%	11.9%	2.3%	100.0%

전체: 218명

〈표 224〉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보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9.2%	9.2%	0.0%	0.0%	18.5%
	유지	10.8%	29.2%	9.2%	0.0%	49.2%
	확대	1.5%	18.5%	7.7%	0.0%	27.7%
	모름	0.0%	3.1%	1.5%	0.0%	4.6%
합 계		21.5%	60.0%	18.5%	0.0%	100.0%

전체: 65명

〈표 225〉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0.0%	0.0%	0.0%	0.0%	0.0%
	확대	0.0%	20.0%	60.0%	0.0%	80.0%
	모름	0.0%	0.0%	0.0%	20.0%	20.0%
합 계		0.0%	20.0%	60.0%	20.0%	100.0%

전체: 5명

〈표 226〉 1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66.7%	0.0%	0.0%	0.0%	66.7%
	유지	0.0%	0.0%	0.0%	0.0%	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33.3%	0.0%	0.0%	33.3%
합 계		66.7%	33.3%	0.0%	0.0%	100.0%

전체: 3명

〈표 227〉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2.5%	8.5%	1.7%	0.0%	42.7%
	유지	10.3%	13.7%	6.0%	0.9%	30.8%
	확대	2.6%	6.8%	8.5%	1.7%	19.7%
	모름	0.9%	5.1%	0.0%	0.9%	6.8%
합 계		46.2%	34.2%	16.2%	3.4%	100.0%

전체: 117명

〈표 228〉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불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0.9%	7.4%	0.0%	1.2%	39.5%
	유지	14.8%	21.0%	6.2%	0.0%	42.0%
	확대	0.0%	6.2%	4.9%	0.0%	11.1%
	모름	4.9%	1.2%	1.2%	0.0%	7.4%
합 계		50.6%	35.8%	12.3%	1.2%	100.0%

전체: 81명

〈표 229〉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1.7%	8.3%	0.0%	0.0%	40.0%
	유지	11.7%	23.3%	3.3%	0.0%	38.3%
	확대	1.7%	10.0%	3.3%	0.0%	15.0%
	모름	3.3%	1.7%	1.7%	0.0%	6.7%
합 계		48.3%	43.3%	8.3%	0.0%	100.0%

전체: 60명

〈표 230〉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3.3%	33.3%	0.0%	0.0%	66.7%
	유지	0.0%	0.0%	0.0%	0.0%	0.0%
	확대	33.3%	0.0%	0.0%	0.0%	33.3%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66.7%	33.3%	0.0%	0.0%	100.0%

전체: 3명

〈표 231〉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5.2%	8.2%	1.0%	0.5%	54.8%
	유지	12.0%	13.0%	1.4%	0.0%	26.4%
	확대	1.4%	6.3%	3.4%	0.5%	11.5%
	모름	3.4%	3.8%	0.0%	0.0%	7.2%
합 계		62.0%	31.3%	5.8%	1.0%	100.0%

전체: 208명

〈표 232〉 1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0.0%	0.0%	0.0%	0.0%	50.0%
	유지	0.0%	50.0%	0.0%	0.0%	5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0.0%	100.0%

전체: 2명

〈표 23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서울)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8.5%	10.1%	0.9%	0.9%	50.5%
	유지	12.8%	15.6%	0.9%	0.0%	29.4%
	확대	1.8%	5.5%	4.6%	0.9%	12.8%
	모름	1.8%	5.5%	0.0%	0.0%	7.3%
합 계		55.0%	36.7%	6.4%	1.8%	100.0%

전체: 109명

〈표 23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부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8.1%	3.2%	3.2%	0.0%	64.5%
	유지	6.5%	16.1%	0.0%	0.0%	22.6%
	확대	0.0%	9.7%	0.0%	0.0%	9.7%
	모름	0.0%	3.2%	0.0%	0.0%	3.2%
합 계		64.5%	32.3%	3.2%	0.0%	100.0%

전체: 31명

〈표 23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구)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9.6%	7.4%	0.0%	0.0%	37.0%
	유지	11.1%	22.2%	11.1%	0.0%	44.4%
	확대	7.4%	0.0%	3.7%	0.0%	11.1%
	모름	7.4%	0.0%	0.0%	0.0%	7.4%
합 계		55.6%	29.6%	14.8%	0.0%	100.0%

전체: 27명

〈표 23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인천)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0.7%	7.4%	0.0%	0.0%	48.1%
	유지	11.1%	22.2%	0.0%	0.0%	33.3%
	확대	0.0%	7.4%	0.0%	0.0%	7.4%
	모름	3.7%	7.4%	0.0%	0.0%	11.1%
합 계		55.6%	44.4%	0.0%	0.0%	100.0%

전체: 27명

〈표 23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광주)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3.3%	20.0%	6.7%	0.0%	60.0%
	유지	6.7%	6.7%	0.0%	0.0%	13.3%
	확대	0.0%	13.3%	0.0%	0.0%	13.3%
	모름	6.7%	6.7%	0.0%	0.0%	13.3%
합 계		46.7%	46.7%	6.7%	0.0%	100.0%

전체: 15명

〈표 23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15.8%	21.1%	0.0%	0.0%	36.8%
	유지	21.1%	15.8%	5.3%	0.0%	42.1%
	확대	5.3%	5.3%	5.3%	0.0%	15.8%
	모름	0.0%	5.3%	0.0%	0.0%	5.3%
합 계		42.1%	47.4%	10.5%	0.0%	100.0%

전체: 19명

〈표 23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울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0.0%	0.0%	0.0%	0.0%	50.0%
	유지	0.0%	16.7%	0.0%	0.0%	16.7%
	확대	0.0%	0.0%	16.7%	0.0%	16.7%
	모름	0.0%	16.7%	0.0%	0.0%	16.7%
합 계		50.0%	33.3%	16.7%	0.0%	100.0%

전체: 6명

〈표 24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1.4%	2.7%	0.0%	0.0%	44.1%
	유지	18.0%	13.5%	5.4%	0.9%	37.8%
	확대	0.0%	7.2%	3.6%	0.9%	11.7%
	모름	3.6%	0.9%	1.8%	0.0%	6.3%
합 계		63.1%	24.3%	10.8%	1.8%	100.0%

전체: 111명

〈표 24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강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0.0%	30.0%	0.0%	0.0%	70.0%
	유지	0.0%	10.0%	0.0%	0.0%	10.0%
	확대	10.0%	0.0%	10.0%	0.0%	2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40.0%	10.0%	0.0%	100.0%

전체: 10명

〈표 24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5.7%	7.1%	0.0%	0.0%	42.9%
	유지	14.3%	21.4%	0.0%	0.0%	35.7%
	확대	0.0%	14.3%	0.0%	0.0%	14.3%
	모름	7.1%	0.0%	0.0%	0.0%	7.1%
합 계		57.1%	42.9%	0.0%	0.0%	100.0%

전체: 14명

〈표 24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2.9%	0.0%	0.0%	0.0%	42.9%
	유지	7.1%	21.4%	0.0%	0.0%	28.6%
	확대	0.0%	14.3%	14.3%	0.0%	28.6%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35.7%	14.3%	0.0%	100.0%

전체: 14명

〈표 24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0.0%	8.0%	0.0%	0.0%	48.0%
	유지	8.0%	12.0%	4.0%	0.0%	24.0%
	확대	4.0%	8.0%	0.0%	4.0%	16.0%
	모름	4.0%	4.0%	0.0%	4.0%	12.0%
합 계		56.0%	32.0%	4.0%	8.0%	100.0%

전체: 25명

〈표 24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남)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8.6%	21.4%	0.0%	7.1%	57.1%
	유지	7.1%	21.4%	7.1%	0.0%	35.7%
	확대	0.0%	7.1%	0.0%	0.0%	7.1%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35.7%	50.0%	7.1%	7.1%	100.0%

전체: 14명

〈표 24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5.0%	5.0%	5.0%	0.0%	35.0%
	유지	10.0%	25.0%	5.0%	0.0%	40.0%
	확대	5.0%	5.0%	10.0%	0.0%	20.0%
	모름	0.0%	5.0%	0.0%	0.0%	5.0%
합 계		40.0%	40.0%	20.0%	0.0%	100.0%

전체: 20명

〈표 247〉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남)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0.8%	11.5%	0.0%	0.0%	42.3%
	유지	3.8%	11.5%	7.7%	0.0%	23.1%
	확대	0.0%	7.7%	23.1%	0.0%	30.8%
	모름	3.8%	0.0%	0.0%	0.0%	3.8%
합 계		38.5%	30.8%	30.8%	0.0%	100.0%

전체: 26명

〈표 248〉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제주)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0.0%	0.0%	33.3%	0.0%	33.3%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33.3%	33.3%	0.0%	0.0%	66.7%
합 계		33.3%	33.3%	33.3%	0.0%	100.0%

전체: 3명

〈표 249〉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1.6%	7.8%	0.9%	0.9%	61.3%
	유지	12.4%	7.8%	0.9%	0.0%	21.2%
	확대	1.4%	3.2%	2.3%	0.5%	7.4%
	모름	5.1%	5.1%	0.0%	0.0%	10.1%
합 계		70.5%	24.0%	4.1%	1.4%	100.0%

전체: 217명

〈표 250〉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1%	4.1%	2.0%	0.0%	10.2%
	유지	14.3%	24.5%	14.3%	0.0%	53.1%
	확대	2.0%	16.3%	14.3%	0.0%	32.7%
	모름	0.0%	2.0%	2.0%	0.0%	4.1%
합 계		20.4%	46.9%	32.7%	0.0%	100.0%

전체: 49명

〈표 251〉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8.6%	14.3%	0.0%	0.0%	42.9%
	유지	0.0%	35.7%	0.0%	0.0%	35.7%
	확대	0.0%	14.3%	7.1%	0.0%	21.4%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28.6%	64.3%	7.1%	0.0%	100.0%

전체: 14명

〈표 252〉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17.6%	23.5%	0.0%	0.0%	41.2%
	유지	23.5%	17.6%	0.0%	0.0%	41.2%
	확대	0.0%	11.8%	0.0%	5.9%	17.6%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1.2%	52.9%	0.0%	5.9%	100.0%

전체: 17명

〈표 253〉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60.0%	20.0%	0.0%	0.0%	80.0%
	유지	10.0%	0.0%	0.0%	0.0%	10.0%
	확대	0.0%	5.0%	0.0%	0.0%	5.0%
	모름	5.0%	0.0%	0.0%	0.0%	5.0%
합 계		75.0%	25.0%	0.0%	0.0%	100.0%

전체: 20명

〈표 254〉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0.0%	0.0%	0.0%	0.0%	50.0%
	유지	0.0%	0.0%	25.0%	0.0%	25.0%
	확대	0.0%	0.0%	25.0%	0.0%	25.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0.0%	50.0%	0.0%	100.0%

전체: 4명

〈표 255〉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8.3%	6.9%	0.7%	0.0%	35.9%
	유지	11.0%	24.1%	4.8%	0.7%	40.7%
	확대	2.8%	8.3%	6.2%	0.7%	17.9%
	모름	1.4%	2.8%	0.7%	0.7%	5.5%
합 계		43.4%	42.1%	12.4%	2.1%	100.0%

전체: 145명

〈표 256〉 1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40.0%	0.0%	0.0%	0.0%	40.0%
	유지	0.0%	60.0%	0.0%	0.0%	6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0.0%	60.0%	0.0%	0.0%	100.0%

전체: 5명

〈표 257〉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6.4%	9.1%	0.0%	0.0%	45.5%
	유지	9.1%	36.4%	0.0%	0.0%	45.5%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9.1%	0.0%	0.0%	0.0%	9.1%
합 계		54.5%	45.5%	0.0%	0.0%	100.0%

전체: 11명

〈표 258〉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6.7%	7.6%	0.0%	1.3%	45.6%
	유지	7.6%	16.5%	2.5%	1.3%	27.8%
	확대	1.3%	10.1%	6.3%	1.3%	19.0%
	모름	5.1%	2.5%	0.0%	0.0%	7.6%
합 계		50.6%	36.7%	8.9%	3.8%	100.0%

전체: 79명

〈표 259〉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9.3%	12.2%	2.4%	0.0%	43.9%
	유지	14.6%	17.1%	0.0%	0.0%	31.7%
	확대	4.9%	7.3%	4.9%	0.0%	17.1%
	모름	2.4%	0.0%	2.4%	2.4%	7.3%
합 계		51.2%	36.6%	9.8%	2.4%	100.0%

전체: 41명

〈표 260〉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변화(생산기능노무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5.5%	0.0%	0.0%	0.0%	35.5%
	유지	12.9%	22.6%	6.5%	0.0%	41.9%
	확대	9.7%	3.2%	6.5%	0.0%	19.4%
	모름	3.2%	0.0%	0.0%	0.0%	3.2%
합 계		61.3%	25.8%	12.9%	0.0%	100.0%

전체: 31명

〈표 261〉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변화(사무관리전문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51.6%	6.3%	0.8%	0.8%	59.4%
	유지	13.3%	9.4%	4.7%	0.0%	27.3%
	확대	1.6%	6.3%	1.6%	0.8%	10.2%
	모름	1.6%	0.8%	0.8%	0.0%	3.1%
합 계		68.0%	22.7%	7.8%	1.6%	100.0%

전체: 128명

〈표 262〉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주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34.7%	9.9%	1.0%	0.0%	45.5%
	유지	8.9%	14.9%	5.0%	0.0%	28.7%
	확대	0.0%	5.9%	5.9%	1.0%	12.9%
	모름	5.0%	7.9%	0.0%	0.0%	12.9%
합 계		48.5%	38.6%	11.9%	1.0%	100.0%

전체: 101명

〈표 263〉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학생)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5.6%	11.6%	0.0%	0.0%	37.2%
	유지	20.9%	18.6%	0.0%	0.0%	39.5%
	확대	0.0%	9.3%	4.7%	0.0%	14.0%
	모름	0.0%	9.3%	0.0%	0.0%	9.3%
합 계		46.5%	48.8%	4.7%	0.0%	100.0%

전체: 43명

〈표 264〉 1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1차조사	축소	27.0%	10.8%	2.7%	0.0%	40.5%
	유지	10.8%	24.3%	5.4%	0.0%	40.5%
	확대	0.0%	5.4%	10.8%	0.0%	16.2%
	모름	0.0%	2.7%	0.0%	0.0%	2.7%
합 계		37.8%	43.2%	18.9%	0.0%	100.0%

전체: 37명

〈표 265〉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중졸이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17.6%	5.9%	0.0%	2.9%	26.5%
	유지	11.8%	26.5%	0.0%	0.0%	38.2%
	확대	0.0%	11.8%	11.8%	0.0%	23.5%
	모름	2.9%	8.8%	0.0%	0.0%	11.8%
합 계		32.4%	52.9%	11.8%	2.9%	100.0%

전체: 34명

〈표 266〉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고졸)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1.5%	4.5%	0.0%	0.9%	36.9%
	유지	9.9%	27.0%	4.5%	0.0%	41.4%
	확대	0.9%	7.2%	12.6%	0.0%	20.7%
	모름	0.0%	0.0%	0.9%	0.0%	0.9%
합 계		42.3%	38.7%	18.0%	0.9%	100.0%

전체: 111명

〈표 267〉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졸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6.7%	7.2%	0.3%	0.6%	54.8%
	유지	12.1%	18.7%	0.9%	0.3%	32.1%
	확대	0.3%	3.7%	5.0%	0.3%	9.3%
	모름	2.5%	0.9%	0.0%	0.3%	3.7%
합 계		61.7%	30.5%	6.2%	1.6%	100.0%

전체: 321명

〈표 268〉 3차조사 vs 4차조사 교육수준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0.0%	60.0%	20.0%	0.0%	80.0%
	확대	0.0%	0.0%	20.0%	0.0%	2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0.0%	60.0%	40.0%	0.0%	100.0%

전체: 5명

〈표 269〉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남성)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2.9%	7.3%	0.0%	0.9%	51.1%
	유지	6.9%	22.3%	1.3%	0.4%	30.9%
	확대	0.4%	5.2%	8.6%	0.4%	14.6%
	모름	2.1%	1.3%	0.0%	0.0%	3.4%
합 계		52.4%	36.1%	9.9%	1.7%	100.0%

전체: 233명

〈표 270〉 3차조사 vs 4차조사 성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여성)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8.2%	5.5%	0.4%	0.8%	45.0%
	유지	16.0%	21.0%	2.5%	0.0%	39.5%
	확대	0.4%	5.0%	6.3%	0.0%	11.8%
	모름	1.7%	1.3%	0.4%	0.4%	3.8%
합 계		56.3%	32.8%	9.7%	1.3%	100.0%

전체: 238명

〈표 271〉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미만)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1.8%	4.5%	0.0%	0.0%	36.4%
	유지	13.6%	13.6%	4.5%	0.0%	31.8%
	확대	0.0%	18.2%	9.1%	0.0%	27.3%
	모름	4.5%	0.0%	0.0%	0.0%	4.5%
합 계		50.0%	36.4%	13.6%	0.0%	100.0%

전체: 22명

〈표 272〉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100만원- 2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0.8%	7.7%	0.0%	2.6%	41.0%
	유지	15.4%	25.6%	2.6%	0.0%	43.6%
	확대	0.0%	7.7%	7.7%	0.0%	15.4%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6.2%	41.0%	10.3%	2.6%	100.0%

전체: 39명

〈표 273〉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0만원- 3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7.9%	5.7%	0.0%	2.3%	46.0%
	유지	6.9%	20.7%	3.4%	0.0%	31.0%
	확대	1.1%	9.2%	5.7%	0.0%	16.1%
	모름	2.3%	4.6%	0.0%	0.0%	6.9%
합 계		48.3%	40.2%	9.2%	2.3%	100.0%

전체: 87명

〈표 274〉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0만원- 4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2.6%	6.6%	0.0%	0.0%	49.2%
	유지	14.8%	13.1%	3.3%	0.0%	31.1%
	확대	0.0%	1.6%	13.1%	0.0%	14.8%
	모름	4.9%	0.0%	0.0%	0.0%	4.9%
합 계		62.3%	21.3%	16.4%	0.0%	100.0%

전체: 61명

〈표 275〉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0만원- 5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6.8%	13.2%	0.0%	1.3%	51.3%
	유지	11.8%	25.0%	0.0%	0.0%	36.8%
	확대	1.3%	2.6%	7.9%	0.0%	11.8%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40.8%	7.9%	1.3%	100.0%

전체: 76명

〈표 276〉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0만원- 6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4.5%	3.9%	0.0%	0.0%	58.4%
	유지	11.7%	20.8%	2.6%	1.3%	36.4%
	확대	0.0%	1.3%	1.3%	0.0%	2.6%
	모름	0.0%	1.3%	1.3%	0.0%	2.6%
합 계		66.2%	27.3%	5.2%	1.3%	100.0%

전체: 77명

〈표 277〉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0만원- 700만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0.0%	13.3%	0.0%	0.0%	43.3%
	유지	10.0%	20.0%	0.0%	0.0%	30.0%
	확대	0.0%	6.7%	6.7%	0.0%	13.3%
	모름	6.7%	3.3%	0.0%	3.3%	13.3%
합 계		46.7%	43.3%	6.7%	3.3%	100.0%

전체: 30명

〈표 278〉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700만원 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4.0%	0.0%	1.3%	0.0%	45.3%
	유지	12.0%	26.7%	0.0%	0.0%	38.7%
	확대	0.0%	4.0%	9.3%	1.3%	14.7%
	모름	1.3%	0.0%	0.0%	0.0%	1.3%
합 계		57.3%	30.7%	10.7%	1.3%	100.0%

전체: 75명

〈표 279〉 3차조사 vs 4차조사 소득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5.0%	0.0%	0.0%	0.0%	25.0%
	유지	0.0%	50.0%	0.0%	0.0%	50.0%
	확대	0.0%	0.0%	25.0%	0.0%	25.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25.0%	50.0%	25.0%	0.0%	100.0%

전체: 4명

〈표 280〉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2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6.8%	7.4%	0.0%	0.0%	44.1%
	유지	16.2%	26.5%	0.0%	0.0%	42.6%
	확대	0.0%	5.9%	4.4%	0.0%	10.3%
	모름	1.5%	1.5%	0.0%	0.0%	2.9%
합 계		54.4%	41.2%	4.4%	0.0%	100.0%

전체: 68명

〈표 281〉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3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1.3%	6.3%	1.3%	1.3%	60.0%
	유지	16.3%	13.8%	2.5%	0.0%	32.5%
	확대	1.3%	1.3%	2.5%	0.0%	5.0%
	모름	2.5%	0.0%	0.0%	0.0%	2.5%
합 계		71.3%	21.3%	6.3%	1.3%	100.0%

전체: 80명

〈표 282〉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4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4.6%	7.4%	0.0%	0.9%	63.0%
	유지	7.4%	16.7%	2.8%	0.0%	26.9%
	확대	0.9%	1.9%	3.7%	0.0%	6.5%
	모름	2.8%	0.9%	0.0%	0.0%	3.7%
합 계		65.7%	26.9%	6.5%	0.9%	100.0%

전체: 108명

〈표 283〉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50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3.3%	6.7%	0.0%	1.0%	51.0%
	유지	10.6%	21.2%	0.0%	0.0%	31.7%
	확대	0.0%	4.8%	9.6%	0.0%	14.4%
	모름	1.9%	0.0%	1.0%	0.0%	2.9%
합 계		55.8%	32.7%	10.6%	1.0%	100.0%

전체: 104명

〈표 284〉 3차조사 vs 4차조사 연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60대 이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18.9%	4.5%	0.0%	0.9%	24.3%
	유지	9.9%	29.7%	3.6%	0.9%	44.1%
	확대	0.0%	10.8%	14.4%	0.9%	26.1%
	모름	0.9%	3.6%	0.0%	0.9%	5.4%
합 계		29.7%	48.6%	18.0%	3.6%	100.0%

전체: 111명

〈표 285〉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유선)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1.4%	10.0%	0.0%	1.4%	42.9%
	유지	12.9%	17.1%	1.4%	1.4%	32.9%
	확대	0.0%	5.7%	15.7%	0.0%	21.4%
	모름	1.4%	1.4%	0.0%	0.0%	2.9%
합 계		45.7%	34.3%	17.1%	2.9%	100.0%

전체: 70명

〈표 286〉 3차조사 vs 4차조사 조사 회선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선)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2.1%	5.7%	0.2%	0.7%	48.9%
	유지	11.2%	22.4%	2.0%	0.0%	35.7%
	확대	0.5%	5.0%	6.0%	0.2%	11.7%
	모름	2.0%	1.2%	0.2%	0.2%	3.7%
합 계		55.9%	34.4%	8.5%	1.2%	100.0%

전체: 401명

〈표 287〉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진보)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65.4%	3.8%	0.0%	0.0%	69.2%
	유지	11.5%	11.5%	0.0%	0.0%	23.1%
	확대	0.0%	3.8%	3.8%	0.0%	7.7%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76.9%	19.2%	3.8%	0.0%	100.0%

전체: 26명

〈표 288〉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진보)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63.0%	5.2%	0.6%	0.6%	69.5%
	유지	11.7%	11.0%	0.0%	0.0%	22.7%
	확대	0.0%	3.2%	1.9%	0.0%	5.2%
	모름	2.6%	0.0%	0.0%	0.0%	2.6%
합 계		77.3%	19.5%	2.6%	0.6%	100.0%

전체: 154명

〈표 289〉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둘 다 아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1.2%	7.3%	0.0%	0.9%	39.4%
	유지	12.4%	26.6%	3.2%	0.5%	42.7%
	확대	0.5%	4.1%	8.3%	0.5%	13.3%
	모름	2.3%	1.4%	0.5%	0.5%	4.6%
합 계		46.3%	39.4%	11.9%	2.3%	100.0%

전체: 218명

〈표 290〉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보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12.3%	7.7%	0.0%	0.0%	20.0%
	유지	7.7%	33.8%	3.1%	0.0%	44.6%
	확대	1.5%	13.8%	15.4%	0.0%	30.8%
	모름	0.0%	4.6%	0.0%	0.0%	4.6%
합 계		21.5%	60.0%	18.5%	0.0%	100.0%

전체: 65명

〈표 291〉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매우 보수)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0.0%	0.0%	0.0%	20.0%	20.0%
	유지	0.0%	20.0%	0.0%	0.0%	20.0%
	확대	0.0%	0.0%	60.0%	0.0%	6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0.0%	20.0%	60.0%	20.0%	100.0%

전체: 5명

〈표 292〉 3차조사 vs 4차조사 정치성향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3.3%	0.0%	0.0%	0.0%	33.3%
	유지	33.3%	33.3%	0.0%	0.0%	66.7%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66.7%	33.3%	0.0%	0.0%	100.0%

전체: 3명

〈표 293〉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독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3.3%	7.7%	0.9%	1.7%	43.6%
	유지	10.3%	16.2%	3.4%	0.0%	29.9%
	확대	0.0%	7.7%	12.0%	0.9%	20.5%
	모름	2.6%	2.6%	0.0%	0.9%	6.0%
합 계		46.2%	34.2%	16.2%	3.4%	100.0%

전체: 117명

〈표 294〉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불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5.8%	2.5%	0.0%	1.2%	39.5%
	유지	14.8%	24.7%	1.2%	0.0%	40.7%
	확대	0.0%	7.4%	9.9%	0.0%	17.3%
	모름	0.0%	1.2%	1.2%	0.0%	2.5%
합 계		50.6%	35.8%	12.3%	1.2%	100.0%

전체: 81명

〈표 295〉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천주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3.3%	6.7%	0.0%	0.0%	50.0%
	유지	3.3%	35.0%	3.3%	0.0%	41.7%
	확대	1.7%	1.7%	5.0%	0.0%	8.3%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8.3%	43.3%	8.3%	0.0%	100.0%

전체: 60명

〈표 296〉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66.7%	0.0%	0.0%	0.0%	66.7%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33.3%	0.0%	0.0%	33.3%
합 계		66.7%	33.3%	0.0%	0.0%	100.0%

전체: 3명

〈표 297〉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6.2%	7.2%	0.0%	0.5%	53.8%
	유지	12.5%	19.7%	1.0%	0.5%	33.7%
	확대	0.5%	3.8%	4.8%	0.0%	9.1%
	모름	2.9%	0.5%	0.0%	0.0%	3.4%
합 계		62.0%	31.3%	5.8%	1.0%	100.0%

전체: 208명

〈표 298〉 3차조사 vs 4차조사 종교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0.0%	0.0%	0.0%	0.0%	50.0%
	유지	0.0%	50.0%	0.0%	0.0%	5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50.0%	0.0%	0.0%	100.0%

전체: 2명

〈표 29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서울)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6.8%	6.4%	0.0%	0.9%	54.1%
	유지	7.3%	23.9%	0.9%	0.9%	33.0%
	확대	0.0%	4.6%	5.5%	0.0%	10.1%
	모름	0.9%	1.8%	0.0%	0.0%	2.8%
합 계		55.0%	36.7%	6.4%	1.8%	100.0%

전체: 109명

〈표 30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부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8.4%	6.5%	3.2%	0.0%	58.1%
	유지	12.9%	16.1%	0.0%	0.0%	29.0%
	확대	3.2%	6.5%	0.0%	0.0%	9.7%
	모름	0.0%	3.2%	0.0%	0.0%	3.2%
합 계		64.5%	32.3%	3.2%	0.0%	100.0%

전체: 31명

〈표 30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구)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7.0%	3.7%	0.0%	0.0%	40.7%
	유지	14.8%	22.2%	3.7%	0.0%	40.7%
	확대	0.0%	3.7%	11.1%	0.0%	14.8%
	모름	3.7%	0.0%	0.0%	0.0%	3.7%
합 계		55.6%	29.6%	14.8%	0.0%	100.0%

전체: 27명

〈표 30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인천)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4.4%	7.4%	0.0%	0.0%	51.9%
	유지	7.4%	37.0%	0.0%	0.0%	44.4%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3.7%	0.0%	0.0%	0.0%	3.7%
합 계		55.6%	44.4%	0.0%	0.0%	100.0%

전체: 27명

〈표 30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광주)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0.0%	6.7%	0.0%	0.0%	46.7%
	유지	6.7%	33.3%	0.0%	0.0%	40.0%
	확대	0.0%	6.7%	6.7%	0.0%	13.3%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6.7%	46.7%	6.7%	0.0%	100.0%

전체: 15명

〈표 30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대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6.3%	10.5%	0.0%	0.0%	36.8%
	유지	15.8%	26.3%	0.0%	0.0%	42.1%
	확대	0.0%	10.5%	10.5%	0.0%	21.1%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2.1%	47.4%	10.5%	0.0%	100.0%

전체: 19명

〈표 30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울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3.3%	16.7%	0.0%	0.0%	50.0%
	유지	16.7%	16.7%	0.0%	0.0%	33.3%
	확대	0.0%	0.0%	16.7%	0.0%	16.7%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33.3%	16.7%	0.0%	100.0%

전체: 6명

〈표 30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기)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7.7%	3.6%	0.0%	0.0%	51.4%
	유지	15.3%	16.2%	3.6%	0.0%	35.1%
	확대	0.0%	3.6%	6.3%	0.9%	10.8%
	모름	0.0%	0.9%	0.9%	0.9%	2.7%
합 계		63.1%	24.3%	10.8%	1.8%	100.0%

전체: 111명

〈표 30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강원)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0.0%	20.0%	0.0%	0.0%	70.0%
	유지	0.0%	20.0%	0.0%	0.0%	20.0%
	확대	0.0%	0.0%	10.0%	0.0%	1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40.0%	10.0%	0.0%	100.0%

전체: 10명

〈표 30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5.7%	0.0%	0.0%	0.0%	35.7%
	유지	14.3%	28.6%	0.0%	0.0%	42.9%
	확대	0.0%	14.3%	0.0%	0.0%	14.3%
	모름	7.1%	0.0%	0.0%	0.0%	7.1%
합 계		57.1%	42.9%	0.0%	0.0%	100.0%

전체: 14명

〈표 30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충남세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1.4%	0.0%	0.0%	0.0%	21.4%
	유지	21.4%	28.6%	0.0%	0.0%	50.0%
	확대	0.0%	7.1%	14.3%	0.0%	21.4%
	모름	7.1%	0.0%	0.0%	0.0%	7.1%
합 계		50.0%	35.7%	14.3%	0.0%	100.0%

전체: 14명

〈표 31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4.0%	8.0%	0.0%	8.0%	60.0%
	유지	8.0%	16.0%	4.0%	0.0%	28.0%
	확대	0.0%	8.0%	0.0%	0.0%	8.0%
	모름	4.0%	0.0%	0.0%	0.0%	4.0%
합 계		56.0%	32.0%	4.0%	8.0%	100.0%

전체: 25명

〈표 31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전남)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14.3%	21.4%	0.0%	7.1%	42.9%
	유지	14.3%	14.3%	0.0%	0.0%	28.6%
	확대	0.0%	0.0%	7.1%	0.0%	7.1%
	모름	7.1%	14.3%	0.0%	0.0%	21.4%
합 계		35.7%	50.0%	7.1%	7.1%	100.0%

전체: 14명

〈표 31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0.0%	0.0%	0.0%	0.0%	20.0%
	유지	20.0%	35.0%	0.0%	0.0%	55.0%
	확대	0.0%	5.0%	20.0%	0.0%	25.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0.0%	40.0%	20.0%	0.0%	100.0%

전체: 20명

〈표 313〉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경남)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6.9%	11.5%	0.0%	0.0%	38.5%
	유지	3.8%	11.5%	7.7%	0.0%	23.1%
	확대	0.0%	7.7%	23.1%	0.0%	30.8%
	모름	7.7%	0.0%	0.0%	0.0%	7.7%
합 계		38.5%	30.8%	30.8%	0.0%	100.0%

전체: 26명

〈표 314〉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역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제주)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0.0%	0.0%	0.0%	0.0%	0.0%
	확대	33.3%	33.3%	33.3%	0.0%	10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33.3%	33.3%	33.3%	0.0%	100.0%

전체: 3명

〈표 315〉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더불어민주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6.7%	6.5%	0.5%	1.4%	65.0%
	유지	12.4%	14.3%	0.5%	0.0%	27.2%
	확대	0.5%	1.8%	3.2%	0.0%	5.5%
	모름	0.9%	1.4%	0.0%	0.0%	2.3%
합 계		70.5%	24.0%	4.1%	1.4%	100.0%

전체: 217명

〈표 316〉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유한국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6.1%	0.0%	0.0%	0.0%	6.1%
	유지	14.3%	26.5%	8.2%	0.0%	49.0%
	확대	0.0%	18.4%	24.5%	0.0%	42.9%
	모름	0.0%	2.0%	0.0%	0.0%	2.0%
합 계		20.4%	46.9%	32.7%	0.0%	100.0%

전체: 49명

〈표 317〉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국민의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14.3%	7.1%	0.0%	0.0%	21.4%
	유지	7.1%	42.9%	0.0%	0.0%	50.0%
	확대	0.0%	14.3%	7.1%	0.0%	21.4%
	모름	7.1%	0.0%	0.0%	0.0%	7.1%
합 계		28.6%	64.3%	7.1%	0.0%	100.0%

전체: 14명

〈표 318〉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바른정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9.4%	11.8%	0.0%	0.0%	41.2%
	유지	11.8%	29.4%	0.0%	5.9%	47.1%
	확대	0.0%	11.8%	0.0%	0.0%	11.8%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1.2%	52.9%	0.0%	5.9%	100.0%

전체: 17명

〈표 319〉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정의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75.0%	10.0%	0.0%	0.0%	85.0%
	유지	0.0%	15.0%	0.0%	0.0%	15.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75.0%	25.0%	0.0%	0.0%	100.0%

전체: 20명

〈표 320〉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기타정당)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0.0%	0.0%	0.0%	0.0%	50.0%
	유지	0.0%	0.0%	25.0%	0.0%	25.0%
	확대	0.0%	0.0%	25.0%	0.0%	25.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50.0%	0.0%	50.0%	0.0%	100.0%

전체: 4명

〈표 321〉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지지정당없음)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8.3%	7.6%	0.0%	0.7%	36.6%
	유지	10.3%	28.3%	2.1%	0.0%	40.7%
	확대	0.7%	4.8%	9.7%	0.7%	15.9%
	모름	4.1%	1.4%	0.7%	0.7%	6.9%
합 계		43.4%	42.1%	12.4%	2.1%	100.0%

전체: 145명

〈표 322〉 3차조사 vs 4차조사 지지정당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모름)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0.0%	0.0%	0.0%	0.0%	0.0%
	유지	40.0%	60.0%	0.0%	0.0%	100.0%
	확대	0.0%	0.0%	0.0%	0.0%	0.0%
	모름	0.0%	0.0%	0.0%	0.0%	0.0%
합 계		40.0%	60.0%	0.0%	0.0%	100.0%

전체: 5명

〈표 323〉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농림어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6.4%	9.1%	0.0%	0.0%	45.5%
	유지	9.1%	27.3%	0.0%	0.0%	36.4%
	확대	0.0%	9.1%	0.0%	0.0%	9.1%
	모름	9.1%	0.0%	0.0%	0.0%	9.1%
합 계		54.5%	45.5%	0.0%	0.0%	100.0%

전체: 11명

〈표 324〉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자영업)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3.0%	5.1%	0.0%	1.3%	49.4%
	유지	6.3%	20.3%	2.5%	1.3%	30.4%
	확대	1.3%	10.1%	6.3%	0.0%	17.7%
	모름	0.0%	1.3%	0.0%	1.3%	2.5%
합 계		50.6%	36.7%	8.9%	3.8%	100.0%

전체: 79명

〈표 325〉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판매영업서비스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9.0%	9.8%	0.0%	2.4%	51.2%
	유지	4.9%	17.1%	2.4%	0.0%	24.4%
	확대	2.4%	7.3%	7.3%	0.0%	17.1%
	모름	4.9%	2.4%	0.0%	0.0%	7.3%
합 계		51.2%	36.6%	9.8%	2.4%	100.0%

전체: 41명

〈표 326〉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생산기능노무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41.9%	0.0%	0.0%	0.0%	41.9%
	유지	12.9%	25.8%	3.2%	0.0%	41.9%
	확대	0.0%	0.0%	9.7%	0.0%	9.7%
	모름	6.5%	0.0%	0.0%	0.0%	6.5%
합 계		61.3%	25.8%	12.9%	0.0%	100.0%

전체: 31명

〈표 327〉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사무관리전문직)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51.6%	3.1%	0.8%	0.8%	56.3%
	유지	14.1%	18.0%	1.6%	0.0%	33.6%
	확대	0.0%	1.6%	4.7%	0.8%	7.0%
	모름	2.3%	0.0%	0.8%	0.0%	3.1%
합 계		68.0%	22.7%	7.8%	1.6%	100.0%

전체: 128명

〈표 328〉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주부)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35.6%	6.9%	0.0%	1.0%	43.6%
	유지	12.9%	25.7%	2.0%	0.0%	40.6%
	확대	0.0%	4.0%	9.9%	0.0%	13.9%
	모름	0.0%	2.0%	0.0%	0.0%	2.0%
합 계		48.5%	38.6%	11.9%	1.0%	100.0%

전체: 101명

〈표 329〉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학생)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7.9%	11.6%	0.0%	0.0%	39.5%
	유지	18.6%	30.2%	0.0%	0.0%	48.8%
	확대	0.0%	4.7%	4.7%	0.0%	9.3%
	모름	0.0%	2.3%	0.0%	0.0%	2.3%
합 계		46.5%	48.8%	4.7%	0.0%	100.0%

전체: 43명

〈표 330〉 3차조사 vs 4차조사 직업별 원전확대 문항 의견 변화(무직퇴직은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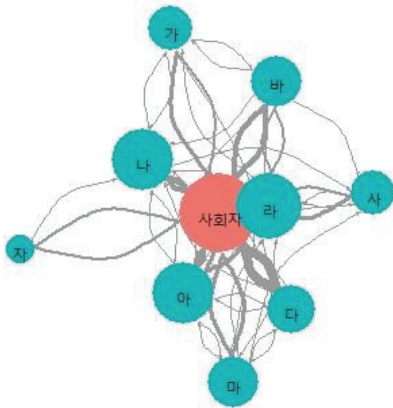
		4차조사				합 계
		축소	유지	확대	모름	
3차조사	축소	27.0%	13.5%	0.0%	0.0%	40.5%
	유지	8.1%	16.2%	2.7%	0.0%	27.0%
	확대	0.0%	10.8%	16.2%	0.0%	27.0%
	모름	2.7%	2.7%	0.0%	0.0%	5.4%
합 계		37.8%	43.2%	18.9%	0.0%	100.0%

전체: 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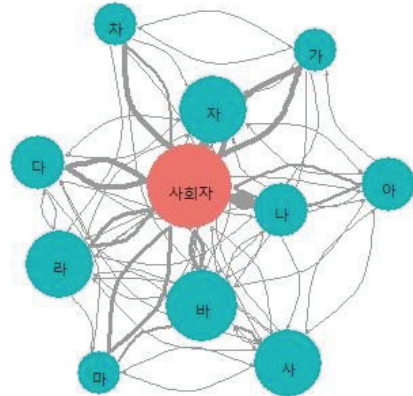
부록 2

분임토의 조별 발언 네트워크 (43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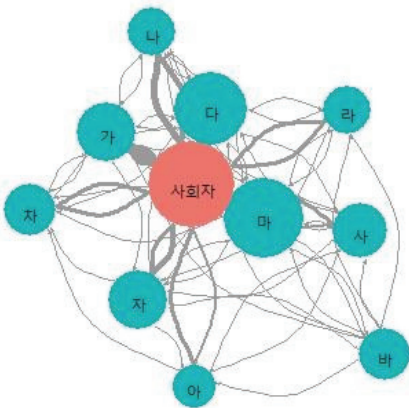
〈그림 1〉 1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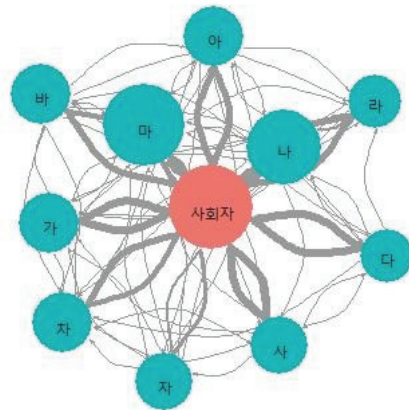
〈그림 2〉 2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3〉 3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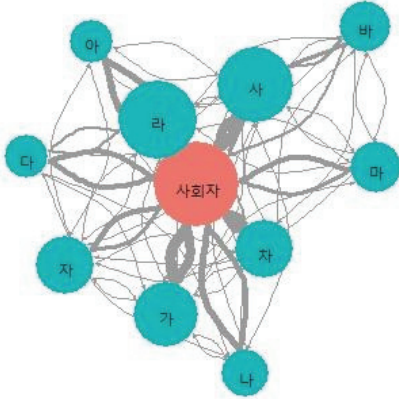


〈그림 4〉 4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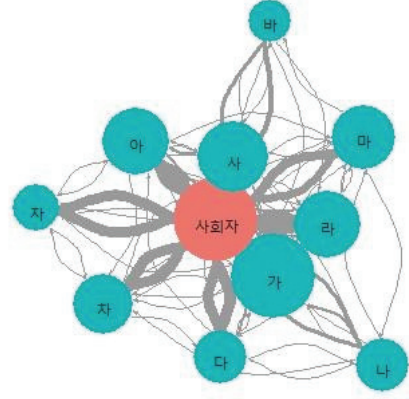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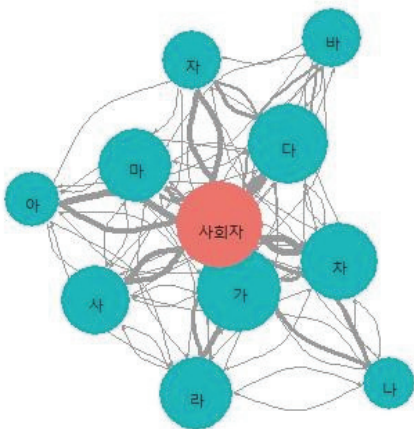
〈그림 5〉 5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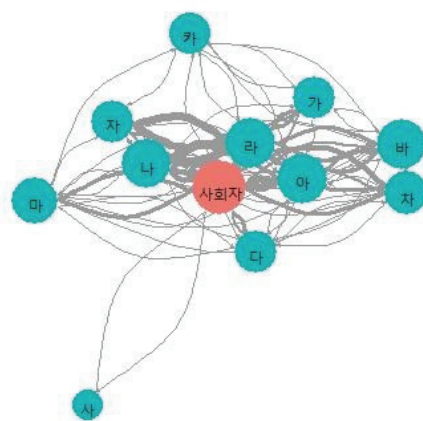
〈그림 6〉 6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7〉 7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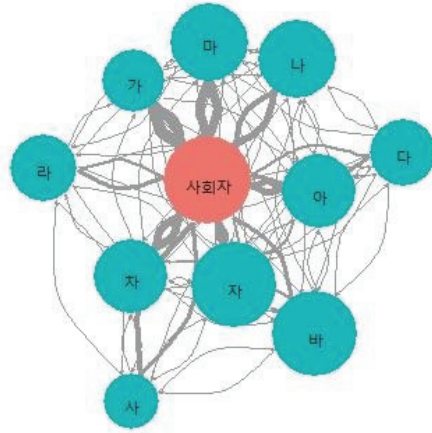


〈그림 8〉 8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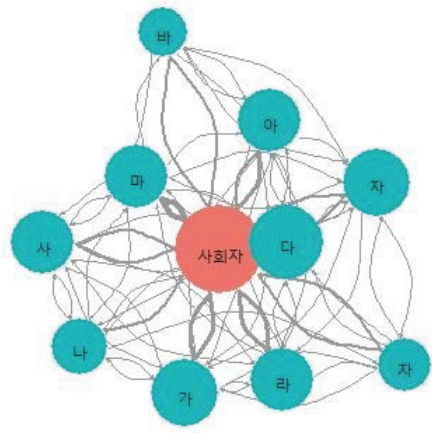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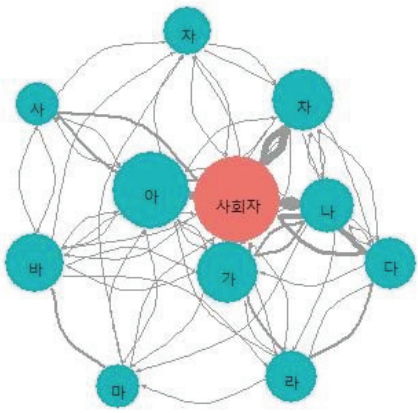
〈그림 9〉 9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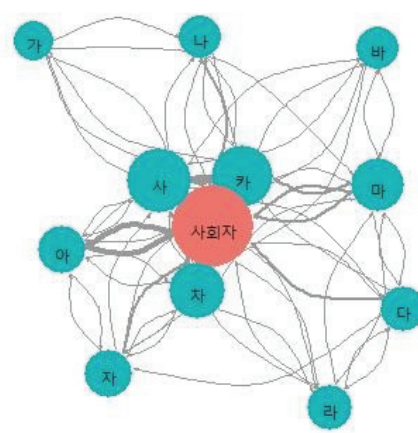
〈그림 10〉 10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11〉 11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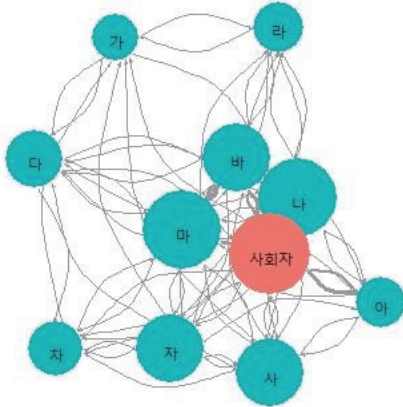


〈그림 12〉 12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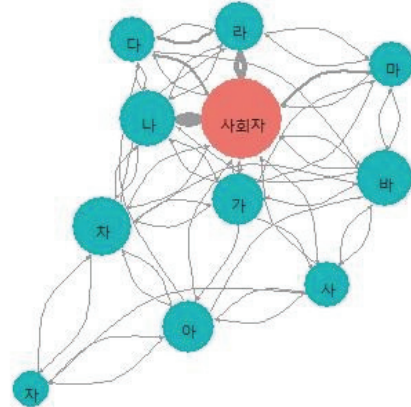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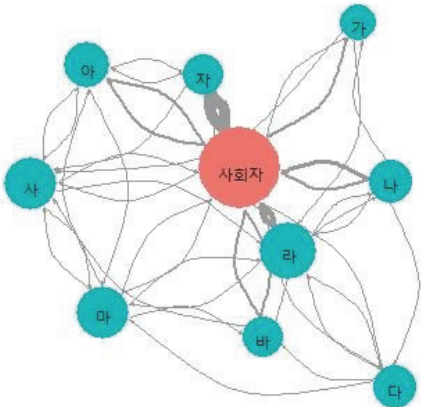
〈그림 13〉 13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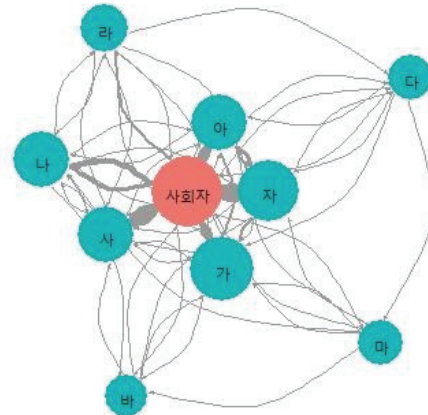
〈그림 14〉 14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15〉 15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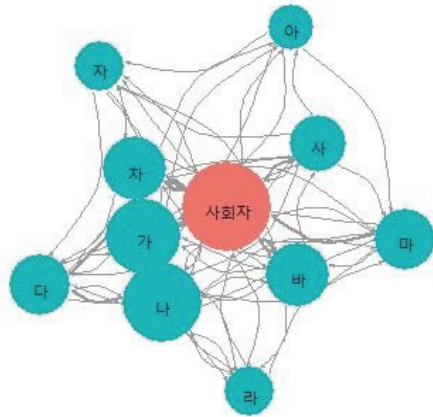


〈그림 16〉 16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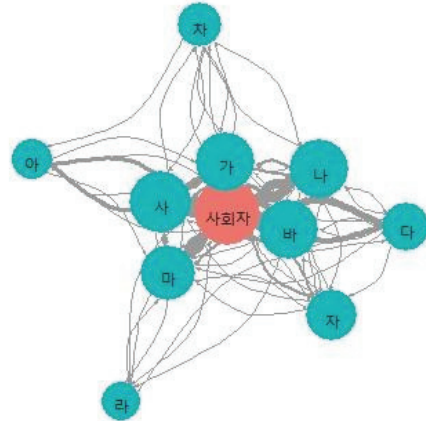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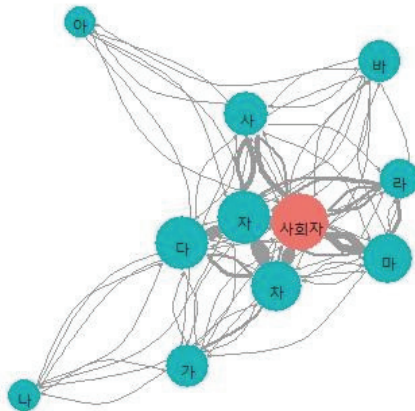
〈그림 17〉 17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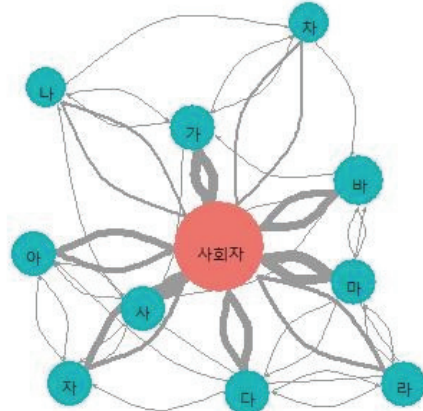
〈그림 18〉 18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19〉 19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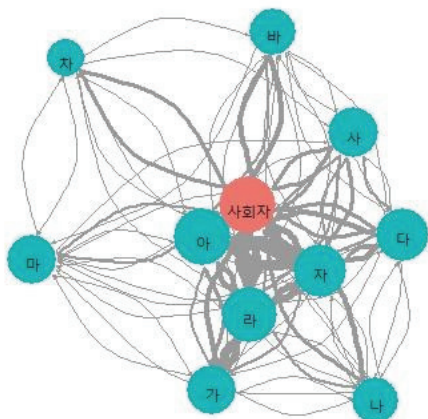


〈그림 20〉 20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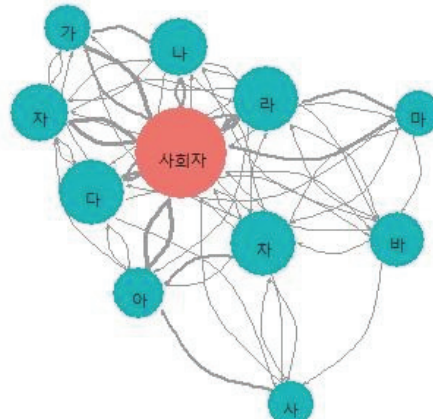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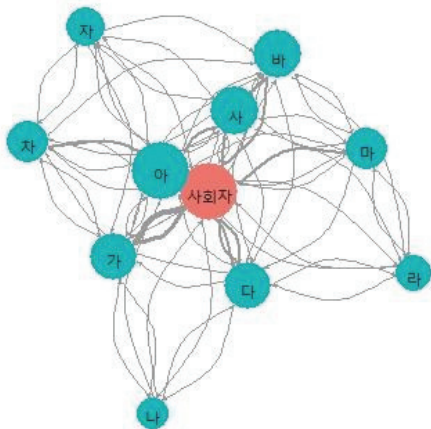
〈그림 21〉 21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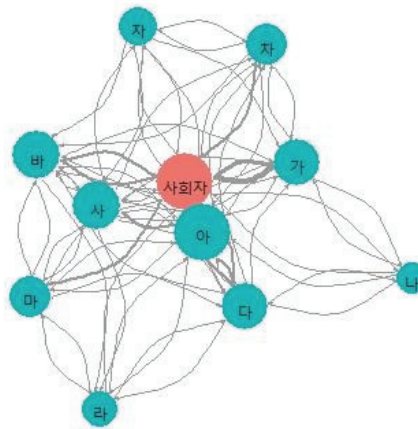
〈그림 22〉 22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23〉 23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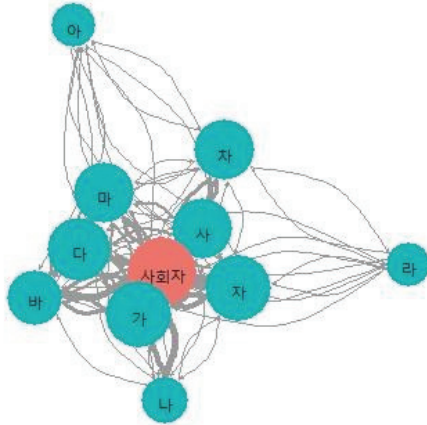


〈그림 24〉 24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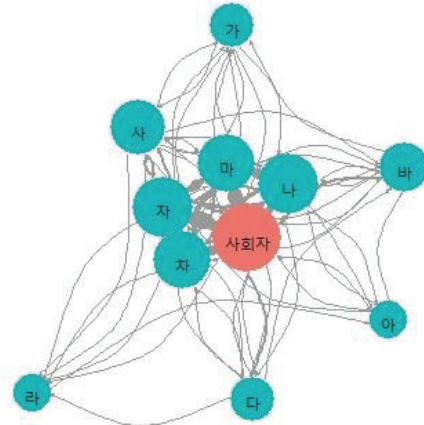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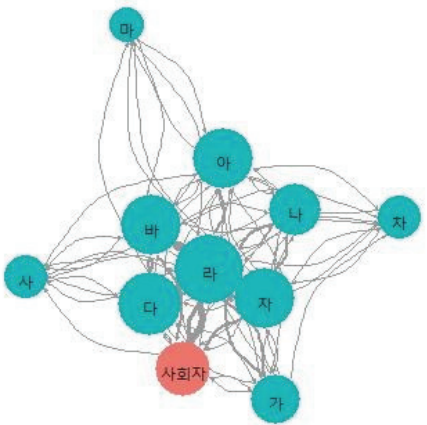
〈그림 25〉 25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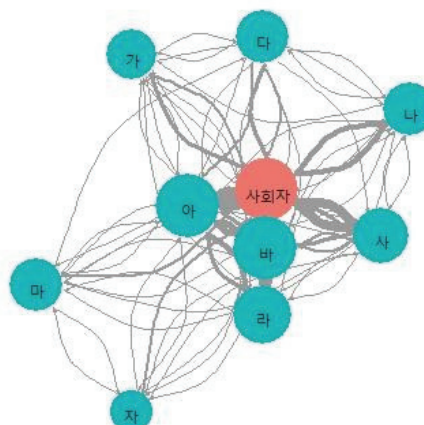
〈그림 26〉 26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27〉 27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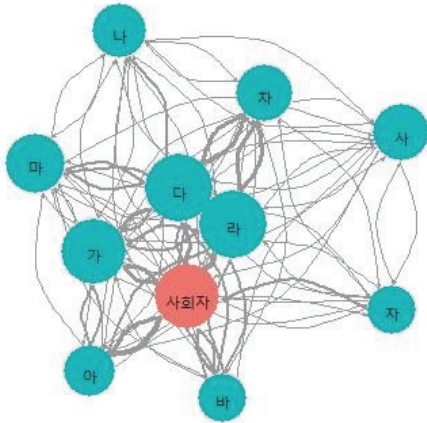


〈그림 28〉 28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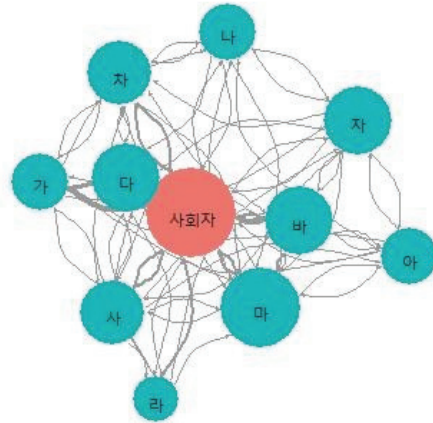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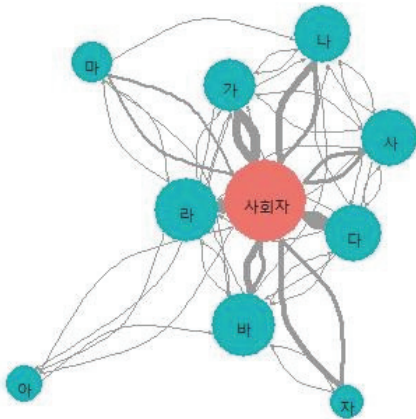
〈그림 29〉 29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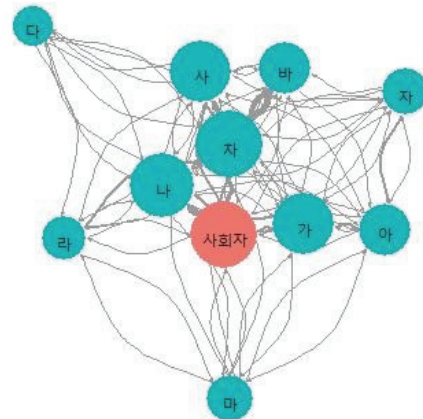
〈그림 30〉 30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31〉 31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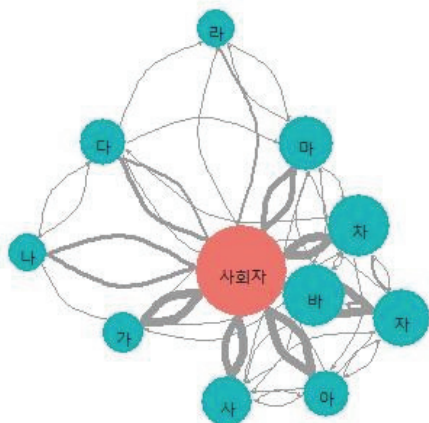


〈그림 32〉 32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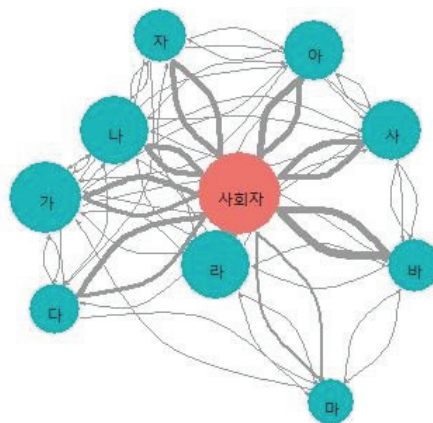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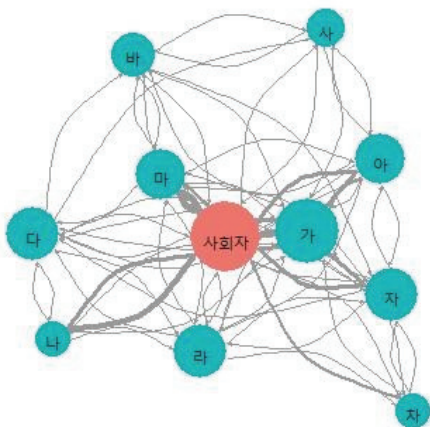
〈그림 33〉 33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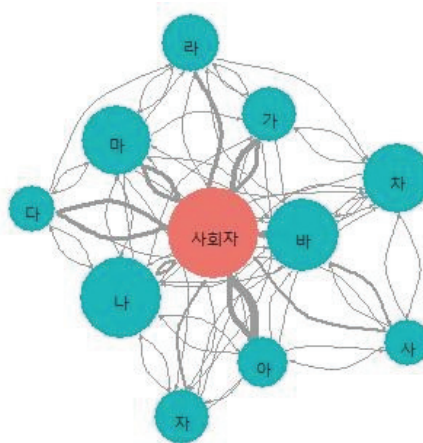
〈그림 34〉 34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35〉 36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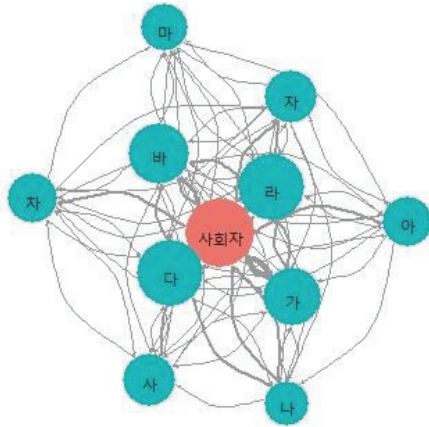


〈그림 36〉 38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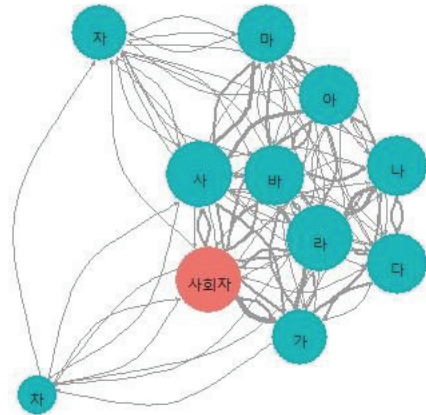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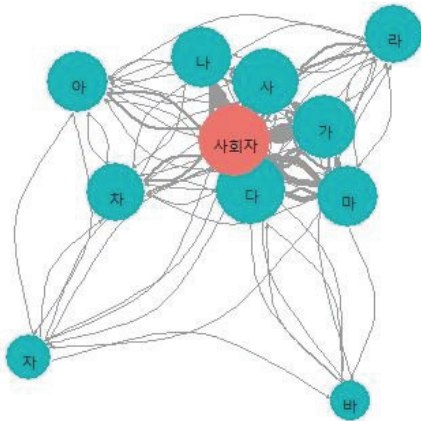
〈그림 37〉 39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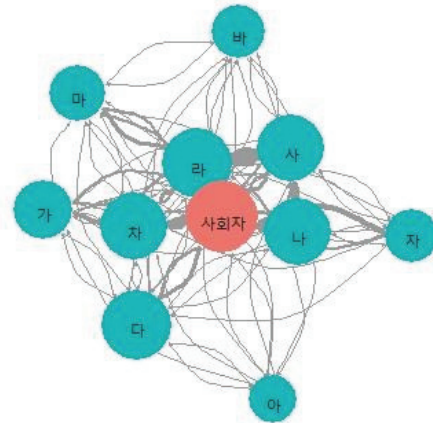
〈그림 38〉 40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39〉 41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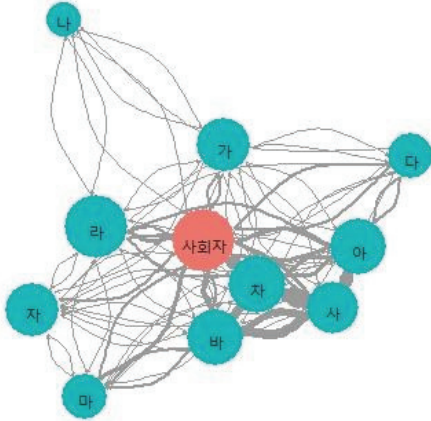


〈그림 40〉 44조 발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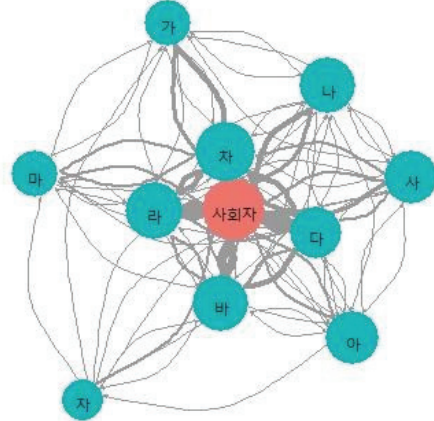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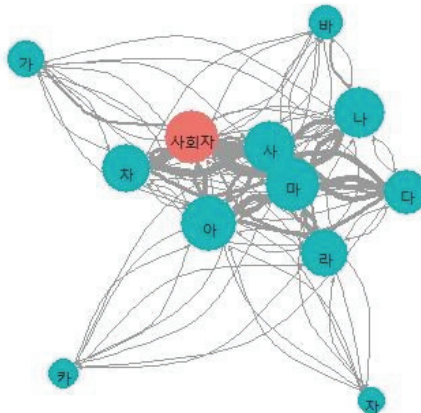
〈그림 41〉 45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42〉 46조 발언 네트워크



〈그림 43〉 47조 발언 네트워크



※ 두 발언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을수록 관계를 두껍게 표시